



생애소득에 기초한 조세재정정책의 수혜와 부담 추정 연구

2020. 12

오종현 · 신상화 · 성명재



생애소득에 기초한 조세재정정책의 수혜와 부담 추정 연구

2020. 12

오종현 · 신상화 · 성명재

서 언

가계는 소득세 등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국가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이전지출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지원하고 교육 및 의료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조세재정정책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최근 소득 불평등도와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조세재정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재분배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단기 횡단면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 이는 자료의 이용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전체 생애기간에 대해 조사한 미시자료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생애소득이 아닌 단기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생애소득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조세재정정책의 재분배 기능을 단기가 아닌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애주기가 있는 소득과 소비는 생애기간 동안 평탄화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와 소비세의 재분배 기능에 대한 평가가 단기소득 기준이냐 아니면 생애소득 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현금이전 중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현물이전에 해당되는 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수혜계층은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기 횡단면 분석의 경우 분석 시점의 인구 구성에 따라 각 제

도의 재분배 기능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반면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연령의 차이로 인한 효과를 제거하고 재분배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본 연구는 생애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각 가계의 생애기간에 대한 소득, 소비 등의 자료를 가상적으로 구축하는 방법론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 및 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모의실험 모형을 구축하여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다른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향후 발전시켜야 할 점도 상당부분 존재한다.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정들이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가정들을 보다 현실에 가깝도록 개선할 수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관찰되지 않는 자료들을 추정하기 위한 기법 또한 보다 정교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통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들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바탕으로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길 바란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오종현 연구위원과 충남대학교의 신상화 교수, 홍익대학교의 성명재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특히, 성명재 교수는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연령별 소득계층의 분포를 추정하였고, 신상화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오종현 연구위원은 가상패널자료를 기반으로 가계의 장단기 수혜 및 부담을 추정하여 비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저자들은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먼저 연구 착수단계부터 최종 출판단계까지 많은 검토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이화여자대학교의 송호신 교수, 한양대학교의 강성훈 교수, 기획재정부의 김상형 사무관, 그리고 본원의 윤성주, 김빛마로 박사께 감사드린다.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에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동료 박사들과 외부의 여러 전문가들께도 감사드린다. 최종 출판단계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

신 두 분의 익명의 심사자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과 정리에 도움을 주신 본원의 김평강 선임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나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다.

2020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목적

최근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 정부는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 확대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현물이전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복지지출에 대한 재원 마련과 함께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도 수차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수적이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개인 및 가계는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1년과 같은 단기소득을 기준으로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느냐 또는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기초연금의 경우 생애주기상 소득 수준이 낮은 65세 이상 노인계층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시점의 단기소득을 기준으로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면 기초연금의 재분배 효과는 크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아동수당의 경우 주로 생애주기상 경제활동이 활발한 가계에 지급되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작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의 차이로 인한 효과가 제거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단기소득을 기준으로 측정된 각 제도의 재분배 효과와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또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동일한 제도라도 이 제도가 어느 시점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미래 시점의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는 현재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소득재분배에 효과적인 제도들이 현재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앞에서 예로 든 기초연금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분배 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동수당의 중요성은 점차 축소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해 가계에 귀착되는 수혜 및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세재정정책이 단기 및 장기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여기서 단기소득은 단년도 소득을 의미하고, 장기소득은 생애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장단기소득 분포를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인구 및 가구구조가 변하는 미래 시점에 대해서도 비교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 포함된 제도로는 정책 대상이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들을 선별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공적연금이전 중에서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공적현물이전 중에서는 교육수혜와 의료수혜를 분석에 포함한다. 조세정책 중에서는 연령에 따라 과세기반에 차이가 있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분석에 포함한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는 재정학에서 전통적인 주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다만 특정 몇몇 제도들에 한정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조세재정정책의 종합적인 수혜 및 부담을 측정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성명재·박기백(2008), 성명재·전병목·전병힐(2008), 성명재·송헌재·전병목(2010), 박기백(2010), 오종현 외(2017)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단년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단기 횡단면 분석에 그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한 단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3.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생애소득 관점에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수혜-부담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세 및 재정지출 관련 제도들을 선정하여 장단기 재분배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한다.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현재 11차년도 조사자료까지 공표된 상황으로 각 개인 및 가구의 생애소득을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의 생애기간 전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각 가구(개인)의 생애기간에 대한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한다. 특히, 가상패널자료는 2017년 경제활동에 대해 조사한 재정패널자료를 기준으로 구축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장단기소득 분포 비교 시 단기소득 분포는 2017년의 소득 분포를 의미하고, 장기소득 분포는 2017년에 생존하는 가계의 생애소득에 대한 분포이다. 생애소득은 전체 생애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정의한다.

구축된 가상패널자료를 기준으로 가계에 귀착되는 수혜 및 부담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오충현 외(2017)가 구축한 수혜-부담 분석 모형을 가계의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확장한다. 이렇게 확장된 모형을 이용하여 단년도 소득 및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주요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여 비교한다.

또한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장단기소득 분포의 차이는 가상패널자료의 각 가구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다. 각 가구의 가중치는 통계청의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을 기준으로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래 가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

4. 주요 결과 및 정책시사점

분석결과 기초연금과 의료수혜와 같이 고령층이 주요 정책 대상인 제도는

생애 자료 기준 분석과 비교해 단기 횡단면 분석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과대추정되고, 아동수당과 교육수혜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층이 주요 정책 대상인 제도는 단기 횡단면 분석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및 가구구조가 변함에 따라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조세제도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역진적인 기능이 생애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소득과 소비지출 모두 단년도 자료보다 생애 자료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더 집중된 분포를 보이는데, 그 변화의 정도가 시장소득의 분포보다 소비지출의 분포가 더 작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의 경우 평탄화로 인하여 생애주기상의 변화가 소득보다 작다는 점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생애 자료에서 시장소득의 분배지표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지만 소비지출의 분배지표는 상대적으로 개선폭이 작아 소비지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세후소득의 분배지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재정정책 수립 시 소득재분배 효과는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때 소득재분배 효과는 단기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와 함께 생애 자료를 고려한 분석결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같이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을 단기 횡단면 자료만 의존한다면 생애주기상 고령층이 대상인 제도들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소득재분배 효과를 생애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단년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특정 시점마다 인구구조와 가구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 시점마다 소득재분배에 적합한 제도가 다를 수 있다.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고려한 6가지의 제도를 모두 반영하더라도 향후 고령화와 함께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가구구조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가구원 수가 1~2명인 핵가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고려한 6가지의 제도는 노인가구가 아닌 핵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망은 향후 1~2인 가구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장래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소득 취약계층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면 이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제도만으로는 조세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생계급여 등의 제도들이 핵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사회보장정책들이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 차

I. 서론	19
II. 장단기소득·소비·자산 분포	22
1.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22
가. 분석자료	22
나. 분석방법	22
2. 소득·소비·자산·부채 분포	25
가. 연령대별 가구구성 분포	25
나. 소득·소비·자산·부채 분포: 소득계층별 분포(단기)	27
다. 소득·소비·자산·부채 분포: 가구주 연령별 분포(단기)	36
라. 소득·소비·자산·부채 분포: 장기 분포	42
3. 연령-소득 분포(Age-Income Profile)의 특징	48
가. 개요	48
나. 가구주 연령별 소득·소비·적자가구 비율의 비교	53
다. 가구주 연령별 자산·부채 분포의 비교	55
라. 백분위수별 연령-소득 분포 궤적의 비교	57
4. 분배·분포지수: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64
가. 분배지수: 단기	64
나. 분배지수: 장기	68
다. 모의실험(Simulations)을 통한 생애지니계수의 추정	70
III. 가상패널자료 구축	75
1. 개요	75
2. 가상패널자료 생성을 위한 기초자료	76

3. 가상패널자료 생성	78
가. 연령-소득 자료의 구축	78
나. 가구원 정보 생성	79
다. 소득인정액의 추정	81
라. 직접세 납부액의 추정	82
마. 부가가치세 관련 소비액 추정	84
바. 현물급여 관련 변수	84
4. 가상패널자료 생성 결과	85
IV. 장단기 수혜 · 부담 분포	90
1. 분석 개요	90
2. 분석방법	91
3. 분석제도와 미시모의실험 개요	92
가. 공적현금이전	93
나. 조세제도	96
다. 공적현물이전	98
4. 조세재정정책의 장단기 효과 비교	102
가. 장단기소득 분포 비교	102
나. 수혜 및 부담	108
다. 분배지표: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118
5. 가구구조 변화와 조세재정정책	126
가. 분석 개요	126
나. 장래 인구 및 가구 추계	127
다. 수혜-부담 총량 변화	131
라. 분배지표 변화	137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153
참고문헌	156
부록: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한 소득·연령 소득계적	159

표목차

〈표 II-1〉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비중 추이 26

〈표 II-2〉 소득·소비·자산·부채 평균 추이 28

〈표 II-3〉 소득계층별 소득·자산·부채 분포 32

〈표 II-4〉 가구주 연령별 소득·소비·자산·부채 분포 39

〈표 II-5〉 장기 총소득계층별 소득·소비·자산·부채 분포 45

〈표 II-6〉 장기 총소득계층별 소득·소비·자산·부채 비중 점유비 분포 46

〈표 II-7〉 가구주 연령별 장기소득·소비·자산·부채 분포 47

〈표 II-8〉 적자가구 비율 추이 55

〈표 II-9〉 소득·소비지출·자산의 지니계수 추이
 (재정패널자료, 총소득 순위 기준) 66

〈표 II-10〉 소득·소비지출·자산의 지니계수 추이
 (재정패널자료, 자기변수 순위 기준) 67

〈표 II-11〉 장기 소득·소비·자산·부채 기준 지니계수·집중도계수 70

〈표 III-1〉 기초자료 내 활용 변수 77

〈표 III-2〉 소득인정액의 추정 82

〈표 III-3〉 직접세 납부액의 추정 83

〈표 IV-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93

〈표 IV-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요건 94

〈표 IV-3〉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94

〈표 IV-4〉 가구유형별 및 소득인정액별 기초연금액(국민연금 미수급자 가정) 94

〈표 IV-5〉 아동수당 제도 연혁 96

〈표 IV-6〉 아동수당 선정기준액(2018년) 96

〈표 IV-7〉 교육단계별 1인당 교육수혜 금액	99
〈표 IV-8〉 성별·연령대별 1인당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부담금(2017년)	100
〈표 IV-9〉 2017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1인당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01
〈표 IV-10〉 장단기 시장소득의 기초통계량	104
〈표 IV-11〉 시장소득의 장단기소득분위 비교	106
〈표 IV-12〉 단년도 소득분위 조건부 생애소득이 각 분위에 속할 확률	107
〈표 IV-13〉 소득분위별 수혜 및 부담(실제 단년도 자료)	112
〈표 IV-14〉 소득분위별 수혜 및 부담(가상 단년도 자료)	114
〈표 IV-15〉 소득분위별 수혜 및 부담(가상 생애 자료)	117
〈표 IV-16〉 시장소득과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119
〈표 IV-17〉 시장소득 대비 조정소득 지니계수 변화의 장단기 비교	120
〈표 IV-18〉 소득 및 소비 관련 항목의 10분위와 5분위 배수 비교	123
〈표 IV-19〉 제도 확대에 의한 지니계수 변화의 장단기 비교	125
〈표 IV-20〉 장래가구추계를 적용한 수혜-부담 총량 전망	133
〈표 IV-21〉 시장소득과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가상 단년도 자료)	138
〈표 IV-22〉 시장소득 대비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개선을 전망 (가상 단년도 자료)	139
〈표 IV-23〉 시장소득과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가상 생애 자료)	140
〈표 IV-24〉 시장소득 대비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개선을 전망(가상 생애 자료) ·	141

그림목차

[그림 II-1] 소득계층별 소득·자산 분포(2017년)	34
[그림 II-2] 소득계층별 소득·자산 비중 및 비중 상대비(총자산/총소득) 분포 (2017년)	35
[그림 II-3] 소득계층별 소득·부동산자산 비중 및 비중 상대비(부동산자산/총소득) 분포(2017년)	35
[그림 II-4] 소득계층별 소득·금융자산 비중 및 비중 상대비(금융자산/총소득) 분포(2017년)	36
[그림 II-5] 가구주 연령별 소득·소비·자산 분포(2017년 기준)	42
[그림 II-6] 가구주 연령별 소득·소비 및 적자가구 비율	54
[그림 II-7] 가구주 연령별 총자산·순자산·부채 분포	56
[그림 II-8]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07년 귀속분)	58
[그림 II-9]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08년 귀속분)	58
[그림 II-10]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09년 귀속분)	59
[그림 II-11]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10년 귀속분)	59
[그림 II-12]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11년 귀속분)	60
[그림 II-13]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12년 귀속분)	60
[그림 II-14]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13년 귀속분)	61
[그림 II-15]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14년 귀속분)	61
[그림 II-16]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15년 귀속분)	62
[그림 II-17]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16년 귀속분)	62
[그림 II-18]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17년 귀속분)	63
[그림 II-19] 가구소득백분위수별 최고소득 연령 분포(재정패널자료)	63
[그림 II-20] 가구총소득 지니계수 추이(재정패널자료 기준)	66
[그림 II-21]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소득 지니계수 추이(재정패널자료)	68
[그림 II-22] 가구주 연령별 단기소득·소비지출 및 생애소득 지니계수의 비교 · 74	

[그림 Ⅲ-1] 가구원 수 분포 비교	86
[그림 Ⅲ-2] 소득인정액과 직접세 납부액 분포 비교	87
[그림 Ⅲ-3] 소비자출액 분포 비교	87
[그림 Ⅳ-1] 성별·연령대별 1인당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부담금(2017년)	101
[그림 Ⅳ-2] 장단기소득 분포 비교	103
[그림 Ⅳ-3] 소득분위별 수혜 및 부담(실제 단년도 자료)	111
[그림 Ⅳ-4] 소득분위별 수혜 및 부담(가상 단년도 자료)	113
[그림 Ⅳ-5] 소득분위별 수혜 및 부담(가상 생애 자료)	116
[그림 Ⅳ-6] 시장소득과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119
[그림 Ⅳ-7] 시장소득 대비 조정소득 지니계수 변화의 장단기 비교	122
[그림 Ⅳ-8] 총인구 및 인구성장을	128
[그림 Ⅳ-9] 연령별 인구구조	128
[그림 Ⅳ-10] 연령별 인구구성비	129
[그림 Ⅳ-11] 총가구 및 가구증가율	129
[그림 Ⅳ-12] 가구원 수별 가구 구성비 추이	130
[그림 Ⅳ-13] 성·연령별 가구주 변화	130
[그림 Ⅳ-14] 공적현금이전 총량 전망	134
[그림 Ⅳ-15] 조세수입 총량 전망	135
[그림 Ⅳ-16] 공적현물이전 총량 전망	136
[그림 Ⅳ-17] 시장소득의 지니계수 전망	137
[그림 Ⅳ-18] 기초연금 반영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	143
[그림 Ⅳ-19] 의료수혜 반영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	144
[그림 Ⅳ-20] 아동수당 반영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	146
[그림 Ⅳ-21] 교육수혜 반영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	147
[그림 Ⅳ-22] 소득세 반영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	149
[그림 Ⅳ-23] 부가가치세 반영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	150
[그림 Ⅳ-24] 전체 제도를 반영한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	152

부록 그림목차

[부록 그림 1] 가구주 연령별 가구총소득 백분위수 궤적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1982년)	159
[부록 그림 2] 가구주 연령별 가구총소득 백분위수 궤적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1992년)	160
[부록 그림 3] 가구주 연령별 가구총소득 백분위수 궤적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2002년)	160
[부록 그림 4] 가구주 연령별 가구총소득 백분위수 궤적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2006년)	161
[부록 그림 5] 가구주 연령별 가구총소득 백분위수 궤적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2010년)	161
[부록 그림 6] 가구주 연령별 가구총소득 백분위수 궤적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2014년)	162

I. 서론

최근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 정부는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 확대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현물이전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복지지출에 대한 재원 마련과 함께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도 수차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수적이다.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는 재정학에서 전통적인 주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다만 특정 몇몇 제도들에 한정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조세재정정책의 종합적인 수혜 및 부담을 측정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성명재·박기백(2008), 성명재·전병목·전병힐(2008), 성명재·송헌재·전병목(2010), 박기백(2010), 오중현 외(2017)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단년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 경우 정책시사점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노인 계층에 대한 복지지출 확대 등과 같이 단편적일 가능성 높다. 따라서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단기 횡단면 분석에 그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한 단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양한 제도들이 생애기간의 서로 다른 시점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애주기 단계별로 각 제도로 인한 영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기 횡단면상에서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생애소득 기준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소득은 생애주기상 시점 간의 차이가 크지만, 소비는 소비평탄화로 인하여 소득보다는 생애주기상 시점 간의 편차가 작은 특성이 있어, 소득세와 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시 단기소득과 생애소득 중 어느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의 정도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최근 도입되거나 확대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은 생애주기의 특정 시점에 지급되는 복지 혜택으로 단기소득 기준과 생애소득 기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르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와 가구구조가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애주기별 차별적인 복지지출에 대한 재정소요 또한 인구구조와 함께 급격히 변동될 수 있다.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단기 횡단면 분석에 한정하더라도 이러한 재정소요의 상대적인 크기는 분석 시점별로 각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르게 측정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가령, 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아동수당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경우 유의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아동의 비중이 감소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아동수당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 유사한 이유로 고령화는 기초연금의 중요성을 점차 증가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생애소득 관점에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수혜·부담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세 및 재정지출 관련 제도들을 선정하여 장단기 재분배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공적연금이전 중에서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을 공적연금이전 중에서는 교육수혜와 의료수혜를 분석에 포함한다. 조세정책 중에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분석에 포함한다. 또한 장래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 시점별 각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한다.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현재 11차년도 조사자료까지 공표된 상황으로 각 개인 및 가구의 생애소득을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의 생애기간 전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각 가구(개인)의 생애기간에 대한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생애소득은 가구(개인)의 생애기간 동안 매 연령 시점별 소득의 평균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가구단위의 분석을 수행하는데, 재정패널조사에서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6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¹⁾한다. 재정패널자료에 포함된 각 가구들은 그 코호트가 다양한데,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각 코호트에 적용된 과거의 제도를 일일이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닌 현재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한다. 즉, 현재를 정상상태로 가정하여 현재의 조세재정정책이 모든 가계의 생애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생애기간 동안 가계의 수혜 및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는 전영준(2020)과 같이 과거의 제도 변화로 인한 코호트별 순조세 부담의 변화를 분석한 세대 간 회계와는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논의한다. 제Ⅱ장에서는 재정패널자료를 통해 소득, 소비, 자산, 부채의 단기와 장기(생애) 분포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제Ⅱ장에서 추정된 연령별 소득궤적을 토대로 수혜-부담 분석 모형에 필요한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한다. 제Ⅳ장에서는 제Ⅲ장에서 구축된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단기와 장기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9. 12., p. 3

Ⅱ. 장단기소득 · 소비 · 자산 분포

1.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가. 분석자료

본장에서는 소득 · 소비 · 자산 · 부채 분포와 기간별 · 기간 간 결합분포와 분포 이동성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NaSTaB) 1~11년차 원시자료를 사용한다. 일부 비교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1982~2014년)를 분석한 연령-소득백분위수별 횡단면 결합분포는 참고적으로 부록에 제시하였다.

재정패널자료는 소득 · 소비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항도 비교적 자세하게 수집 · 제공하고 있다. 가계동향자료 등 일부의 설문 조사자료의 경우에는 조사목적 등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 관련 정보(잔고 기준)를 제공해주지 않지만,²⁾ 재정패널자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나. 분석방법

장 · 단기 분포분석을 위해 재정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횡단면 단기 분포 및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장기 · 생애분포를 분석한다. 분포분석에 기준점이 되는 기준은 (총)소득 기준의 10개 분위(deciles)를 기준으로 한 소득계층별 분포와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한 연령별 분포를 병렬적으로 분석한다.

단기 분포(연간 기준)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 즉 소득 · 소비 · 자산 ·

2) 성명재 · 김현숙(2006)의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자료에 부동산 관련 재산세 과세자료를 접목(matching)시켜 소득 · 자산의 결합분포를 생성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회성에 그쳤으며, 가계동향조사자료의 경우 자산 · 부채 정보는 조사 · 제공하지 않는다.

부채 등의 경상치(nominal values)를 사용하여 분위별 또는 연령집단별 가구평균치 등을 기준으로 분포를 추정한다.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가 횡단면 자료가 아닌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구축하였던) 최초시점(재정패널자료의 경우 자료가 구축된 연도는 2008년, 소득 귀속연도는 2007년)의 횡단면 특성을 보유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표본관측치 탈락(attrition of observations) 현상이 발생한다. 동 현상이 무작위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발생하면서 점차 횡단면 특성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년 본래 가구로부터 독립한 분가가구 중 일부가 표본에 포함되면서 부분적으로 횡단면 특성을 보정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횡단면 특성이 복원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분가가구를 표본에 포함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패널자료의 횡단면 특성은 점차 괴리가 더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패널자료의 경우 횡단면 가중치 보정을 통해 표본관측치 탈락에 따른 표본선택편의를 어느 정도 보완하기는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다. 재정패널자료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 특성을 분석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그런데 재정패널자료는 11차년도 자료의 경우 원표본 유지율이 73.8%(사망·해외거주(이주) 제외 시 77.1%)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다.³⁾ 그러므로 패널자료 유지율 측면에서 볼 때, 재정패널자료는 다른 패널자료에 비해서는 비교적 횡단면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분석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한다. 한 가지는 전통적인 패널자료 분석방법으로, 동일 가구의 다년도 자료를 연결하여 장기 분포를 생성하는 것이다(예: 성명재, 2011a 등). 다른 한 가지는 횡단면 자료(또는 패널자료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해당) 등을 사용하되 동일 연령집단 내에서 (소득)백분위수 기준의 위계수(percentile ranks)가 동일한 관측치들의 값을 연결하여 장기 분포를 생성하는 방법이다(예: 성명재, 2003; 2005 등). 두 번째 방법으로 장기 분포를 생성하는 이유 중 하나는, 패널자료가 이용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9. 12., pp. 7~8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이용가능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표본관측치 탈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표본선택편의가 가중치 보정으로도 교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경우에 분석결과의 일치성(consistency)을 담보할 수 없어 대안분석 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분석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일반적인 가구(또는 개인)의 특성 중에서 소득·소비·자산·부채 수준 등에 대한 결정요인(determinants)으로서 성(gender), 연령, 학력, 가구규모(가구원 수), 직업, 능력, 건강상태, 초기 재산(자산)상태 등과 같이 개인 또는 가구에 특화되어 장기간 지속되는 변수들은 한번 설정되면 단기간 내에 특성이 변화하지 않고 지속성(persistency)을 지니는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일한 소집단(예: 연령집단) 내에서 어떤 시점에서 특정한 (소득)위계수를 지닌 가구(또는 개인)가 다음 기에 기대할 수 있는 (소득)위계수는 평균적으로 전년도의 위계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논의의 근거는 성명재(2005)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가설검정을 통해 연령효과를 통제한 상태, 즉 동일 연령집단으로 비교대상을 한정된 상태에서 전년도 소득백분위 위계수를 조건부로 사용한 익년도 소득백분위 위계수의 기댓값은 전년도 위계수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의 결론은 (거의) 모든 연령집단과 (거의) 모든 소득백분위 위계수에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명재(2005)의 연구결과를 원용하여, 위에서 설명한 장기 분석방법 중 두 번째 방법에 근거하여 장기 연령-소득 결합분포를 생성하여 분석한다.

소득은 유량변수(flow variable)인 반면 자산이나 부채 등은 저장변수(stock variable)이기 때문에 소득·자산 등의 결합분포를 분석함에 있어 한 가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량변수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값이 계속 누적(축적)되지만, 저장변수의 경우 특정 시점(time point)에서의 잔고(balance) 값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분포를 고려하더라도 각 기말(또는 기초) 시점의 잔고를 누적하거나 합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소득·자산을 결합한 장기결합분포를 볼 때 소득은 단기 값들을 합산하지만 자산의 경우에는 각기(말)의 값을 합산하거나 평균하지 않고 분석 대상 기간의 마지막 시점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분배지수(소득불균등지수)로는 지니계수를 사용한다.

2. 소득·소비·자산·부채 분포

본 절에서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연령별로 소득·소비·자산·부채에 대한 개별분포 및 결합분포, 장·단기 분포 등을 분석한다. 재정패널자료에 대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정보는 별도의 소개 없이 아래의 본문에서 혼합하여 설명한다.

가. 연령대별 가구구성 분포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구조는, 낮은 연령대의 인구·가구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가구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 즉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이는 재정패널자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II-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가구의 가구주 연령분포는 젊은 연령대의 비중이 현격하게 작은 반면 높은 연령대로 갈수록 누적적으로 가구 비중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런 패턴은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먼저 가구주 연령이 20대 및 30대인 젊은 가구의 비중은 절대수준이 매우 낮고, 시계열적으로 비중이 빠르게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젊은 연령대의 가구 비중은 20대의 경우 최대 5% 이내, 30대의 경우에도 최대 10%대 초반 수준이었다가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가구 비중이 낮은 이유는, 20대 및 30대 초반 연령대는 생애주기상 아직 부모세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독립적인 가구를 생성하기 시작하는 연령대로서 아직 완전히 가구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나이가 어릴

수록 인구 비중은 물론이고 절대인구수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젊은 연령대에서 새로 생성되는 가구의 절대수가 감소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아울러 만혼(晩婚)현상이 증가하는 것도 젊은 연령대의 가구 비중이 작아지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 밖에 평균수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령자들의 사망률이 낮아지고 따라서 고령자 가구비율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반사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가구 비중이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비중은 2008년 16.3%에서 2013년 24.4%, 2018년 27.1%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가구 비율이 급증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젊은 연령대 인구·가구의 절대수 감소와 노인인구의 절대수 증가 및 장수화 등에 따른 노인사망률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노인가구 비율의 증가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1〉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비중 추이

(단위: %)

연도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계
2008	1.67	6.05	10.26	13.89	13.17	13.30	11.42	7.84	6.07	16.33	100
2009	1.48	5.26	10.47	13.54	13.70	12.67	12.12	7.88	5.96	16.93	100
2010	0.85	4.71	10.06	14.58	12.95	12.69	12.60	7.89	6.25	17.42	100
2011	0.64	3.95	10.98	13.35	13.44	12.28	12.74	8.36	6.18	18.07	100
2012	0.84	3.81	10.32	12.92	12.77	11.95	12.32	9.60	5.83	19.62	100
2013	0.53	3.29	8.15	11.36	14.31	13.22	8.99	8.77	6.93	24.44	100
2014	0.74	3.22	7.43	10.99	13.75	13.75	8.90	9.10	7.00	25.13	100
2015	0.66	3.41	7.20	9.62	13.93	13.75	8.98	9.36	6.79	26.30	100
2016	0.83	3.22	7.39	9.74	12.55	14.02	9.00	9.40	7.38	26.46	100
2017	0.97	3.06	7.58	9.13	12.54	14.73	8.30	9.47	7.81	26.41	100
2018	1.32	3.50	6.62	9.57	12.09	14.01	8.28	9.05	8.43	27.12	100

주: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연령, 가구원 수, 성별 등의 가구 특성 정보는 조사연도를 기준으로 수집되고, 소득·소비·자산·부채 등의 정보는 전년도 연간실적 또는 전년도말 시점 잔고(잔액) 등을 기준으로 자료가 수집됨. 그러므로 재정패널자료 1~11차 연도의 경우 가구 특성 변수의 귀속연도는 2008~2018년이고, 소득 등의 정보자료의 귀속연도는 2007~2017년임에 유의하기 바람

자료: 제1~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나. 소득·소비·자산·부채 분포: 소득계층별 분포(단기)

1) 개요

〈표 II-2〉는 재정패널자료의 소득·소비·자산·부채 상황을 가구 평균치로 요약하여 보여준다. 참고적으로 소비성향(소비/소득 비율), 가구(총)소득이 가구소비지출에 미달하는 적자가구 비율, 부채가 총자산보다 많은 순부채가구 비율 등도 함께 보여준다.

2007~2017년 동안 가구소득은 평균 3,265만원에서 4,711만원으로 약 44%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가구소비는 평균 1,825만원에서 2,803만원으로 약 54% 증가하였다. 소비성향은 55.9%에서 59.5%로 소폭 상승하였다. 소비성향의 경우 변화의 폭이 작기 때문에 분석 대상 기간 전체적으로는 50% 후반대에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총자산의 경우에는 1억 7,557만원에서 2억 8,404만원으로 48.1% 증가하여 소득, 소비와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였다. 다만 부채의 경우에는 3,445만원에서 2,716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성명재(2020)에 의하면, 민간소비지출의 GDP 대비 비중을 소비성향으로 정의할 경우(국민계정 기준), 2007~2017년 동안 소비성향은 52.48%에서 47.55%로 감소하였다. 비록 시계열은 짧지만 성명재(2020)에서 가계동향조사자료를 기준으로 추정된 가구의 평균소비성향도 2007년 61.38%에서 2014년 55.18%로 하락하였다. 그런데 재정패널자료에 의하면 이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패널자료의 경우에는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50%대 후반 수준에서 약간의 등락을 보일 뿐 소비성향의 수준 하락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물론 가계설문자료와 국민계정자료는 서로 자료의 포괄범위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수준에 대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변화방향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차이는 간접적으로 재정패널자료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횡단면 특성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가구소비지출수준이 가구(총)소득보다 많은 적자가구의 비율은 2007년 16.6%에서 2012년 13.75%, 2017년 11.99%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부채가 총자산보다 많은 순부채가구의 비율도 같은 기간 7.57%, 3.57%, 2.18%로 빠르게 감소하였다.

〈표 II-2〉 소득·소비·자산·부채 평균 추이

(단위: 만원, %)

연도	소득 (A)	소비 (B)	소비성향 (B/A)	적자가구 비율(A<B)	총자산 (C)	순자산	부채 (D)	순부채가구 비율(C<D)
2007	3,265	1,825	55.89	16.61	21,001	17,557	3,445	7.57
2008	3,360	2,104	62.60	20.46	20,919	17,350	3,570	5.24
2009	3,510	2,078	59.80	18.27	21,819	18,331	3,488	5.42
2010	3,878	2,183	56.31	12.64	24,296	20,350	3,946	4.02
2011	3,843	2,277	59.26	13.15	23,102	19,273	3,829	4.15
2012	3,963	2,299	58.02	13.75	23,803	19,744	4,060	3.57
2013	4,027	2,407	59.76	13.82	25,133	21,074	4,059	3.61
2014	4,266	2,471	57.93	12.97	25,918	21,939	3,979	3.25
2015	4,416	2,639	59.77	11.40	27,404	23,438	3,967	2.89
2016	4,649	2,710	58.31	12.09	28,219	24,179	4,040	2.84
2017	4,711	2,803	59.50	11.99	31,120	28,404	2,716	2.18

주: 소득, 소비, 자산, 부채 등 귀속연도 기준

자료: 제1~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2) 소득계층별 분포

〈표 II-3〉은 2007~2017년 기간 동안 소득 10분위별로 소득(시장소득, 총 소득), 총자산, 부채의 가구당 평균값 추정치를 보여준다. [그림 II-1]~[그림 II-4]는 2017년을 특정하여 소득계층(분위)별 소득·자산 분포(총자산, 부동 자산, 금융자산)와 소득계층별 소득·자산의 점유비중 및 양자 사이의 계층별 점유비의 상대비 분포에 대한 추정결과를 집약하여 보여준다. 소득분위별 평균값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만, 〈표 II-3〉으로부터 각각의 변수값이 시계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일부 분포패턴의 특징을 추측할 수 있으나, 해당 표에는 매우 많은 숫자가 나열되어 있어 직

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본 항에서는 [그림 II-1]~[그림 II-4]를 중심으로 각종 분포 특성을 살펴본다.

[그림 II-1]은 2017년 현재 소득계층별 소득(시장소득, 총소득)과 총자산 분포를 보여준다. 총소득은 시장소득에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므로 모든 계층에 있어 전자가 후자보다 절댓값이 조금씩 더 크다.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규모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총자산의 경우에도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대체로 총자산 규모가 더 크지만 국지적·예외적으로 3~4분위와 6~7분위에서는 낮은 소득분위에 비해 가구당 평균 총자산액이 조금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총자산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고소득층으로 이행하더라도 총자산액이 단조증가함수(monotonically increasing function)에서 조금 벗어난 형태를 보이는 것은 소득과 자산 축적 사이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높은 수준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특징은 [그림 II-2]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II-1]이 소득계층별 가구소득 및 가구총자산액의 절대액 평균분포를 나타낸다면 [그림 II-2]는 절대규모 대신 각 변수 유형 내에서 소득분위별 점유 비중을 나타낸다. 횡축이 총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정렬·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점유비를 연결한 곡선이 양(+)의 기울기를 가진다면 총소득과 해당 변수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반대로 음(-)의 기울기를 가진다면 해당 변수와 총소득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II-2]에서는 시장소득과 총자산 모두 소득분위별 점유비 곡선이 양(+)의 기울기를 가지므로 두 변수 모두 총소득과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II-3]과 [그림 II-4]는 총자산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즉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분해하여 [그림 II-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자산 결합분포(비중 및 비중 상대비)의 추정치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비록 절대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총자산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득계층별 분포구조를 논함에 있어 누진도(또는 역진도)의 크기에 따라

분포의 모습을 누진적(progressive) 분포, 중립적(neutral 또는 proportional) 분포, 역진적(regressive) 분포의 3가지 경우로 구분하기도 한다. 각각의 경우를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탄력성의 관점에서 어떤 변수의 소득탄력성의 크기 1을 기준으로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해당 변수의 분포구조가 소득에 대해 누진적이라고 하고, 1이면 중립적, 1보다 작으면 역진적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방식으로 분포구조를 정의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소득과의 상관관계가 양(+)이라는 것과 분포구조가 누진적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분포의 누진도 여부는 탄력성의 값 1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인 반면, 상관관계의 부호(sign)는 탄력성의 값 0을 기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상관관계가 음(-)이면 분포구조는 항상 역진적이다. 그런데 상관관계가 양(+)이더라도 분포구조는 역진적일 수 있다. 만약 탄력성의 부호가 양(+)이지만 절댓값이 1보다 작으면 상관관계는 여전히 양(+)이지만 분포구조는 (소득)역진적이기 때문이다. 상관관계가 양(+)이면서 동시에 소득탄력성 또한 1보다 큰 경우에만 분포구조가 누진적이 되어 두 가지 조건의 양립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누진분포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포구조는 역진적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2]에서 점선으로 연결하여 표시한 곡선은 소득분위별 총자산 점유비를 총소득 점유비로 나눈 상대비를 나타낸다. 소득분위별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2017년 현재, 총자산 보유비중/총소득 비중의 상대비는 1분위의 경우 3.20(배), 4분위 1.10(배), 7분위 0.83(배), 10분위 0.85(배)로,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이행할수록 동 상대비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보유 비중/총소득 비중의 상대비 곡선을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각각 구분한 [그림 II-3]과 [그림 II-4]를 보면 두 가지 자산유형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총자산을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분할한 경우에도 소득분위 전체적으로 동 비중의 상대비 곡선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우하향하는 패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상위 10%에서 금융자산 점유비(30.80%)가 (총)소득 점유비(28.95%)보다 높아 상대비가 1.17배로 1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부동산자산의 경우 동 비율이 0.80배(총자산은 0.85배)로 1보다 작은 것과 대비된다. 부동산자산(총자산)의 경우는 물론이고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소득 7분위 이상의 고소득분위에서는 공통적으로 동 상대비가 1보다 작다. 다만 유독 금융자산의 경우에 10분위에서만 1보다 큰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생애주기상 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가 대체로 40대 후반~50대 초·중반인 반면 자산(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공통, [그림 II-5] 참조)의 경우에는 60대 초반에 자산 보유규모가 정점에 도달하는 등 소득과 (부동산)자산 사이에 생애주기 패턴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런 차이로 인해 총소득 기준 최상위 10% 계층에서 총자산과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소득 비중보다 작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소득계층별로 최고소득층에서 현금흐름(cash flow)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는 점과 그에 따라 부동산자산에 비해 유동성(liquidity)이 높은 금융자산의 비중이 소득 비중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총자산과 총소득의 소득분위별 비중의 상대비 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해당 분위 총자산 보유 비중이 소득 비중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그 값이 1보다 작으면 해당 분위의 총자산 보유 비중이 소득 비중보다 작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2]에서 두 점유비의 상대비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저소득일수록 총자산 비중이 소득 비중보다 더 크고, 반대로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그림 II-1]에서 보듯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총자산 규모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므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평균적으로 총자산 규모도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림 II-2]에서 보듯이 저소득층(분위)에서 고소득층(분위)로 이행할수록 비중 상대비의 값이 작아지므로 고소

득층으로 이행할수록 총자산의 절대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총자산의 증가속도가 소득의 증가속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총자산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림 II-2]는 총자산이 소득에 대해 양(+)⁴⁾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대체로 같은 방향에서 움직이지만, 분포의 패턴은 역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⁴⁾

〈표 II-3〉 소득계층별 소득·자산·부채 분포

(단위: 만원 배)

시장소득												
연도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 (B/A)
2007	185	499	1,122	1,658	2,225	2,703	3,352	4,249	5,413	9,080	3,049	49.11
2008	190	467	1,028	1,616	2,158	2,703	3,449	4,309	5,537	9,337	3,079	49.26
2009	115	569	1,125	1,762	2,281	2,877	3,599	4,378	5,687	9,485	3,187	82.16
2010	173	631	1,287	1,907	2,489	3,175	3,906	4,927	6,237	10,317	3,504	59.61
2011	288	577	1,237	1,851	2,416	3,111	3,809	4,884	6,307	10,514	3,499	36.55
2012	129	451	1,130	1,677	2,322	2,993	3,915	5,009	6,416	11,262	3,530	87.51
2013	204	494	1,118	1,730	2,342	3,161	4,041	5,056	6,597	11,112	3,586	54.50
2014	144	479	1,175	1,877	2,469	3,294	4,264	5,288	6,754	11,283	3,702	78.23
2015	130	521	1,186	1,973	2,558	3,393	4,353	5,559	7,188	12,002	3,886	92.33
2016	141	536	1,283	2,034	2,722	3,504	4,549	5,757	7,544	12,967	4,104	91.73
2017	157	558	1,332	2,073	2,839	3,632	4,711	6,000	7,543	12,627	4,147	80.33

4)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안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자산)분포는 소득에 대해 양(+)⁴⁾의 상관관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재산(주로 부동산자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재산세의 경우 양(+)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재산세 분포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재산세가 양(+)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산(자산)과 소득 사이의 상관관계가 비록 양(+)⁴⁾이라고 하더라도 소득탄력성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재산세의 경우에는 음(-)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재산세를 누진과세하면 일반적으로 재산세 분포의 소득탄력성이 커지므로 역진성이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재산세의 누진과세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여전히 음(-)⁴⁾일 수 있다. 만약 재산세의 누진과세구조가 충분히 크게 강해서 재산세 분포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커진다면 재산세 과세를 통해서도 양(+)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명재·김현숙(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소하게 음(-)⁴⁾의 값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재산세가 누진과세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의 소득탄력성은 1에 조금 못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II-3〉의 계속

(단위: 만원, 배)

총소득												
연도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 (B/A)
2007	276	837	1,353	1,883	2,385	2,907	3,556	4,426	5,612	9,408	3,265	34.04
2008	323	807	1,297	1,859	2,398	2,972	3,682	4,543	5,854	9,868	3,360	30.57
2009	362	905	1,437	1,997	2,569	3,197	3,845	4,715	6,067	10,008	3,510	27.62
2010	460	1,027	1,602	2,184	2,809	3,489	4,223	5,216	6,634	11,141	3,878	24.22
2011	424	994	1,554	2,126	2,715	3,444	4,199	5,150	6,705	11,119	3,843	26.25
2012	431	930	1,504	2,070	2,678	3,417	4,302	5,388	6,894	12,014	3,963	27.89
2013	439	967	1,529	2,130	2,764	3,569	4,476	5,551	7,033	11,813	4,027	26.88
2014	469	1,012	1,607	2,247	2,969	3,726	4,637	5,747	7,364	12,888	4,266	27.48
2015	555	1,086	1,701	2,347	3,050	3,884	4,821	6,018	7,677	13,016	4,416	23.44
2016	536	1,148	1,794	2,465	3,192	3,987	5,001	6,271	8,035	14,057	4,649	26.23
2017	602	1,193	1,884	2,555	3,320	4,172	5,138	6,422	8,184	13,640	4,711	22.66
총자산												
연도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 (B/A)
2007	10,691	10,028	11,458	10,580	16,878	15,923	20,488	25,243	30,670	58,043	21,001	5.43
2008	9,011	9,907	10,253	13,525	14,902	17,194	22,032	23,032	33,056	56,282	20,919	6.25
2009	9,102	11,988	10,655	11,852	15,691	18,548	22,796	27,286	32,608	57,697	21,819	6.34
2010	10,496	11,562	10,906	14,653	18,264	20,308	22,640	30,198	41,020	62,967	24,296	6.00
2011	9,369	11,839	12,193	14,441	17,187	19,953	22,289	27,554	35,485	60,715	23,102	6.48
2012	7,810	12,145	13,520	15,693	17,003	21,314	26,908	27,270	36,379	59,999	23,803	7.68
2013	10,225	13,214	14,781	14,989	19,263	21,531	23,316	30,635	37,939	65,425	25,133	6.40
2014	8,662	13,551	17,330	16,107	19,635	24,058	29,908	28,872	38,144	62,950	25,918	7.27
2015	11,241	15,722	16,449	15,642	20,427	23,872	27,689	32,819	36,474	73,675	27,404	6.55
2016	11,934	14,653	17,541	17,324	21,630	24,070	26,778	32,266	43,327	72,658	28,219	6.09
2017	12,714	17,533	18,942	18,592	23,502	29,088	28,257	36,793	49,277	76,491	31,120	6.02

〈표 II-3〉의 계속

(단위: 만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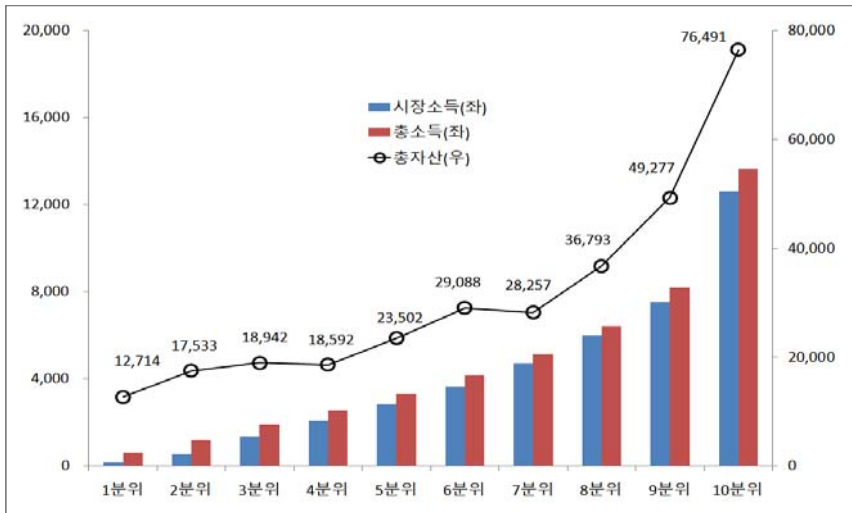
부채												
연도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 위배수 (B/A)
2007	1,476	1,364	1,991	2,480	2,850	2,182	3,156	4,700	5,625	8,620	3,445	5.84
2008	1,740	1,504	1,326	2,294	2,947	3,127	4,007	4,295	6,140	8,319	3,570	4.78
2009	1,521	1,936	1,699	2,278	2,284	2,929	3,982	4,171	5,368	8,715	3,488	5.73
2010	1,506	1,722	1,684	2,559	2,864	3,593	3,388	5,188	7,520	9,443	3,946	6.27
2011	1,433	1,265	1,828	2,076	2,375	3,177	4,273	5,136	6,764	9,968	3,829	6.96
2012	1,049	1,645	2,273	2,648	2,457	2,883	4,330	5,052	7,012	11,252	4,060	10.73
2013	1,291	1,280	2,139	1,791	2,996	2,660	3,455	5,741	8,797	10,436	4,059	8.08
2014	948	1,134	1,936	1,995	2,675	3,880	4,767	5,099	7,792	9,572	3,979	10.09
2015	1,226	1,318	1,837	1,958	2,692	3,033	3,811	4,609	7,071	12,109	3,967	9.88
2016	952	1,200	1,735	1,758	2,520	3,937	4,637	5,102	7,064	11,489	4,040	12.06
2017	832	658	1,129	1,405	1,861	2,884	3,482	3,848	4,868	6,196	2,716	7.44

주: 소득, 소비, 자산, 부채 등 귀속연도 기준

자료: 제1~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I-1〉 소득계층별 소득·자산 분포(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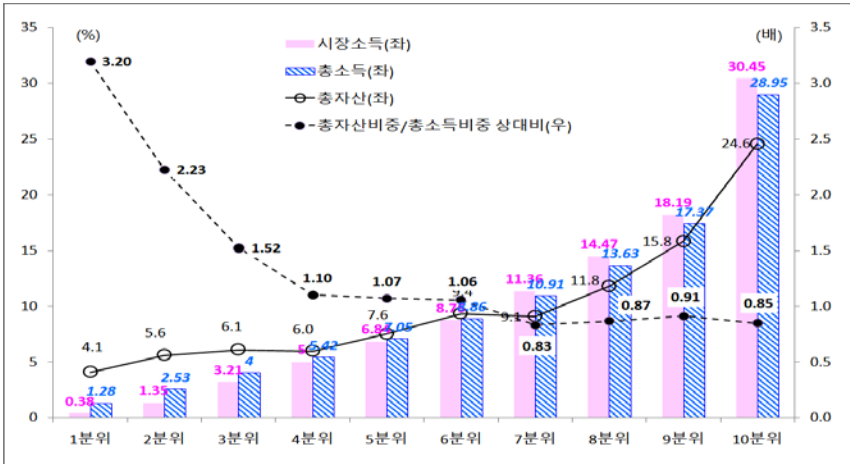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제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I-2] 소득계층별 소득·자산 비중 및 비중 상대비
(총자산/총소득) 분포(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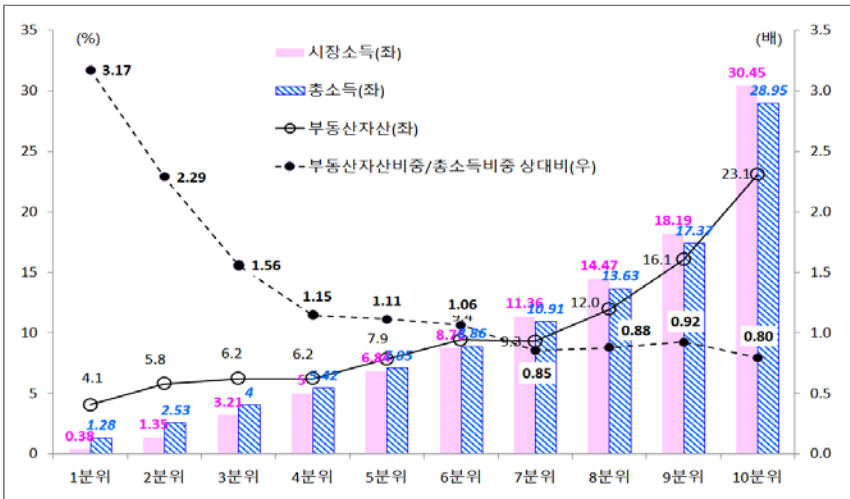
(단위: %, 배)



자료: 제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I-3] 소득계층별 소득·부동산자산 비중 및 비중 상대비
(부동산자산/총소득) 분포(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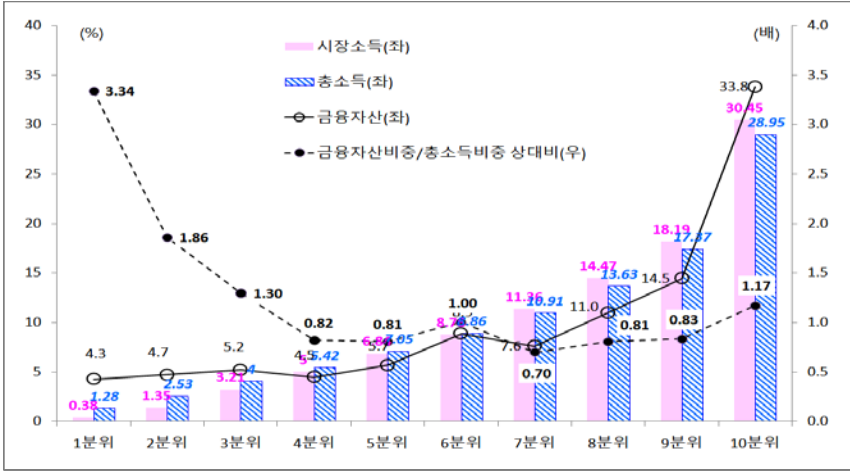
(단위: %, 배)



자료: 제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I-4] 소득계층별 소득·금융자산 비중 및 비중 상대비 (금융자산/총소득) 분포(2017년)

(단위: %, 배)



자료: 제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다. 소득·소비·자산·부채 분포: 가구주 연령별 분포(단기)

〈표 II-4〉는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5세 단위로 묶어 모두 10개의 소집단을 생성하고 각각에 대해 소득(시장소득, 총소득), 소비지출, (총)자산, 부채의 분포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표로는 구체적인 정보를 도출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5세 단위 연령 집단별로 소득·소비·자산 분포를 분류하고 2017년의 소득·소비·자산 분포를 [그림 II-5]로 형상화한 것을 각각 비교한다.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청년기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서 소득·소비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중년기 또는 장년기 초반에 정점에 도달한 다음 이후 연령대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생애주기소득·소비 곡선은 연령에 대해 위로 볼록한 역U자 형태의 곡선구조를 가진다. 두 곡선의 곡률(curvature)은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적으로는 생애소비곡선의 곡률이 완만하고 생애소득곡선의 곡률이 더 큰 구조를 지닌다고 한다. 따라서 청년기 초기와 노년기에는 소

비가 소득보다 많아 음(-)의 저축을 하는 경향이 있고, 중·장년기에는 소득이 소비를 초과하여 양(+)의 저축을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생애주기상 양(+) 또는 음(-)의 저축 여부는 금융시장이 완전하여 저축·대부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만약 금융시장이 불완전하여 저축과 대출이 비대칭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위의 생애주기가설에서 얘기하는 형태의 생애소득·생애소비 패턴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II-5]에서 막대그래프로 표시한 부분은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5세 단위로 가구를 분류하고 각각의 소득과 소비를 표시한 것이고, 꺾인 선으로 연결한 것은 자산 규모를 나타낸다. 소득과 소비 분포는 중·장년기 초기에 큰 값을 가지고, 청년기와 노년기에 작은 값을 가지는 역U자 형태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총자산의 경우에는 60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노년기에 이르러 감소하는 분포패턴을 나타내었다.

소득·소비와 총자산 등의 경우 분포의 정점 연령대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생애주기가설에서 설명하는 바와 유사한 분포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5]는 2017년의 재정패널자료를 횡단면으로 사용하여 추정한 그림이다. 그런데 각 연령대는 별개의 가구로 구성된 이질성을 지닌 가구분포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그림 II-5]의 분포패턴을 생애주기가설에서 제시하는 분포패턴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적으로 어떤 가구의 생애소득·소비 및 총자산 값을 특정 시점(이를 테면 2017년)에서의 실질가격으로 환산한 곡선이 [그림 II-5]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서로 다른 세대의 생애주기소득·소비·자산 분포를 비교하면, 세대간(between generations)에 생애에 걸친 경제발전단계(different business cycle) 및 (절대)실질소득 수준의 차이 등에 따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세대의 경우 경제발전단계의 차이에 따라 실질소득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록 주관적으로 평가한 실질후생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세대의 생애소득 절대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애소득 기준의 소득불균등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즉, 생애소득 기준의 세대간 생애소득

불균등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상이한 세대의 상이한 경제발전단계는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치분석결과(consistent estimation results)를 얻기 쉽지 않다. 실제의 패널분석과 달리 횡단면에서 서로 다른 연령대에 걸쳐 나타나는 소득·소비·자산의 분포패턴이 만약 동일 개인 또는 동일 가구가 생애 동안 경험하게 되는 생애분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경기변동 사이클(business cycle)의 차이에 의한 교란요인이 성공적으로 제거된 상태에서 추출한 생애소득 분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가구의 생애주기 소득·소비·자산의 분포패턴이 [그림 II-5]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2017년 실질치로 어떤 개인이나 가구의 생애주기 분포패턴을 환산하여 [그림 II-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해석과 시사점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림 II-5]의 연령집단별 생애분포가 마치 한 개인이나 가구의 분포패턴이라고 상정해보자. 이 경우 소득·소비패턴 모두 생애주기가설에서 제시하는 바와 유사하게 역U자형 분포패턴을 보이는 것은 횡단면 자료에서조차 생애주기가설에서 논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청년기나 노년기의 소비지출 수준이 소득보다 여전히 작은 것은 생애주기가설에서 제시하는 바와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그런 차이의 원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인단계에서의 저축·대출을 관장하는 금융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청년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음(-)의 저축을 실현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 우리나라가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노인세대가 중·장년기에 충분히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생애주기가설에서 제시하는 바와 달리 청년기와 노년기에서도 소비지출이 소득보다 평균적으로 더 작은 값을 가지는 결과를 가져다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비록 가구당 평균치 통계에 불과하지만, 6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총자산 보유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노년기에 접어드는 초기까지 양(+의) 저축규모가 음(-)의 저축규모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경우 약 절반 정도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에 은퇴하여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나머지 절반 정도의 노인들은 공적연금의 수혜대상자이지만 상당수가 공적연금 가입연한이 짧기 때문에 공적연금 수혜액이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국민영양 수준 및 의료기술 수준과 급여 수준이 급속히 개선되면서 노인들의 기대여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축의 필요성을 증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은퇴 이후에도 매우 긴 기간 동안 소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데, 젊은 시절에 축적한 저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구비율이 높고, 또한 예산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노년기 초기까지도 저축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노년기 초기에 이르는 연령대까지 총자산보유액이 증가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4〉 가구주 연령별 소득·소비·자산·부채 분포

(단위: 만원)

연도	시장소득										평균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2007	1,213	2,532	3,500	3,910	4,148	3,995	3,637	2,969	2,043	757	3,049
2008	833	2,507	3,414	3,855	4,024	4,035	4,029	2,993	2,209	812	3,079
2009	1,702	2,576	3,339	4,026	4,204	4,098	4,079	3,431	2,156	830	3,187
2010	1,694	2,816	3,673	4,352	4,488	4,374	4,470	4,325	2,525	942	3,504
2011	1,749	2,679	3,814	4,390	4,482	4,370	4,859	4,262	2,425	905	3,499
2012	1,920	2,768	3,801	4,612	4,857	4,752	5,160	4,204	2,707	1,029	3,530
2013	2,303	2,757	3,953	4,840	4,698	4,859	5,195	4,537	2,871	1,053	3,586
2014	1,736	3,015	4,002	4,998	5,007	5,171	5,089	4,820	3,274	1,064	3,702
2015	1,901	3,011	4,101	5,470	5,217	5,542	5,318	4,961	3,510	1,141	3,886
2016	2,118	3,381	4,619	5,553	5,866	5,429	5,739	5,224	3,859	1,193	4,104
2017	2,367	3,486	4,572	5,325	6,034	5,590	6,018	5,409	3,899	1,299	4,147

〈표 II-4〉의 계속

(단위: 만원)

총소득											
연도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1,600	2,673	3,632	3,996	4,182	4,091	3,823	3,301	2,541	1,251	3,265
2008	1,305	2,725	3,597	3,973	4,177	4,156	4,264	3,382	2,825	1,375	3,360
2009	1,851	2,741	3,563	4,204	4,444	4,330	4,312	3,800	2,808	1,434	3,510
2010	1,810	3,051	3,884	4,584	4,704	4,564	4,750	4,794	3,379	1,656	3,878
2011	1,906	2,816	4,064	4,579	4,669	4,532	5,162	4,653	3,016	1,588	3,843
2012	2,088	2,922	4,058	4,911	5,089	4,899	5,476	4,794	3,480	1,787	3,963
2013	2,337	2,970	4,267	5,200	4,947	5,055	5,415	4,993	3,656	1,826	4,027
2014	1,743	3,255	4,429	5,379	5,353	5,696	5,287	5,391	4,197	1,953	4,266
2015	2,062	3,148	4,427	5,788	5,574	5,844	5,678	5,431	4,277	2,079	4,416
2016	2,288	3,784	4,990	5,881	6,137	5,719	5,953	5,825	4,760	2,144	4,649
2017	2,503	3,794	4,860	5,684	6,322	5,937	6,343	5,765	4,985	2,271	4,711
소비지출											
연도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1,061	1,295	1,764	2,164	2,365	2,421	2,185	1,711	1,433	876	1,825
2008	1,316	1,638	2,020	2,395	2,709	2,768	2,608	2,046	1,689	961	2,104
2009	1,157	1,542	2,026	2,337	2,611	2,667	2,676	2,066	1,645	982	2,078
2010	1,220	1,676	2,087	2,454	2,735	2,757	2,744	2,431	1,672	1,052	2,183
2011	1,206	1,734	2,296	2,654	2,790	2,878	3,011	2,465	1,840	1,048	2,277
2012	1,397	1,796	2,311	2,734	2,927	2,977	3,201	2,539	1,852	1,155	2,299
2013	1,285	1,754	2,395	2,880	3,007	3,250	3,226	2,753	2,028	1,220	2,407
2014	1,098	1,664	2,423	2,935	3,233	3,216	3,169	2,941	2,263	1,310	2,471
2015	1,381	1,813	2,552	3,241	3,343	3,567	3,371	3,118	2,423	1,399	2,639
2016	1,431	1,899	2,515	3,262	3,475	3,523	3,598	3,297	2,546	1,460	2,710
2017	1,605	2,014	2,736	3,373	3,693	3,659	3,676	3,381	2,715	1,506	2,803

〈표 II-4〉의 계속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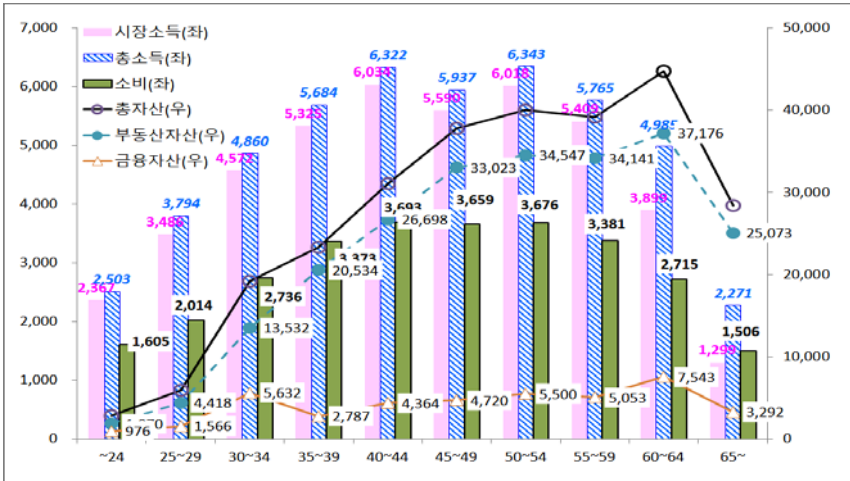
총자산											
연도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4,056	7,733	14,302	21,144	24,669	26,471	27,659	23,956	26,607	16,172	21,001
2008	1,626	8,970	13,838	21,844	23,864	24,127	27,763	25,450	26,671	16,134	20,919
2009	2,895	8,120	14,443	23,125	23,548	26,301	27,983	28,612	24,311	16,629	21,819
2010	2,143	7,329	15,268	21,986	27,076	28,397	32,266	32,964	31,185	19,148	24,296
2011	3,118	5,821	12,777	21,128	25,964	24,451	30,856	34,848	30,455	18,564	23,102
2012	4,440	6,453	14,437	19,806	26,721	27,408	30,087	32,821	27,467	21,299	23,803
2013	1,539	5,980	13,714	19,969	26,440	32,123	32,558	34,456	27,829	22,623	25,133
2014	1,555	5,412	14,344	19,997	26,843	30,567	30,924	37,010	33,140	24,078	25,918
2015	1,463	4,811	12,982	22,576	25,263	34,967	34,365	35,570	35,787	26,177	27,404
2016	2,116	5,692	14,202	19,613	28,474	34,047	35,419	39,650	36,262	26,673	28,219
2017	2,846	5,984	19,164	23,321	31,062	37,743	40,047	39,194	44,719	28,365	31,120
부채											
연도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250	1,124	2,812	4,466	4,703	4,333	3,862	4,007	4,656	1,411	3,445
2008	343	1,542	3,205	4,524	4,506	4,888	4,249	4,080	3,133	1,628	3,570
2009	77	1,489	3,332	4,282	4,709	4,957	4,024	3,502	3,294	1,317	3,488
2010	642	1,251	3,163	4,575	5,386	5,679	4,776	4,341	4,272	1,534	3,946
2011	483	855	2,788	4,243	5,676	4,761	5,453	4,651	3,507	1,731	3,829
2012	324	921	2,574	4,387	5,573	6,255	5,980	4,412	3,653	2,117	4,060
2013	5	730	2,640	3,911	5,719	7,085	5,448	4,498	3,216	2,109	4,059
2014	209	610	2,794	4,167	5,454	6,177	5,214	4,881	3,783	2,143	3,979
2015	77	602	2,751	4,788	4,838	6,598	5,519	4,032	4,430	2,048	3,967
2016	233	524	3,215	4,011	5,795	6,245	5,258	5,786	3,555	1,905	4,040
2017	181	537	3,198	3,826	4,097	4,037	3,607	2,809	2,560	1,059	2,716

주: 소득, 소비, 자산, 부채 등은 귀속연도 기준

자료: 제1~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I-5] 가구주 연령별 소득·소비·자산 분포(2017년 기준)

(단위: 만원)



주: 소득과 소비는 2017년 귀속분, 자산은 2017년 말 시점 기준

자료: 제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라. 소득·소비·자산·부채 분포: 장기 분포

본 항에서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3년 또는 10년 기간을 대상으로 소득, 소비, 자산의 장기 분포를 추정·분석한다. 장기 분포는 1년보다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간과 기간 사이에 발생하는 위계수(ranks) 변화에 의한 이동성을 포함한 분포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이동성이 존재하는 경우 장기 분포의 상대분포 격차는 단기의 경우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효과를 흔히 중심지향효과 또는 평균지향효과(mean reversion effect) 라고 칭한다. 본항에서 3년 단위의 장기 분포는 2007~2009년, 2009~2011년, 2012~2014년, 2015~2017년의 4가지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10년 단위의 장기 분포는 2008~2017년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최초 자료연도가 2007년(소득 귀속연도 기준)인데 10년 장기 분포에서 2007년 분포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1차년도(2007귀속연도)에서 탈락한 표본에 대한 대체표본을 2차년도(2008귀속연도)에 추가하였기 때문에 장기 분포를 생성할 때 1차년도 자료로 소급하면 2차년도부터 추가된 대체표본 전체가

분석 대상 표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차년도부터 11차년도까지의 10년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II-5〉는 장기소득(3년 또는 10년 합산소득) 계층별(10분위별) 각종 소득과 소비지출을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 기준)로 할인하여 합산한 통계치 분포와, 각 기간별 기말 기준의 자산과 부채의 잔고(balance)를 역시 소비자물가지수로 할인한 통계 분포를 보여준다. 단기 분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계층별 상대분포 격차를 나타내는 가장 단순한 지표인 10분위배수(상위 10% 통계치 ÷ 하위 10% 통계치)도 함께 보고하였다. 〈표 II-6〉은 장기 분포의 소득계층별 점유비를 나타낸다. 〈표 II-7〉은 분석 대상 기간별 기말 기준의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장기 분포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장기 소득·소비·자산·부채 분포에 대해서는 〈표 II-5〉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장기소득 분포는 소비자물가지수로 할인한 실질(단기)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여 산출되는데, 기간별로 소득순위가 변동하면서 평균지향효과를 나타내어 장기소득 격차가 단기소득 격차보다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대분배 격차를 나타내는 10분위배수를 보면, 단기의 경우 시장소득의 10분위배수는 36.55(2011년)~92.33배(2015년), 총소득의 10분위배수는 22.66(2017년)~34.04배(2007년, 이상 〈표 II-3〉 참조)였는데 반해 장기의 경우 시장소득의 10분위배수는 3년 기간의 경우 21.15~29.63배(10년 기간의 경우 19.63배), 총소득의 10분위배수는 18.33~21.12배(10년 기간의 경우 15.43배, 이상 〈표 II-5〉 참조)로 추정되었다. 단기소득 격차에 비해 장기소득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산이나 부채의 경우에는 소득의 경우와 반대로 장기소득계층별 상대 격차가 단기 격차보다 더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대조적이다. 총자산의 경우 단기 분포의 10분위배수는 5.43(2007년)~7.68배(2012년, 이상 〈표 II-3〉 참조)인데, 장기 분포의 10분위는 3년 기준 8.12~8.94배, 10년 기준 11.08배(이상 〈표 II-5〉 참조)로 장기 격차가 단기 격차보다 훨씬 크다. 부채의 경우에도 단기 격차는 4.78(2008년)~12.06배(2016년, 이상 〈표 II-3〉 참조)인데 비해 장기 격차는 3년 기준 9.28~15.92배, 10년 기준 12.99배로

장기가 단기보다 훨씬 크다.

단기소득계층별 자산·부채의 상대분포 격차보다 장기소득계층별 상대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장·단기소득의 특성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테면 더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소득을 측정할수록 항상소득보다는 운이나 단기적·일시적 요인에 의한 일시소득·손실(windfall gain/loss)로 인한 소득순위의 변동이 커지는 반면 보다 긴 기간을 대상으로 소득을 측정할수록 소득의 일시적 변동에 의한 소득순위의 변동요인이 작아지는 반면 항상소득에 의한 소득순위 결정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자산이나 부채, 특히 그 가운데 자산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을 거쳐 소득이 누적·축적되면서 형성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항상소득과 자산 사이의 상관관계가 큰 것이 일반적이다. 바로 이런 장·단기소득 및 자산 사이의 관계적 특성으로 인해 장기일수록 소득계층별 자산·부채의 격차가 조금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니계수를 이용한 장·단기 분배격차의 특성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4절에서 상세하게 논의한다.

〈표 II-5〉 장기 총소득계층별 소득·소비·자산·부채 분포

(단위: 만원, 배)

구분	대상 기간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평균	10 분위 배수
시장소득	2007~2009	1,211	2,660	4,013	5,445	6,939	8,537	10,426	12,629	15,943	25,626	9,344	21.15
	2009~2011	1,216	2,842	4,358	5,894	7,425	9,022	10,883	13,235	16,760	26,658	9,832	21.92
	2012~2014	990	2,222	3,751	5,177	6,804	8,587	10,810	13,484	17,006	28,163	9,702	28.45
	2015~2017	1,035	2,336	3,962	5,526	7,288	9,261	11,600	14,675	18,517	30,682	10,492	29.63
	2008~2017	4,726	10,532	16,311	21,439	27,497	33,553	40,621	48,100	60,476	92,756	35,607	19.63
총소득	2007~2009	1,291	2,797	4,266	5,703	7,188	8,871	10,695	12,879	16,391	25,993	9,609	20.13
	2009~2011	1,485	3,148	4,669	6,169	7,742	9,383	11,283	13,601	17,169	27,229	10,190	18.33
	2012~2014	1,380	2,754	4,217	5,743	7,367	9,201	11,344	13,924	17,584	29,153	10,269	21.12
	2015~2017	1,653	3,166	4,709	6,236	8,072	10,005	12,286	15,251	19,454	31,709	11,257	19.18
	2008~2017	6,227	12,469	18,016	23,300	29,403	35,489	42,148	50,536	62,412	96,066	37,613	15.43
소비지출	2007~2009	1,759	2,879	3,909	4,533	5,374	6,187	6,894	7,912	8,950	11,619	6,002	6.61
	2009~2011	2,024	3,211	4,222	5,125	6,040	6,928	7,581	8,539	9,826	12,967	6,647	6.41
	2012~2014	1,912	3,240	4,254	5,269	5,955	7,304	8,728	9,432	10,917	15,161	7,218	7.93
	2015~2017	2,426	3,621	4,630	5,910	7,242	8,633	9,657	11,166	12,756	16,394	8,244	6.76
	2008~2017	6,923	12,209	15,478	19,345	23,147	26,549	29,520	32,897	37,103	48,512	25,171	7.01
총자산	2007~2009	6,586	9,195	11,765	14,652	16,587	19,988	22,407	26,652	34,729	58,913	22,151	8.94
	2009~2011	7,613	11,957	13,204	15,798	19,216	21,092	25,418	30,922	37,630	62,679	24,559	8.23
	2012~2014	8,253	12,972	13,340	18,104	21,369	23,521	26,965	30,312	39,495	69,254	26,364	8.39
	2015~2017	10,818	17,363	16,365	21,497	24,260	29,706	32,919	37,618	50,479	87,875	32,899	8.12
	2008~2017	8,770	15,783	17,920	24,160	23,247	31,474	35,730	44,004	57,533	97,206	35,590	11.08
부동산 자산	2007~2009	6,045	8,150	10,728	13,309	15,186	17,566	19,916	23,538	30,144	50,828	19,544	8.41
	2009~2011	6,999	10,544	11,972	13,834	17,195	18,810	22,558	27,545	32,870	53,058	21,543	7.58
	2012~2014	7,521	11,557	11,820	15,982	18,886	20,611	23,401	25,958	34,128	59,229	22,914	7.87
	2015~2017	9,239	15,203	14,336	19,201	21,543	26,508	28,808	32,373	44,448	72,214	28,394	7.82
	2008~2017	7,513	13,859	15,836	21,670	20,318	27,290	31,833	38,734	50,600	77,722	30,543	10.35
금융자산	2007~2009	541	1,045	1,037	1,343	1,401	2,423	2,491	3,114	4,586	8,085	2,607	14.95
	2009~2011	615	1,413	1,232	1,965	2,022	2,282	2,860	3,377	4,759	9,620	3,016	15.65
	2012~2014	731	1,415	1,520	2,122	2,483	2,910	3,563	4,354	5,367	10,025	3,450	13.71
	2015~2017	1,579	2,160	2,028	2,296	2,716	3,198	4,112	5,245	6,032	15,661	4,505	9.92
	2008~2017	1,258	1,925	2,084	2,490	2,929	4,183	3,897	5,269	6,933	19,484	5,047	15.49
부채	2007~2009	669	1,252	1,775	2,187	3,074	2,952	4,548	4,192	6,192	8,820	3,566	13.19
	2009~2011	884	1,457	2,070	2,430	3,650	3,445	4,820	5,379	7,327	9,224	4,069	10.44
	2012~2014	701	1,365	1,574	2,066	2,679	3,138	4,947	5,376	7,338	11,167	4,036	15.92
	2015~2017	677	699	955	1,682	1,999	2,967	3,665	3,872	4,781	6,282	2,758	9.28
	2008~2017	462	780	1,044	1,671	2,459	3,084	3,850	3,791	5,291	5,999	2,843	12.99

주: 1. 소득·소비지출은 기간 소비지출가치수(2015=100)로 할인한 값을 기준으로 단순합산한 합계치 기준. 자산과 부채는 기간의 기말(마지막 연도) 잔액(balance) 기준

2. 10분위 배수는 10분위 평균값 ÷ 1분위 평균값 기준

자료: 제1~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I-6〉 장기 총소득계층별 소득·소비·자산·부채 비중 점유비 분포

(단위: %)

구분	대상 기간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계
시장소득	2007~2009	1.30	2.85	4.29	5.83	7.43	9.14	11.16	13.52	17.06	27.42	100
	2009~2011	1.24	2.89	4.43	6.00	7.55	9.18	11.07	13.46	17.05	27.12	100
	2012~2014	1.02	2.29	3.87	5.34	7.01	8.85	11.14	13.9	17.53	29.03	100
	2015~2017	0.99	2.23	3.78	5.27	6.95	8.83	11.06	13.99	17.65	29.24	100
	2008~2017	1.33	2.96	4.58	6.02	7.72	9.42	11.41	13.51	16.98	26.05	100
총소득	2007~2009	1.34	2.91	4.44	5.94	7.48	9.23	11.13	13.4	17.06	27.05	100
	2009~2011	1.46	3.09	4.58	6.05	7.60	9.21	11.07	13.35	16.85	26.72	100
	2012~2014	1.34	2.68	4.11	5.59	7.17	8.96	11.05	13.56	17.12	28.39	100
	2015~2017	1.47	2.81	4.18	5.54	7.17	8.89	10.91	13.55	17.28	28.17	100
	2008~2017	1.66	3.32	4.79	6.19	7.82	9.44	11.21	13.44	16.59	25.54	100
소비지출	2007~2009	2.93	4.80	6.51	7.55	8.95	10.31	11.49	13.18	14.91	19.36	100
	2009~2011	3.05	4.83	6.35	7.71	9.09	10.42	11.40	12.85	14.78	19.51	100
	2012~2014	2.65	4.49	5.89	7.30	8.25	10.12	12.09	13.07	15.12	21.00	100
	2015~2017	2.94	4.39	5.62	7.17	8.78	10.47	11.71	13.54	15.47	19.88	100
	2008~2017	2.75	4.85	6.15	7.69	9.20	10.55	11.73	13.07	14.74	19.27	100
총자산	2007~2009	2.97	4.15	5.31	6.61	7.49	9.02	10.12	12.03	15.68	26.60	100
	2009~2011	3.10	4.87	5.38	6.43	7.82	8.59	10.35	12.59	15.32	25.52	100
	2012~2014	3.13	4.92	5.06	6.87	8.11	8.92	10.23	11.5	14.98	26.27	100
	2015~2017	3.29	5.28	4.97	6.53	7.37	9.03	10.01	11.43	15.34	26.71	100
	2008~2017	2.46	4.43	5.04	6.79	6.53	8.84	10.04	12.36	16.17	27.31	100
부동산 자산	2007~2009	3.09	4.17	5.49	6.81	7.77	8.99	10.19	12.04	15.42	26.01	100
	2009~2011	3.25	4.89	5.56	6.42	7.98	8.73	10.47	12.79	15.26	24.63	100
	2012~2014	3.28	5.04	5.16	6.97	8.24	8.99	10.21	11.33	14.89	25.85	100
	2015~2017	3.25	5.35	5.05	6.76	7.59	9.34	10.15	11.40	15.65	25.43	100
	2008~2017	2.46	4.54	5.18	7.09	6.65	8.93	10.42	12.68	16.57	25.45	100
금융자산	2007~2009	2.07	4.01	3.98	5.15	5.37	9.29	9.56	11.94	17.59	31.01	100
	2009~2011	2.04	4.69	4.08	6.51	6.70	7.57	9.48	11.20	15.78	31.90	100
	2012~2014	2.12	4.10	4.41	6.15	7.20	8.43	10.33	12.62	15.56	29.06	100
	2015~2017	3.51	4.79	4.50	5.10	6.03	7.10	9.13	11.64	13.39	34.76	100
	2008~2017	2.49	3.81	4.13	4.93	5.80	8.29	7.72	10.44	13.74	38.61	100
부채	2007~2009	1.88	3.51	4.98	6.13	8.62	8.28	12.75	11.75	17.36	24.73	100
	2009~2011	2.17	3.58	5.09	5.97	8.97	8.47	11.85	13.22	18.01	22.67	100
	2012~2014	1.74	3.38	3.9	5.12	6.64	7.78	12.26	13.32	18.18	27.67	100
	2015~2017	2.45	2.53	3.46	6.10	7.25	10.75	13.29	14.04	17.33	22.77	100
	2008~2017	1.62	2.74	3.67	5.88	8.65	10.85	13.54	13.33	18.61	21.10	100

주: 소득·소비지출은 기간 소비지출가치수(2015=100)로 할인한 값을 기준으로 단순합산한 합계치. 자산과 부채는 기간의 기말(마지막 연도) 잔액(balance) 기준으로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비중을 추정하였음

자료: 제1~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11-7〉 가구주 연령별 장기소득·소비·자산·부채 분포

(단위: 만원)

구분	대상 기준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시장소득	2007~2009	4,922	8,354	10,688	11,745	12,156	12,022	11,428	8,615	6,185	3,157	9,344
	2009~2011	5,583	8,270	10,622	12,074	12,213	12,421	12,653	10,437	6,897	3,326	9,832
	2012~2014	7,338	8,574	10,950	12,923	12,727	12,637	13,469	11,182	7,284	3,409	9,702
	2015~2017	5,165	9,848	11,675	14,681	14,118	14,168	14,113	12,564	8,949	3,651	10,492
	2008~2017	24,076	37,328	42,813	44,840	46,571	45,481	41,699	30,235	21,223	11,362	35,607
총소득	2007~2009	4,939	8,414	10,766	11,803	12,266	12,136	11,674	9,140	6,957	3,711	9,609
	2009~2011	5,650	8,306	10,736	12,171	12,360	12,599	12,880	10,976	8,107	4,117	10,190
	2012~2014	7,385	8,656	11,057	13,109	12,892	12,807	13,776	12,131	8,699	4,541	10,269
	2015~2017	5,209	10,052	11,732	14,833	14,468	14,410	14,528	13,437	10,631	5,220	11,257
	2008~2017	24,356	37,758	43,422	45,474	47,202	46,621	44,198	34,375	26,305	14,960	37,613
소비지출	2007~2009	4,025	4,752	6,087	7,203	7,764	8,104	7,073	5,328	4,450	2,747	6,002
	2009~2011	3,935	5,585	6,752	7,543	8,378	8,604	8,259	6,572	4,980	3,074	6,647
	2012~2014	4,318	5,966	7,490	8,737	9,290	9,405	9,633	7,791	5,686	3,609	7,218
	2015~2017	4,539	6,045	8,267	10,471	10,518	10,801	10,642	9,437	7,400	4,347	8,244
	2008~2017	19,588	24,335	28,344	31,050	32,460	31,376	27,594	21,204	17,751	11,588	25,171
총자산	2007~2009	10,233	9,892	18,351	23,798	24,573	27,677	28,451	25,282	22,900	15,664	22,151
	2009~2011	6,017	10,762	17,042	24,775	26,092	27,771	34,744	31,915	28,032	17,663	24,559
	2012~2014	6,226	8,058	17,249	22,986	29,066	30,875	33,113	35,909	29,829	22,842	26,364
	2015~2017	2,357	11,057	21,907	28,902	32,518	40,483	39,647	41,182	42,609	28,956	32,899
	2008~2017	20,431	24,288	29,941	40,842	39,899	39,298	45,393	39,616	35,464	23,079	35,590
부동산 자산	2007~2009	9,461	8,317	16,103	21,033	21,199	24,540	24,956	22,364	20,903	14,404	19,544
	2009~2011	4,880	9,194	14,765	21,500	23,167	24,356	30,210	27,743	25,052	15,808	21,543
	2012~2014	4,394	6,158	14,719	19,683	25,384	26,737	28,261	31,249	25,479	20,503	22,914
	2015~2017	1,381	8,916	16,590	24,963	28,235	35,578	34,307	36,258	34,711	25,585	28,394
	2008~2017	18,081	21,259	25,544	35,817	34,772	33,839	38,682	30,196	31,251	20,435	30,543
금융자산	2007~2009	772	1,574	2,247	2,765	3,374	3,137	3,495	2,918	1,997	1,625	2,607
	2009~2011	1,136	1,567	2,277	3,276	2,925	3,415	4,534	4,172	2,980	1,855	3,016
	2012~2014	1,832	1,900	2,530	3,303	3,682	4,138	4,852	4,660	4,350	2,339	3,450
	2015~2017	977	2,140	5,317	3,938	4,283	4,905	5,341	4,923	7,898	3,371	4,505
	2008~2017	2,349	3,029	4,397	5,025	5,127	5,459	6,712	9,420	4,213	2,644	5,047
부채	2007~2009	1,550	1,941	3,890	4,815	4,607	5,125	3,665	3,672	3,060	1,135	3,566
	2009~2011	743	2,357	3,708	4,927	5,567	5,318	5,220	4,305	2,852	1,686	4,069
	2012~2014	1,717	1,041	3,514	4,909	5,656	6,056	5,506	4,122	3,693	1,752	4,036
	2015~2017	251	1,553	3,716	4,074	3,737	4,130	3,175	2,117	2,702	1,147	2,758
	2008~2017	2,261	3,408	4,427	4,382	4,122	2,819	2,613	2,136	1,427	608	2,843

주: 1. 가구주 연령은 대상 기간 말 기준

2. 소득·소비지출은 기간 소비지출가치수(2015=100)로 할인한 값을 기준으로 단순합산한 합계치 기준. 자산과 부채는 기간의 기말(마지막 연도) 잔액(balance) 기준

자료: 제1~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3. 연령-소득 분포(Age-Income Profile)의 특징

가. 개요

본 절에서는 1세 단위의 연령집단별 소득·소비 및 자산분포를 추정·분석한다. 앞의 제2절에서는 5세 단위의 횡단면 특성을 기준으로 연령-소득 분포를 추정하였는데 기본 목적은 횡단면 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반해 본절에서는 장기 또는 생애 특성을 반영하여 연령-소득 또는 연령-자산 분포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 제2절과 차별화된 분석방법을 채용하여 1세 단위의 연령-소득 및 연령-자산 등의 분포를 추정하였다.

동일 가구를 생애기간에 걸쳐 소득·소비·자산 분포를 추적하여 추정·분석하는 것이 장기·생애 분포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 한 세대만이라도 생애기간을 통틀어 패널자료를 구축한 사례가 없다. 여러 세대를 망라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한 경우는 더욱 찾아볼 수 없다. 만약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정보를 추적·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무작위성에 기반한 대표성을 지니는 표본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장기분석을 시행하더라도 생애 분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현실에서는 통상적으로 10~20년 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구축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장기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시간범위가 긴 분석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표본관측치 탈락에 의해 무작위성이나 표본의 대표성이 많이 훼손되어 선택편의로 인한 편의추정결과(biased and inconsistent estimates)를 얻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일정한 가정하에서 횡단면 자료로부터 장기 정보를 추출해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생애소득 분배구조를 비롯하여 장기소득 분배구조는 단기소득(주로 연간소득)이 장기에 걸쳐 다년간의 소득이 누적(축적)됨으로써 결정된다. 소득 결정요인들 가운데 소득자의 성별, 건강상태, 학력, 직업, 종사업종, 경력 등 개인별로 차등적으로 축적된 인적 자본 등은 단기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특성들은

장기적으로도 쉽게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속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생애(또는 장기)소득을 결정해주는 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동일 연령, 동일 세대 집단 내에서) 비교적 소득순위(income rank)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교적 큰 변동 없이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유형의 소득 결정요인을 항구적 요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물론 단기소득과 장기소득 사이에 소득순위의 변동이 발생한다. 기간과 기간 사이에 나타나는 소득순위의 변동은 보통 위와 같은 장기적 소득결정요인 외의 단기적 요인들(예: 노동시간, 운, 일시적 건강상태 변화, 산업·업종간 비대칭적인 경기변동(business cycle)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요인들에 의한 소득 변동은 비교적 단기적인 소득 변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흔히 일시적 변동요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장기소득 분포와 단기소득 분포 사이에는 여러 요인 변화에 의해 소득분배 구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주된 요인별로 분해(decomposition)해 보면 소득이동성 효과(income mobility effect)와 시장선택 효과(market selection effect)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규모효과(scale effect)를 더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시장선택효과부터 살펴보자. 시장선택효과는 주로 항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장기소득 분포를 의미한다. 가상적으로 소득이동성, 즉 소득순위의 변동이 없는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여 각 연령대별로 동일 소득순위의 단기소득 흐름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된 소득 결정요인이 항구적 요인에 의한 것들로 구성되는 만큼 장기소득 분배구조의 구조적 구성요소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기간별로 동일인(또는 동일가구)의 소득순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소득순위가 고정된 경우는 현실에서 관찰되지 않지만, 일종의 조건부 기대치적인 관점에서 기대 소득순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소득순위의 변동이 없는 가상적인 상태에서의 소득흐름을 고찰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기간별로 소득순위가 변동한다. 소득이동성 효과는 기간과 기

간 사이에 소득순위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변화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장기소득 격차가 단기소득 격차보다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당 부분 소득이동성에 의한 일종의 평균지향효과(mean reversion effect)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생애주기가설에 의거하면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생애소득 흐름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생애주기 중 중·장년층일 때 절대소득 수준이 가장 높고, 청년기 및 노년기는 절대소득 수준이 낮은 역U자 형태의 생애소득 흐름을 가진다. 생애소득은 단기소득(실질소득 기준)을 누적하여 축적한 소득이다. 생애주기상 연령별로 절대소득 수준이 평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애소득 분포는 단기소득 중 주로 절대소득 수준이 큰 중·장년기에 축적된 소득에 가장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생애소득 분포 및 생애소득 격차 구조는 모든 연령대에서의 소득 분포와 소득 격차에 의해 결정되지만, 특히 그 가운데 절대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중·장년기 소득의 분배구조 및 분배 격차가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규모효과 역시 생애(또는 장기)소득분배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상기의 세 가지 분해요소 가운데 다른 요소와 구별하여 시장선택효과를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시설문자료 분석을 통해 기간과 기간 사이에 나타나는 소득순위 변동에 의한 장기소득 분포 및 장기소득 불균등도에 대한 분석은 쉽게 이루어지지만 소득 결정요인의 주요 속성별로 장·단기 소득분배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인분해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생애(장기)소득 분배구조 결정과정을 주된 요인별로 살펴보기 위해 단기소득 분배구조 고찰에서 장기소득 분배구조 고찰로 넘어가기 전에 시장선택효과에 의한 분해 분석을 시도한다. 시장선택효과 분석을 위한 분해 분석방법은 성명재(2003; 2005; 2018)의 연구방법을 준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가 수행한 선행연구의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장기 분포를 생성하여 분석한다. 그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표본생성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장기 분포를 생성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정이라 함은, 소득·소비·

자산의 결정요인 중 각 개인 또는 가구의 개별 특성에 의존하는 부분 중 상당히 많은 수가 일단 어떤 시점에 그 값이 결정되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면, 전술하였듯이 성별, 학력, 직업, 경력·경험, 가구원 수, 건강상태, 연령(또는 세대) 등의 변수는 각 경제주체(개인 또는 가구)별로 항구성을 지닌다. 물론 동일한 특성을 지닌 동일 집단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 기간 소득·소비·자산 수준 및 집단 내 등위수(위계수)가 바뀌지만, 평균적으로는 해당 등위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지닌다. 바로 이런 특성에 근거하여 본 절에서는 평균적 관점에서 동일(연령) 집단 안에서 어떤 가구가 다음 기에 평균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소득백분위 위계수가 현재 기의 위계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인적 특성들은 단기적으로 잘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많은 부분을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 연령-소득 연계 분포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마치 횡단면 분포 특성이 장기 또는 생애기간 동안 평균적인 관점에서 동일한 패턴을 지닌다는 것을 전제로 추정·분석한다. 이를 테면 어떤 기에 동일 연령집단 안에서 소득백분위수가 p 인 가구는 생애기간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동일 연령집단 내에서의 소득백분위수는 계속 p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정한다. 물론 이렇게 설정하더라도 이것은 평균적 관점에서 평균백분위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실제로 매 기간 동일 연령집단 안에서 실현되는 소득백분위수 값은 p 의 주변에서 일정한 분포를 가지면서 차등적으로 실현된다. 이는 어떤 연도의 동일 연령집단 내 소득백분위수가 p 인 경우 다음 연도의 동일 연령집단 내 소득백분위수에 대한 기댓값이 여전히 p 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대소득순위의 변동값이 0임을 의미한다. 성명재·강신욱·이철인(2008)은 이론 모형을 통해 기대소득순위의 변화가 0이라는 것을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구보고서(제Ⅴ장 제1절 다항 2목, pp. 88-90 참조)에서 가설검정을 통해 경험적·실증적으로 기대소득순위의 변화가 0이라는 것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동일 연령집단 내에서 기대소득순위 변동이 0이라는 전제하에서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장선택효과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집단을 25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각각 1개의 연령집단으로 묶고 (clustering) 그 사이 연령집단을 1살 단위로 분류하면 모두 41개 연령집단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런데 재정패널자료는 표본 수가 최대 5천~6천개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1개의 연령집단 안에서 소표본의 크기는 평균 100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때 각 연령집단 내에서 소득백분위수를 생성하고자 한다면, 추정하고자 하는 위계수의 수에 비해 표본관측치의 크기가 너무 작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접한 연령집단 사이에는 표본 특성 중 공통분모가 많으며, 특히 연령 차이가 작을수록 공통분모의 비중은 더 커지는 반면 이질성은 줄어든다는 점에 착안하여, 어떤 연령집단의 표본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해당 연령대의 관측치는 물론이고 인접 연령대의 관측치를 포함하여 각 연령대의 표본크기를 증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만 연령 차이가 늘어날수록 본래 연령대의 표본 특성과 공유하는 특성의 비중도 줄어드는 만큼 인접 연령대의 관측치에 대한 가중치는, 연령 차이가 ± 1 세인 관측치의 경우에는 가중치의 값의 50%를 경감하고, ± 2 세인 경우에는 75%, ± 3 세인 경우에는 87.5%를 경감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41개 연령집단의 표본을 재구성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각 연령집단의 표본크기는 평균적으로 600~700개 이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각 연령집단 내에서 소득백분위수를 구성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성명재, 2011b 참조).

장기 분포분석을 위해 이런 방법으로 표본을 구성하고 각 연령대별로 동일한 백분위 위계수를 지닌 값들을 연결시켜주면, 평균적인 관점에서 일종의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이 가상패널을 구성하면, 실제값이 아니므로 시계열적으로 소득위계수 변화가 없는 비현실적인 패널자료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제약점이 따른다. 반면에 이런 방법으로 가상패널을 구축하면, 세대간 경제발전단계의 차이 또는 세대별 경기변동(business cycle) 경험 차이 등에 의한 구조적인 편의문제를 회피·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나항에서는 1세 단위의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연령-(평균)가구소득·가구소비 연계 분포와 적자가구 비율 분포를 분석하고, 다항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연령-자산·부채 분포를 분석한다. 라항에서는 위의 방법으로 재구성한 1세 단위의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각 연령대의 동일백분위수 소득 값을 연결하여 각 백분위수별 연령-소득궤적을 추정하여 분석한다. 여기서 분석을 위해 채택한 백분위 위계수는 5백분위와 95백분위를 각각 최저·최고 소득백분위 위계수 궤적으로 하며, 사이 백분위수는 10~90백분위수의 범위 내에서 10백분위수p(포인트) 단위로 백분위 위계수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모두 11개의 소득백분위 위계수에 대한 소득궤적을 분석하였다.

나. 가구주 연령별 소득·소비·적자가구 비율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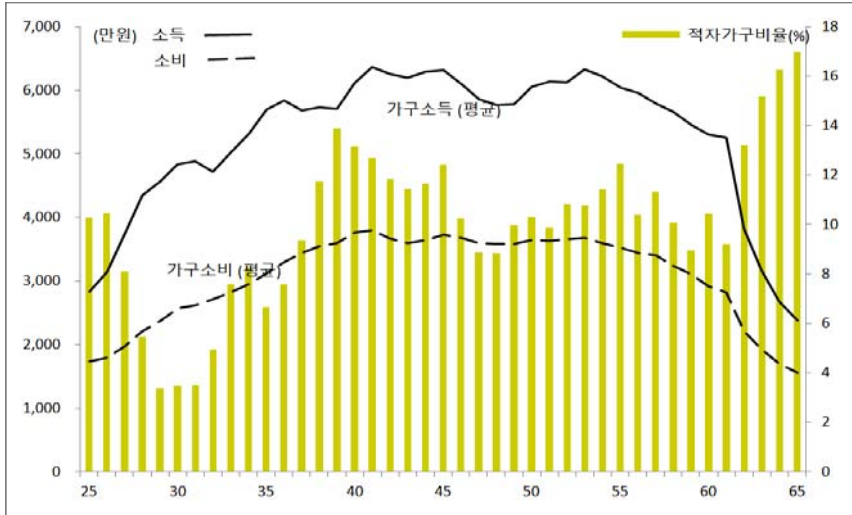
[그림 II-6]은 기본적으로 [그림 II-5]의 5세 단위 연령집단 분포를 1세 단위로 세분화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연령적으로 20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가구(평균)소득 수준도 증가하기 시작하는 패턴을 보인다. 연령이 40대에 접어들면서 가구(평균)소득이 정점 부근에 도달한 다음 대략 10~15년 정도 정상 부근에서 머물다가 50대 중반부터 가구(평균)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패턴을 보인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대에 접어들면서 가구소득이 급속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50대 중반 이후 점차 은퇴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계속 참여하더라도 참여도가 낮거나 불완전 취업상태로 전환되면서 급여나 사업소득 수준이 이전 연령대의 시기보다 낮아지면서 가구(평균)소득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60세 이후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퇴·퇴직·폐업 등 경제활동을 그만두면서 가구소득 감소추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연령-소비궤적을 보더라도, 연령-소득궤적에 비해 절대수준이 조금 작고 곡선의 곡률이 다소 완만할 뿐 기본적인 패턴모습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II-6] 가구주 연령별 소득·소비 및 적자가구 비율

(단위: 만원, %)



주: 소득과 소비는 2017년 귀속분

자료: 제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I-8〉은 2007~2017년 동안 가구소비지출액이 가구(총)소득보다 많아 가계수지가 적자를 보인 적자가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적자가구 비율은 2007년 16.61%에서 2012년 13.75%, 2017년 11.99%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제로 적자가구 비율이 감소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에서 적자가구 비율이 낮아졌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문제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인인구·가구 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재정패널자료를 분석한 〈표 II-5〉의 적자가구 비율 추정치는 패널자료에 계속 잔존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에만 성립하는 조건부 추정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현실과는 일정한 정도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괴리의 원천은, 패널자료의 장기화에 따른 표본 관측치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면서 패널자료의 분포 특성이 횡단면 특성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패널분석의 경우

관측치 탈락에 의한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는데 패널자료에서 횡단표본가중치 대신 종단표본가중치를 사용하면 그런 문제 중 상당부분을 보정할 수 있다.

[그림 II-6]에서는 개별 연령집단별로 적자가구 비율을 추정하여 보여주고 있다. 연령대별로 적자가구 비율의 분포 패턴이 매우 불규칙적이다. 다만 노인가구로 갈수록 적자가구 비율이 현저하게 빠르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주된 특징 중 하나이다. 이는 가구소득이 가구소비보다 작은 적자가구에서 표본탈락한 가구 비율이 그렇지 않은 가구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8〉 적자가구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적자가구 비율
2007	16.61
2008	20.46
2009	18.27
2010	12.64
2011	13.15
2012	13.75
2013	13.82
2014	12.97
2015	11.4
2016	12.09
2017	11.99

주: 1. 적자가구는 가구소비지출이 가구(총)소득을 초과하는 가구로 정의

2. 상기 연도는 소득·소비 귀속연도 기준(재정패널자료는 전년도 소득과 소비를 기준으로 측정)

자료: 제1~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다. 가구주 연령별 자산·부채 분포의 비교

[그림 II-7]은 연령-자산 및 연령-부채 연계분포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여준다(2017년 기준). 전반적으로 가구 총자산규모에 비해 부채금액이 상당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총자산과 순자산(=총자산-부채)의 분포 패턴은 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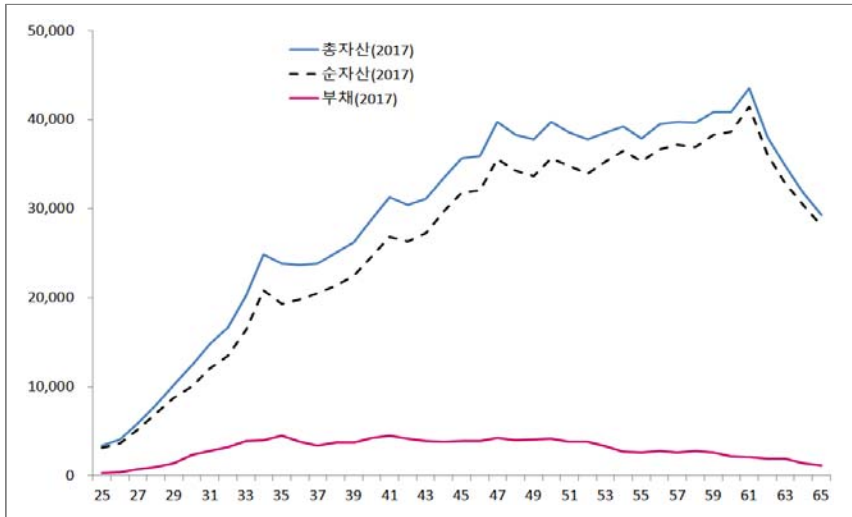
소이하다.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당 평균 총자산(순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 규모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증가하다가 30대 중반 이후에는 증가속도가 조금 완만해지고, 특히 40대 중반 이후에는 증가속도가 더욱 완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의 증가추세는 가구주 연령이 61세일 때까지 지속되다가 62세 때부터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가구부채는 30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소폭 감소하지만 대체로 평탄한 모습을 보이다가 50세 이후 감소추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패턴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청년기에는 아직 소득이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부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지만,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획득하는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점차 부채 의존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0대 중반 이후의 장년층의 경우 부채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장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총자산과 순자산 사이의 차이는 상당히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1-7] 가구주 연령별 총자산·순자산·부채 분포

(단위: 만원)



주: 2017년 말 시점 기준

자료: 제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라. 백분위수별 연령-소득 분포 궤적의 비교

본 항에서는 본격적으로 재정패널자료의 횡단면 특성을 확장하여 각 연령 집단별로 동일한 소득백분위 위계수를 지닌 소득궤적을 연결하여 가상의 생애소득 궤적을 주요 소득백분위 위계수별로 추정하였다. [그림 II-8]~[그림 II-18]은 각각 2007~2017년의 재정패널자료의 횡단면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소득백분위 위계수별 생애소득 궤적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성명재(2005)는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생애소득흐름의 변화패턴을 연령대에 결부시켜 소득확장기와 소득수축기의 두 기간으로 분해하였다. 그의 연구방법을 원용하여 최근 가계동향조사자료에 적용시켜 생애소득흐름을 주요 백분위 위계수별로 추정해본 결과 그의 연구에서 추정된 분포패턴의 모습이 최근 자료에도 비슷한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참고적으로 최신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그림은 부록의 [부록 그림 1]~[부록 그림 6]에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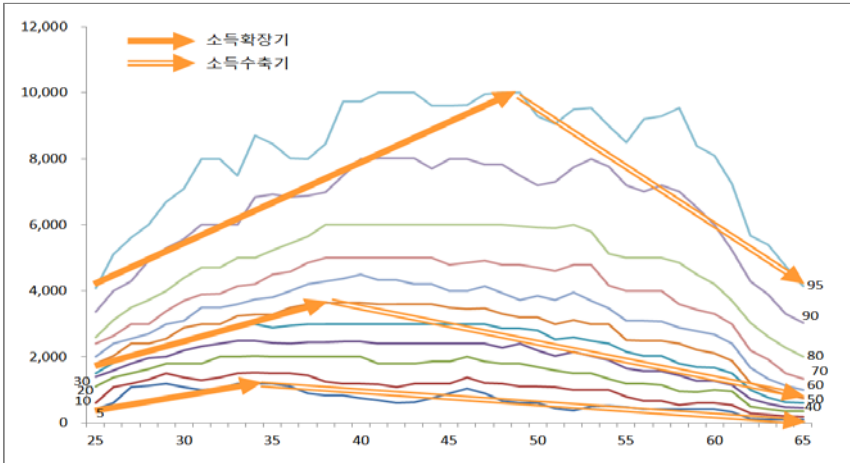
[그림 II-8]~[그림 II-18]은 2007~2017년 재정패널자료를 분석한 경우에서 각 백분위 위계수별 생애소득 궤적 역시 성명재(2005)가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확장기와 소득수축기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성명재(2005)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백분위 위계수가 높은 가구일수록 생애주기 동안 소득확장기의 길이가 더 길고 소득수축기의 길이가 짧은 반면 소득백분위 위계수가 낮은 소득궤적일수록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런 결과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즉, 백분위 위계수가 높을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평균)소득이 상승하는 연령구간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반면, 백분위 위계수가 낮아질수록 생애소득궤적의 소득수축기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패턴을 보임으로써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각 백분위 위계수 소득궤적별로 소득정점에 이르는 연령대를 추정해보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확장기가 더 긴 반면,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소득수축기가 더 긴 특징이 관찰된다. [그림 II-19]에서 보듯이 고소득 백분위 위계수일수록 소득 정점 연령대가 더 높아지는 것이 이를 방증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령-소득 연계분포의 특성은 성명재(2005)가 지적하였듯이 시장선택(market selection)의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8]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07년 귀속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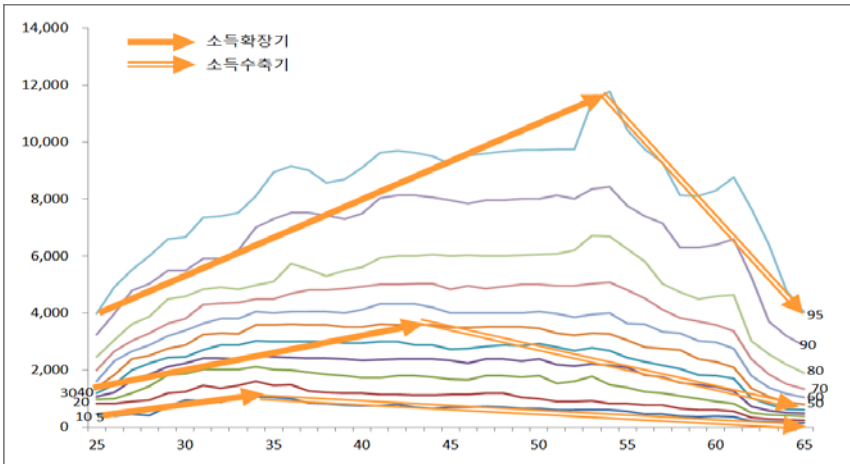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제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I-9]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08년 귀속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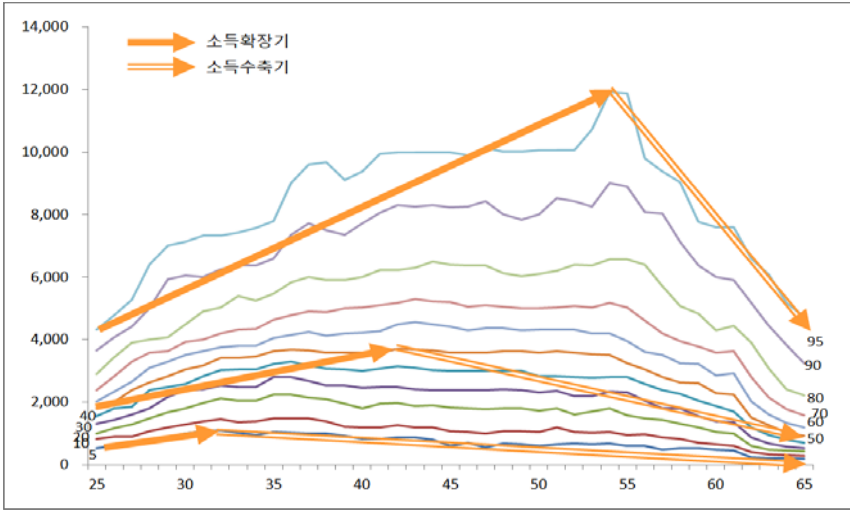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제2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I-10]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09년 귀속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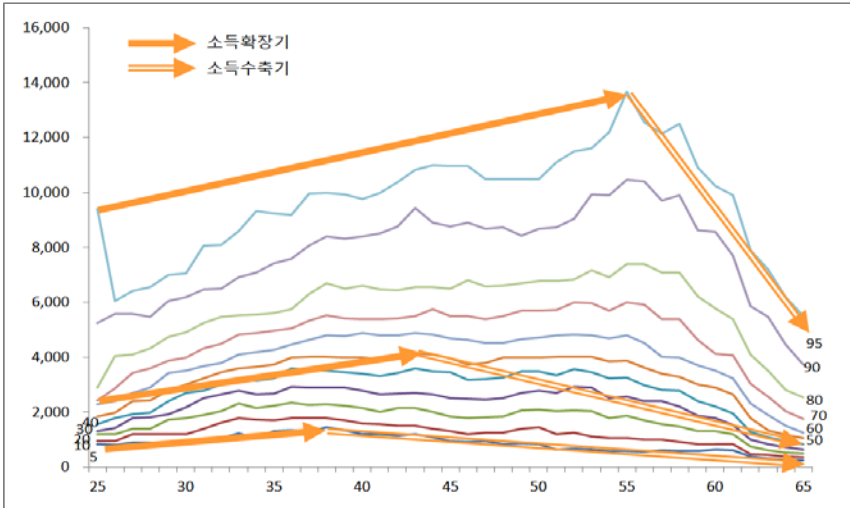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제3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I-11]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10년 귀속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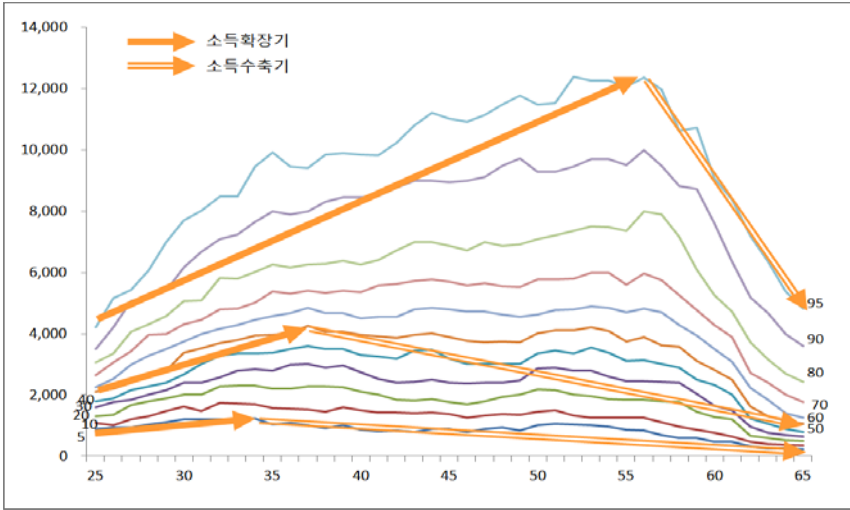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제4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I-12]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11년 귀속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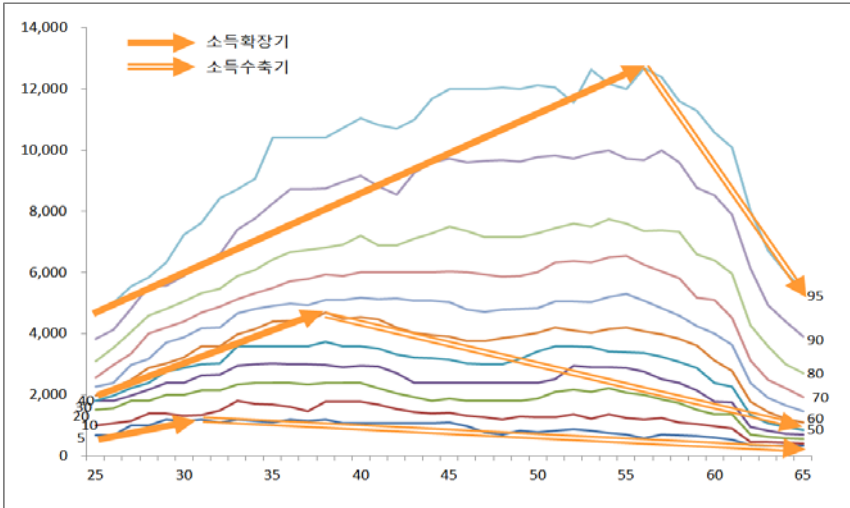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제5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I-13]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12년 귀속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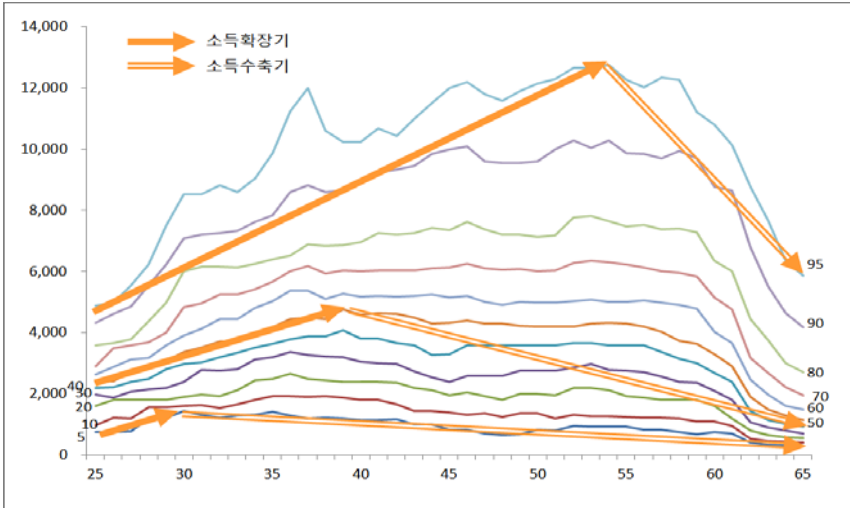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제6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I-14]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13년 귀속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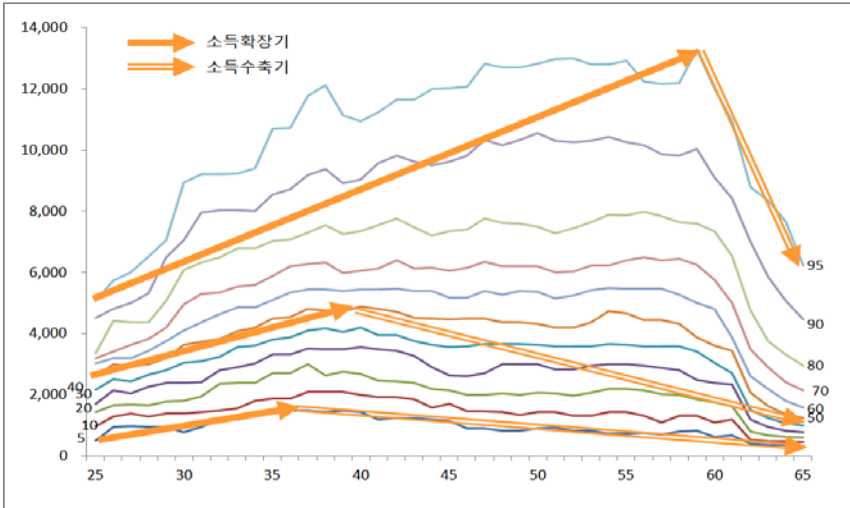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제7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I-15]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14년 귀속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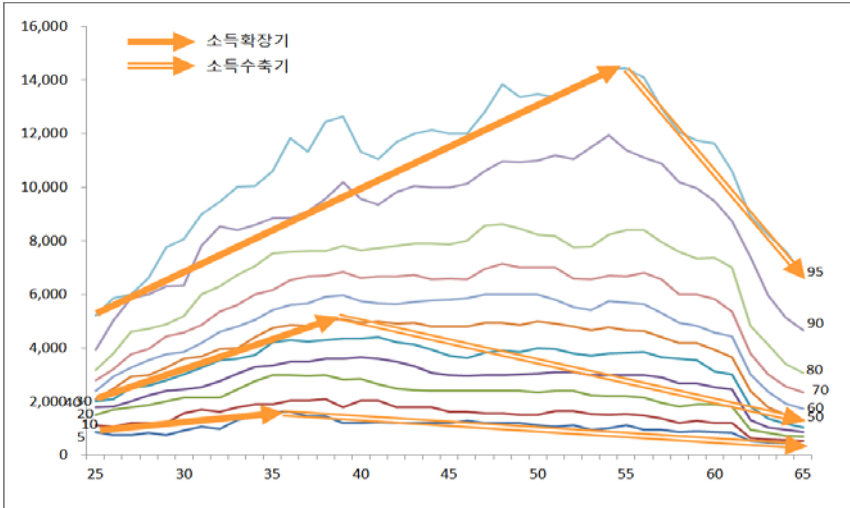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제8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I-16]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15년 귀속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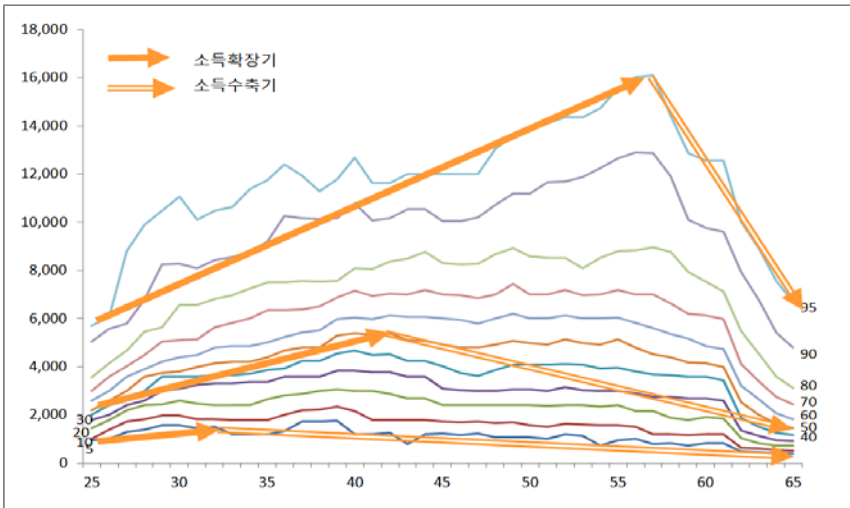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제9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I-17]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16년 귀속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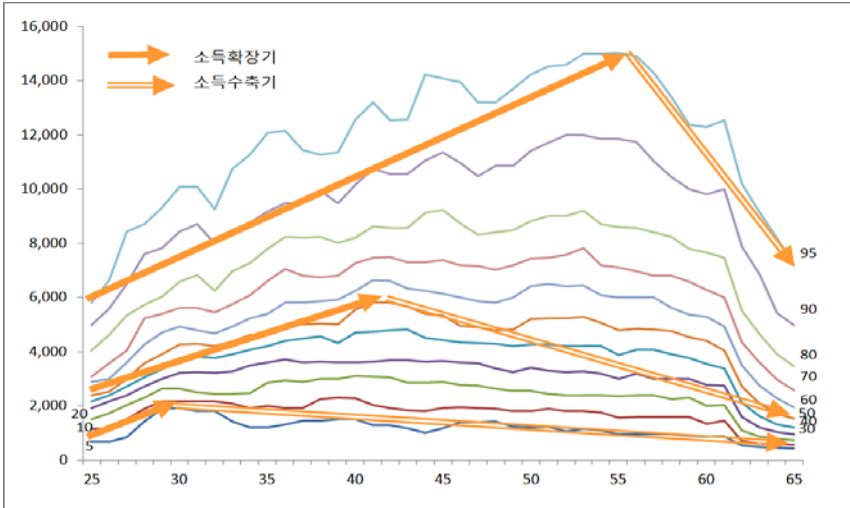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제10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I-18] 소득백분위수별 연령-소득 연계곡선(2017년 귀속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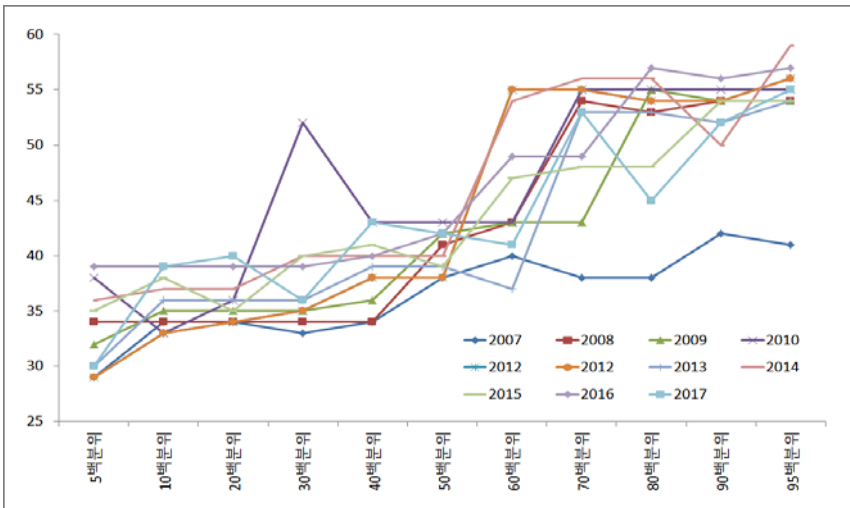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제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I-19] 가구소득백분위수별 최고소득 연령 분포(재정패널자료)

(단위: 세)



자료: 제1~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4. 분배 · 분포지수: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본 절에서는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장·단기소득 및 생애소득의 소득불균 등도를 추정·분석한다. 다만 생애소득의 경우 직접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의실험(simulations)을 통해 생애소득을 생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생애소득지니계수를 추정한다.

가. 분배지수: 단기

〈표 II-9〉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배열하고, 가로축을 누적소득비, 세로축을 각종 소득, 소비, 자산, 부채에 대한 누적비율로 설정하여 누적비 곡선 또는 집중도 곡선(concentration curves)을 도출하고, 45도선과 집중도 곡선 사이의 면적을 45도선 아래의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지수의 값으로 측정된 결과를 보여준다. 대상변수를 총소득으로 설정하는 경우를 특정하여 그 때의 집중도 곡선은 로렌즈 곡선이 되며, 나머지 변수의 경우에는 준로렌즈 곡선 또는 별도의 명칭 없이 집중도 곡선이라고 지칭한다. 상기의 지수값은 총소득의 경우 지니계수가 되며, 나머지 변수의 경우에는 준지니계수 또는 집중도지수로 지칭한다. [그림 II-20]은 연간 총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추출하여 그림으로 형상화하여 보여준다.

지니계수(또는 준지니계수) 추정결과, 대체로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0.43~0.47, 총소득은 0.42~0.45, 소비지출은 0.25~0.29, (총)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각각 0.30~0.33 및 0.31~0.42 정도로 추정되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총소득 지니계수보다 조금 더 큰데, 그 이유는 시장소득과 총소득 사이에 존재하는 이전소득이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면서 소득격차도 조금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이전소득은 민간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된다. 민간이전소득의 경우 주로 부모·자녀 사이에 생계비 또는 용돈 보조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지원액의 상대규모·비율(보다 정확히는 이전소득 수취인의 시장소득 대비 민간이전소득의 비율)이 더 커지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공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비 급여, 공적연금 등 소득재분배적 기능이 큰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장소득에 이전소득을 합산함에 따라 상대소득 분배격차가 다소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20]에서 보듯이 총소득의 경우 연도별로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시계열이 충분히 길지 않기 때문에 지니계수 변화방향에 대한 특정한 패턴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항상소득가설에 의거하면 소비지출은 항상소득의 함수이다. 경상소득은 일시소득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항상소득의 경우보다 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항상소득의 함수인 소비지출은 일시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보다 변동성이 작을 개연성이 크다. 실증분석을 통해 지니계수를 추정해보면 소득의 경우보다 지니계수가 현저하게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이나 부채의 경우에는 소득·소비지출에 비해 분포의 편중도가 크다. 그런데 <표 II-9>에 의하면 자산과 부채 모두 지니계수(보다 정확히는 집중도계수)가 시장소득이나 총소득의 지니계수보다 작다. 그런데 자산이나 부채의 크기 순서와 소득의 크기 순위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한다. 바로 이런 괴리로 인해 자산·부채와 소득 사이에 지니계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II-10>은 각 변수를 자기 변수의 크기를 기준으로 재배열하고 지니계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 결과 자산·부채의 지니계수는 각각 0.59~0.64(총자산), 0.61~0.66(부동산자산), 0.72~0.77(금융자산), 0.80~0.87(부채)로 매우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소득과 자산·부채 사이에 순위결정방식이 구조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분포의 집중도 편차 역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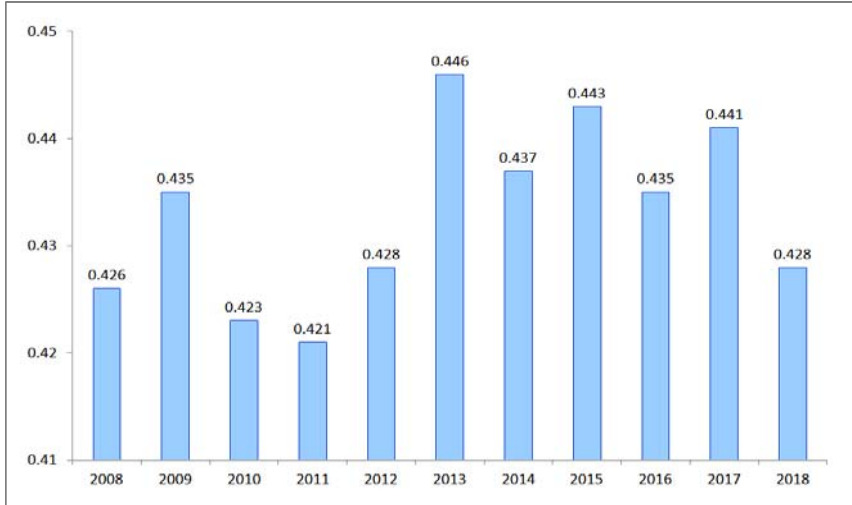
〈표 II-9〉 소득·소비지출·자산의 지니계수 추이(재정패널자료, 총소득 순위 기준)

연도	시장소득	총소득	소비지출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부채
2007	0.43159	0.42621	0.25708	0.32414	0.31559	0.39294	0.33130
2008	0.44009	0.43532	0.26379	0.32788	0.31875	0.40101	0.31432
2009	0.42840	0.42258	0.25595	0.32886	0.32084	0.38734	0.31610
2010	0.43122	0.42098	0.27585	0.33431	0.32029	0.43160	0.33334
2011	0.44034	0.42751	0.27928	0.32188	0.31092	0.39711	0.36621
2012	0.46187	0.44571	0.29614	0.32022	0.31035	0.38833	0.37772
2013	0.45652	0.43745	0.29690	0.31556	0.30394	0.39375	0.38922
2014	0.45362	0.44277	0.29053	0.30191	0.29331	0.35916	0.37656
2015	0.45831	0.43487	0.28868	0.30938	0.30561	0.33729	0.42111
2016	0.46630	0.44121	0.28669	0.30768	0.30158	0.34853	0.41418
2017	0.45334	0.42787	0.27995	0.30071	0.28636	0.38927	0.36924

주: 총소득 기준의 오름차순으로 자료를 배열한 후 지니계수(총소득) 또는 집중도계수(시장소득, 소비지출, 자산, 부채)를 추정함

자료: 제1~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I-20] 가구총소득 지니계수 추이(재정패널자료 기준)



주: 연도는 자료구축 시점 기준이며, 소득귀속연도는 자료구축 시점보다 1년씩 선행함

자료: 제1~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I-10〉 소득·소비지출·자산의 지니계수 추이(재정패널자료, 자기변수 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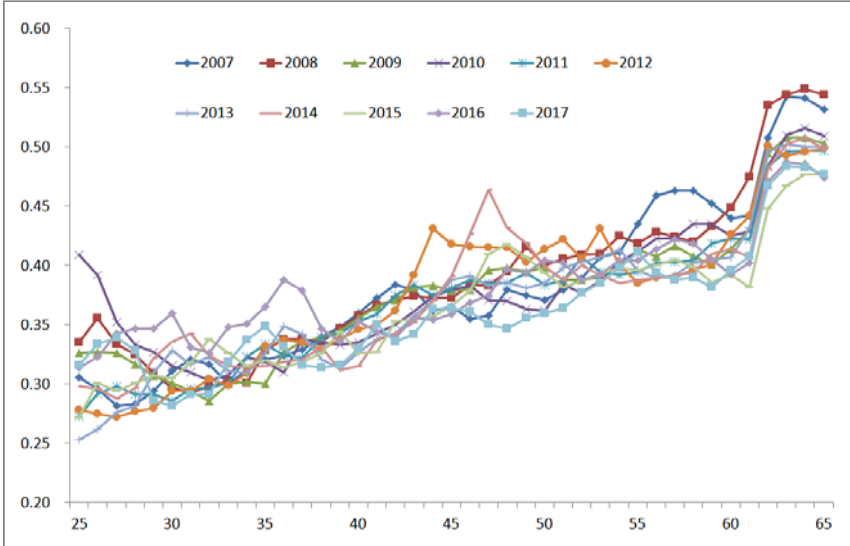
연도	시장소득	총소득	소비지출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부채
2007	0.43664	0.42621	0.36563	0.64477	0.66355	0.77503	0.82067
2008	0.44696	0.43532	0.36031	0.61719	0.63523	0.74794	0.80319
2009	0.43431	0.42258	0.35473	0.62451	0.65893	0.74829	0.80989
2010	0.43823	0.42098	0.35982	0.61805	0.63934	0.74721	0.81534
2011	0.44987	0.42751	0.35968	0.61374	0.62861	0.73436	0.80956
2012	0.47180	0.44571	0.36975	0.59706	0.60977	0.74833	0.82271
2013	0.46534	0.43745	0.36723	0.59402	0.61075	0.72235	0.82569
2014	0.46456	0.44277	0.35698	0.58512	0.60715	0.72675	0.83252
2015	0.46935	0.43487	0.35540	0.59444	0.61808	0.72040	0.83181
2016	0.47767	0.44121	0.35270	0.58192	0.61645	0.72643	0.84708
2017	0.46552	0.42787	0.35087	0.59898	0.60681	0.72593	0.86529

주: 각기 자산 변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자료를 배열한 후 지니계수를 추정함
 자료: 제1~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I-21]은 가구주 연령대별로 총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해당 그림에서 보듯이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니계수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표 II-4〉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연령별 소득 분포는 중·장년기에 정점에 도달하고 청년기 및 노년기에 낮은 값을 가지는 역U자 분포를 지닌다. 이에 따라 연령별 소득의 절대 격차는 청년기에서 중·장년기로 이행할 때 확대되다가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절대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림 II-21]에 의하면 중·장년기를 넘어 노년기로 이행하더라도 상대소득 격차(즉, 지니계수)는 계속 확대되는 패턴을 보인다. 중·장년기는 물론이고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소득위계수의 차이에 따라 생애주기 중 소득확장기·소득수축기 길이의 비대칭적 패턴 현상을 나타내는 시장선택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유추할 수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이 필요한 문제이겠지만, 시장선택 현상의 주된 원인은 생애주기에 따라 차등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기에서 중·장년기로 이행할 때 나타나는 시장선택 현상은 주로 생산성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노년기에 나타나는 시장선택 현상은 생산성 차이와

함께 건강상태의 차이에 의한 물리적 노동공급 가능성의 차이에 의한 요인이 동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I-21]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소득 지니계수 추이(재정패널자료)



자료: 제1~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나. 분배지수: 장기

〈표 II-11〉은 소득·소비·자산·부채에 대한 장기 총소득 순위를 기준으로 측정한 장기 지니계수(또는 준지니계수)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총소득에 대한 장기 지니계수를 살펴보자. 〈표 II-11〉에서 보듯이 3년 기간의 총소득 지니계수는 0.39141~0.41812, 10년 기준의 장기 총소득 지니계수는 0.37444로 추정되었다. 〈표 II-9〉의 연간소득 기준의 추정치인 0.42098(2010년)~0.44571(2012년)에 비해 장기 총소득의 지니계수가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분석 대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니계수 값이 더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간별로 소득순위가 변동하면서 중심지향효과의 결과, 장기로 갈수록 가구총소득의

상대적 진폭이 작아지면서 상대소득 격차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소득의 경우에도 총소득의 경우와 유사하게, 장기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단기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소비지출의 경우에는 연간 기준의 지니계수의 평균값이나 장기 소비지출의 지니계수값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비지출이 경상소득보다는 항상소득의 영향을 받는다는 항상소득가설에 입각해볼 때 일시소득을 포함한 단기소득보다는 장기소득이 항상소득에 더 가깝기 때문에 장기를 대상으로 소비지출의 지니계수를 구하더라도 단기 지니계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산이나 부채는 저량변수(stock variable)이기 때문에 장기 분포를 구할 때 기말 잔고를 기준으로 분포를 추정한다. 지니계수를 구하는 경우에도 장기 가구(총)소득 순위를 기준으로 기말 자산·부채 값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앞서 연간소득 기준의 소득계층별 소득·자산 결합분포 추정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과 자산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소득)탄력성의 관점에서 볼 때 자산 분포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구조를 지닌다. 그러므로 기간과 기간 사이에 나타나는 가구소득의 순위변동이 발생하더라도 가구자산(기말 잔고 기준, 부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동소이) 순위의 변동 정도는 소득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장기 소득순위를 기준으로 준로렌즈곡선(보다 정확히는 집중도곡선)을 산출하여 추정하더라도 자산이나 부채 지니계수의 장·단기 값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연유로 <표 II-11>에서 장기 자산·부채의 지니계수는 <표 II-9>의 단기 지니계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I-11〉 장기 소득·소비·자산·부채 기준 지니계수·집중도계수

길이	대상 기간	시장 소득	총소득	소비 지출	자산			부채	관측치 수
					총자산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3년	2007~2009	0,40573	0,39980	0,26900	0,34426	0,33419	0,41975	0,36181	4,122
	2009~2011	0,40141	0,39141	0,26708	0,33168	0,32176	0,40254	0,35338	4,473
	2012~2014	0,43680	0,41812	0,29634	0,32930	0,32115	0,38344	0,41297	4,579
	2015~2017	0,44107	0,41450	0,28937	0,33200	0,32067	0,40344	0,37036	4,603
10년	2008~2017	0,38991	0,37444	0,26975	0,35998	0,34645	0,44190	0,35795	3,904

주: 1. 총소득 기준의 오름차순으로 자료를 배열한 후 지니계수(총소득) 또는 집중도계수(시장소득, 소비지출, 자산)를 추정한 값임
 2. 장기(3년 또는 10년)의 경우 자산과 부채는 대상 기간 마지막 연도의 기말 잔액(balance) 기준임
 자료: 제1~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다. 모의실험(Simulations)을 통한 생애지니계수의 추정

생애소득에 대한 소득불균등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 세대의 생애를 통틀어 축적된 패널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와 같이 이상적인 형태로 완비되어 구축되어 있는 패널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패널 자료 가운데 구축된 역사가 가장 긴 미국의 PSID 자료조차, 오랜 기간을 대상으로 패널자료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연속성이 충분하지 않고, 여러 세대의 생애를 포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애소득 분석을 위한 충분성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물론 구축 대상기간의 길고 짧음을 차치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자료탈락 현상이 발생하면서 표본의 횡단면 무작위성(cross-sectional randomness)에서 점차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생애소득 분석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패널 자료를 구축하면 횡단면 자료에서 분석할 수 없는 많은 연구주제(예: 이동성, 장기 분포분석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 생애를 아우르는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난제를 우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그림 II-8]~[그림 II-18]을 추정 하였던 것처럼 생애기간 동안 소득순위의 변동이 없다는 가상적인 상황하에서, 동일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동일 소득위계수의 소득값들을 합산하여 생

애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가상적인 생애소득 불균등도(즉, 생애소득 지니계수)를 추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정 횡단면 연도자료를 기준으로 각 연령대별 동일 소득위계수의 소득값을 단순합산하여 생애소득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모든 세대(연령집단)는 동일한 경제성장 경험(business cycle) 경로를 가진다. 현실에서는 세대별로 서로 상이한 경제성장 경로를 지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 자료를 기준으로 생애소득경로를 산출하기 때문에 동일한 경제성장 및 소득경로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동일한 가격·물가수준을 공유하므로 횡단면 소득 자체가 동일한 가격·물가 수준을 지닌다. 따라서 모든 세대의 소득은 실질소득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횡단면 자료 내에서 산출한 값들의 경우에는 명목치를 실질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 가격 요소의 시간할인율에 대해서는, 논의의 단순화 차원에서, 편의상 0이라고 가정한다. 다만 본 절에서는 기간과 기간 사이에 소득순위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득이동에 따른 생애소득 격차 효과는 추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상정하면 모든 연령집단은 생애에 걸쳐 동일 소득경로를 지닌다. 만약 연령집단별로 집단 내 소득 분포가 동일하다면 모든 연령집단의 생애소득 지니계수는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연령집단별로 소득 분포가 상이하기 때문에, 비록 개별적으로 특정 소득위계수에 위치한 모든 가구의 생애소득경로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연령집단 내의 소득 분포가 서로 다르고 관측치별 가중치도 다르기 때문에 각 연령집단별 생애소득 지니계수는 다소간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림 II-22]는 상기의 조건하에서 2017년 재정패널자료를 기준으로 각 연령대별 가구소득 지니계수와 생애소득 추정치를 기준으로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한 생애소득지니계수 추정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연령대별 연간 기준 (총)소득 지니계수는 대체로 0.27~0.48 범위 내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니계수 값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각 연령대별 추정생애(총)소득 지니계수는 대체로 0.33~0.35 범위 내에서 대체

로 비슷하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는, 모든 연령대의 지니계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젊은 청년기 연령대의 경우에 단기소득 격차보다 생애소득 격차가 더 큰 반면, 노년기 연령대의 경우에는 반대로 생애소득 격차보다 단기소득 격차가 더 크다는 점, 셋째, 생애소득 지니계수 값은 대체로 중·장년기 지니계수와 수준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첫 번째 특성에서 모든 연령대의 생애소득 지니계수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은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가 동일한 경제성장(business cycle)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세대별로 경제성장률과 소득 수준(또는 1인당 GDP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대별로 각기 다른 평균소득을 가진다. 따라서 세대 간 생애소득 불균등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천이 실제 생애주기 소득 흐름의 패턴 차이에 의한 것인지 또는 세대별로 평균소득 수준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그림 II-22]는 이러한 2가지 요인 가운데 세대별로 서로 다른 경제성장 경험을 가짐에 따라 나타나는 소득불균등도의 차이 효과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세대 간 소득 분포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소득불균등도를 고찰하기 위해 특정 횡단면 시점으로 분석시점을 고정시킴으로써 세대별 경제성장 경험의 차이 요인을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만약 모든 세대 내의 소득 분포가 동일한 분포구조를 지닌다면, 세대(즉, 가구주 연령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가 동일한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한다고 할 때 모든 세대의 생애소득 지니계수는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듯이 생애소득 지니계수는 변화의 진폭이 0.33~0.35 정도로서 매우 작지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성은, 청년기 세대의 경우 단기소득 격차보다 생애소득 격차가 더 큰데, 그 이유는 현재(청년기 시점)의 소득 분포는 아직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초기인 만큼 아직 소득획득 활동이 본 궤도에 도달하기 이전 상태에서 대체로 소득 분포가 하향평균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생산성이 충분히 발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성 차이에 의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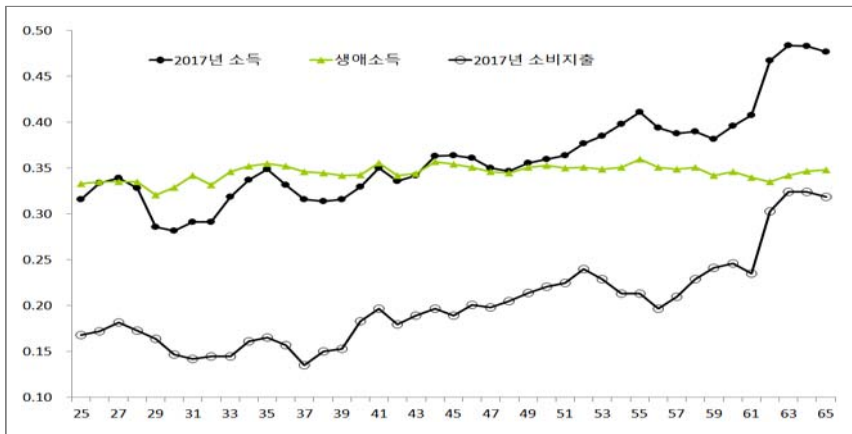
선택 현상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기이다. 이에 따라 내재되어 있는 생산성 차이가 아직 경제활동 및 소득 차이로 충분히 구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불균등도가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기에서 장기로 이행할수록 점차 생산성 차이가 두드러지면서 시장선택에 따른 상대소득 격차가 확대되기 때문에 청년기 연령대의 경우에는 단기소득 지니계수보다 생애소득 지니계수가 더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닌다. 물론 시장선택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한 일시소득·일시손실 등을 포함하여 동일 연령집단 내에서 소득순위의 변동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집단 내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으로 인해 평균지향효과가 나타나면서 장기소득 격차와 단기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청년기 세대의 경우에는 소득이동성에 의한 장기소득 불균등도 축소효과보다 시장선택에 의한 장기소득 불균등도 확대효과가 더 크다. 그 결과 청년기의 경우에는 생애소득 지니계수가 단기소득 지니계수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노년기의 생애소득 지니계수는 단기소득 지니계수보다 생애소득 지니계수가 작다. 노년기 연령대의 경우 앞서 설명하였듯이 생산성 차이, 건강 등 노동공급 능력의 차이 등에 따라, 비록 절대 격차의 크기는 중·장년기에 비해 작더라도, 상대소득 격차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노년기의 상대소득 격차(단기소득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큰 값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노년층의 경우 비록 현재 시점에서의 소득 불균등도는 크지만, 생애 동안의 청년기와 중·장년기에는 현재 시점보다 상대소득 격차가 작았다. 따라서 과거 시점의 소득을 합산하여 생애소득의 관점에서 소득 불균등도를 산정하면 현재 시점에서 관찰되는 단기소득 불균등도보다 상대 격차가 작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노년층의 가구소득 수준은 생애주기상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비록, 노년층의 상대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값이 크더라도 생애소득 중 노년기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노년기의 높은 지니계수 값이 생애소득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기와 노년기 모두 생애

주기상 실질소득의 크기가 중·장년기보다 작기 때문에 중·장년기의 소득 불균등도가 청년기 및 노년기의 소득 불균등도보다 가중치 측면에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규모효과(scale effect)로 인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세 번째 특성은, 주로 규모효과와 중간값 효과에 기인한다. 생애주기상 중·장년기에 평균적으로 연간 소득규모가 가장 크다. 그러므로 생애소득 가운데 중·장년기의 소득점유비가 가장 크다. 따라서 생애소득 불균등도를 측정할 때에도 중·장년기의 소득에 가중치가 가장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생애소득 지니계수는, 중·장년기 때의 지니계수 값에 가깝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규모효과로 인해 생애소득 지니계수는 중·장년기의 단기소득 지니계수와 수준이 비슷하다. 그 밖에도 [그림 II-22]의 연령대별 연간소득 지니계수 값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속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중·장년기의 지니계수가 중간 수준의 지니계수 값을 가진다는 것(중간값 효과)도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22] 가구주 연령별 단기소득·소비지출 및 생애소득 지니계수의 비교



- 주: 1. 소득과 소비는 2017년 귀속분
- 2. 생애소득은 횡단면 자료 기준으로 2017년 현재 연령집단 내 소득위계수가 모든 연령에 걸쳐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여타 연령대 동일 소득위계수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함. 횡단면 자료이므로 2017년 현재 가격 기준의 실질소득을 나타내므로 시간할인 없이 단순 합산함

자료: 제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Ⅲ. 가상패널자료 구축

1. 개요

이 장에서는 앞서 정리한 연령-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단기적 관점에서의 소득분위별 수혜 및 부담 수준은 횡단면 분석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소득분위별 수혜 및 부담은 앞서 설명한 소득의 생애 시점 간 격차와 소비의 평탄화로 인해 단기의 그것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애기간을 포함하는 장기간의 패널자료가 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의 생애주기 전체를 추적하는 패널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가상의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은 크게 다음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가상패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선정하고 여기에 제Ⅱ장에서 도출한 연령별 평균소득 정보를 적용하여 연령별 소득 정보를 생성한다. 제Ⅱ장의 연령-소득 정보의 경우 2018년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였기에 기초자료 역시 2018년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생성된 연령-소득 자료에 가구원 수를 생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기초자료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변수들은 가구주 연령, 성별, 거주지역, 학력 등의 기초 정보와 제Ⅱ장에서 구축한 연령-소득 정보가 전부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만으로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연령 정보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에 기초자료의 가구원별 개인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령대별 가구원 수 자료를 생성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소득과 수혜 정보를 생성한다. 여

기에는 가구 재산, 직접세 납부액, 소비세 관련 정보 및 현물급여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다. 항목별 추정은 기초자료인 2018년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초자료에서 추정된 모수값을 생성된 가상패널자료에 적용하여 신규 변수를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기에 일부 생성된 신규 변수들이 이 과정에서 활용되었다.

2. 가상패널자료 생성을 위한 기초자료

자료 구축에 사용한 기초자료인 2018년 재정패널자료는 수혜-부담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지출 정보들과 더불어 가구별 납세정보까지 상세히 담고 있어 분석에 적합한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정부지출로부터의 수혜와 이를 위한 납세자의 부담을 분석하기에 유용한 측면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이러한 재정패널자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요 변수들을 추정하여 생성하는 접근법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자료 생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의 부족한 설명력으로 인한 문제점들의 경우 기초자료의 기초통계에 기반을 두고 통계적 추정방법을 접목시키는 혼합 방식 또한 고려하였다.

우선 가상패널자료 생성의 기초가 되는 2018년 재정패널자료의 특성을 살펴보자. 2018년 재정패널자료는 2017년을 조사대상 연도로 하고 있으며 총 4,816개 가구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변수들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일부 가구들을 제외하고 총 4,548개 가구들을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추정에 사용한 기초자료의 변수들은 다음의 <표 III-1>에서 정리하였다. 재정패널자료에서 가상패널 생성에 활용한 변수들은 크게 가구 특성, 가구주 특성, 재산 및 소득, 직접세, 부가가치세, 현물급여 관련 변수들로 구분할 수 있다. 가구 특성 변수는 가구식별번호, 가구원 수, 가구원별 연령 및 성별, 가구원 동거 여부 등의 자료가 존재한다. 이를 이용하여 기초자료의 연령별 가구원 수 정보를 정리하였다.

가구주 특성 변수는 가구주의 연령, 학력, 성별, 거주지역 등이 존재한다.

해당 변수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기에 제Ⅱ장의 연령-소득 자료의 모든 연령대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물론 가구주 거주지역 변수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나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때문에 2017년의 기초자료에서 조사된 거주지역이 과거와 미래에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을 하였다.

자료의 한계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한 또 다른 가정으로 가구주의 학력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정을 사용한 것은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고려할 때 명확한 한계이기는 하나 제한된 기초자료의 정보만으로 다른 합리적 추정을 할 수 없었기에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외의 모든 변수들의 경우 기초자료와 연령-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하였다. 다음 절에서 설명할 세부 변수별 가상 자료 생성방법을 통해 약 90개의 변수들을 생성하였다. 보고서 지면의 한계로 인해 모든 변수들의 생성방법을 세세히 담지는 못하였지만 이하에서 설명할 주요 항목별 생성 방식 및 결과들을 통해 전체 변수들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Ⅲ-1〉 기초자료 내 활용 변수

범주	변수명	생성 여부
가구 특성	가구 식별번호	×
	가구원 수	○
	만 5세 미만 가구원 수	○
	만 6세 미만 가구원 수	○
	만 7세 미만 가구원 수	○
	만 10세 미만 가구원 수	○
	만 15세 미만 가구원 수	○
	만 18세 미만 가구원 수	○
	대학 재학 이하 가구원 수	○
	만 65세 이상 가구원 수	○
	거주지역	×

〈표 III-1〉의 계속

범주	변수명	생성 여부
가구주 특성	연령	×
	성별	×
	학력	×
재산 및 소득	가구재산(소득인정액)	○
	시장소득	○
	민간소득	○
직접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합	○
부가가치세	유류 지출	○
	주거 관련 지출	○
	식료품 및 외식 지출	○
	기호품 지출	○
	교통 및 통신 지출	○
	교육비 지출	○
	보건의료 지출	○
	기타 생활비 지출	○
현물급여 관련	의료비 수혜 항목	○
	노인장기요양보험 항목	○
	초·중·고 교육비 수혜 항목	○

자료: 저자 작성

3. 가상패널자료 생성

가. 연령-소득 자료의 구축

가상패널자료 생성의 첫 번째 작업은 개별 가구의 가구주 연령 변화에 따른 가구주의 소득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Ⅱ장에서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연령-소득 연계분포를 추정하였다. 특정 연령에 소득백분위수가 p 인 가구주는 생애기간을 통틀어 동일한 소득백분위수인 p 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령별 소득 분포를 추정하였다.

이 가정을 이용하여 제Ⅱ장에서 생성된 연령-소득 연계분포 자료와 4,548개의 가구주 소득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 가구주별 25세에서 85세까지의 소득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7년에 소득백분위수가 p 인 50세인

가구주의 25세에서 85세까지의 소득 수준은 모든 연령에서 소득백분위 p 를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연령-소득 연계분포 자료와 매칭시켜 특정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 정보를 생성하였다.

매칭 과정에서 기초자료의 가구주별 소득액이 연령-소득 분포 자료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장 인접한 소득백분위의 자료값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소득액 정보를 생성하였다. 가령, 기초자료에서 50세 연소득 3,450만원인 가구주의 각 연령별 소득액은 연소득 3,400만원에 해당하는 백분위값의 연령별 소득과 연소득 3,500만원에 해당하는 백분위값의 연령별 소득을 평균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기초자료의 가구주 소득액과 연령-소득 분포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기초자료의 50세 연소득 3,4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백분위값이 2개가 존재하는 경우 두 백분위값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소득액을 계산하여 해당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액 정보로 사용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277,428개⁵⁾의 가구주를 생성하였다. 여기에는 기초 자료에 존재하는 가구주 정보인 4,548개의 관측치와 더불어 연령-소득 연계 분포 자료와의 매칭을 통해 생성된 가상의 가구주 정보가 포함된다.

나. 가구원 정보 생성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 정보 다음으로 생성한 변수는 가구원 정보이다. 가구원 정보는 여타 변수의 추정과정에서 활용되거나 정부 수혜 수준을 분석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사용된다. 분석에 필요한 가구원 정보는 연령대별 부양가족 수, 총가구원 수, 교육단위별 부양자녀 수 정보이다.

가구원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기초자료에서 가구원 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식별하고 적합한 추정식을 세워 추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방법의 경우 가구원 수에 영향을 주는 가구 변수들이 충분하다는 환경에서

5) 4,548개×61년도(25세에서 85세까지).

시도해볼 수 있겠으나 가상패널 생성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이 단계에서 가상패널자료에 존재하는 변수가 가구주의 특성 변수와 연령별 소득 변수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떠한 추정 기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기초자료에 부합하는 가구원 수 분포는 추정하기 어렵다. 즉, 추정방법을 통해 특정 연령-소득을 갖는 가구주의 가구원 수를 생성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일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보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또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추정을 통한 가구원 정보 생성이 어려운 것은 관측치 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가상패널에 존재하는 변수의 수가 극히 부족하다는 사실에 기인하기 때문에 관측치 수가 증가하는 것이 부정확한 추정방법을 교정할 수는 없다. 즉, 가상패널의 가구원 정보의 생성은 기초자료의 보강이나 추정방법의 개선을 통해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초자료의 가구원 수 정보와 추가 가정들을 이용하여 가상패널의 가구원 수 정보를 생성하였다. 우선, 가구원의 결혼 및 사망 시점에 대해 가정하였다. 통계청 2017년 혼인에 대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⁶⁾ 2017년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각각 32.9세와 30.2세로 조사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9년 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⁷⁾ 2017년 남성과 여성의 평균 사망연령은 각각 약 79.7세와 85.7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평균 초혼 연령에 미달하는 가구들의 경우 추가적인 가정을 통해 가구원 수를 생성하였다. 가령 기초자료 내에 31세 독신여성 가구주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가구의 인적 구성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대로 29세 독신여성 가구주의 경우 30세에 혼인을 하고 2017년의 평균 출산율 수준인 1명의 자녀를 두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세 번째로, 가구주의 연령이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인 가구들의 경우 현재의 인적 구성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자료를 생성하였다. 가령, 35세 남성 가구주가 2명의 자녀와 1명의 배우자 그리고 1명의 부모를 봉양하고

6) 통계청, 「2017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2018. 3. 20, p. 1

7) 보건복지부,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 보도자료, 2019. 7. 19, p. 4

있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연령을 가구주 연령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배우자의 존재 여부는 해당 가구주가 초혼 연령에 이르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자녀들의 연령이 초혼 연령에 이르게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봉양 부모의 경우 앞서 설명한 남녀 각각의 기대수명에 이를 경우 사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노인 단독 혹은 부부 가구들의 경우에도 앞선 가정들을 이용하여 가구원 정보를 생성하였다.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평균 초혼 연령에 결혼을 하였고 평균 1명의 자녀를 가졌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녀의 독립은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균 초혼 연령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상의 가정을 통해 가구원을 생성하게 될 경우 부모를 봉양하는 가구가 기초자료에서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가구들로부터 파생된 생성 가구들에만 존재하게 된다. 초혼 연령을 기준으로 자녀의 독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봉양에 대해 추가적인 가정을 하는 것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한 명의 부모 이상을 봉양하고 있는 가구의 수는 전체 기초자료의 약 5%에 해당하며 이로 부터 파생된 가구들에 봉양 부모가 존재할 수 있다. 부모의 사망 시점 또한 평균 기대수명 자료를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이 방식을 통해 가상패널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를 생성하였다. 해당 자료에 배우자, 부양자녀, 봉양 부모 각각의 성별과 연령 자료가 존재하기에 이를 이용하여 연령별 부양가족 수를 계산할 수 있다. 교육비 수혜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별 부양자녀의 수 정보 또한 이를 통해 계산하여 생성하였다.

다. 소득인정액의 추정

가구 재산의 경우 기초연금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 기초자료인 재정패널 자료는 자산 및 부채를 가구 단위에서 조사하고 있으나 자산 및 부채의 가구 내 연도별 변동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한 추후 분석에서 재산 변수가 기초연금 분석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연구는 보다 안정적인 분석을 위해 자산 대신 기초연금 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정에 사용한 변수는 다음의 <표 Ⅲ-2>에서 정리하고 있다. 독립변수로 가구주 특성 변수들인 연령, 성별, 거주지, 학력과 가구원 수 정보 그리고 시장소득을 이용하여 각 독립변수의 추정치를 생성하였다. 이를 가상패널자료의 가구주 특성 변수들과 앞서 생성한 가구원 수 정보에 적용하여 가상패널자료의 소득인정액 변수를 생성한다.

<표 Ⅲ-2> 소득인정액의 추정

종속변수		ln(소득인정액)	
독립변수		상관계수	(표준오차)
	연령	0.073***	(0.009)
	연령의 제곱	-0.001***	(0.0001)
	ln(시장소득)	1.513***	(0.023)
	가구원 수	0.077***	(0.017)
	중졸	0.414***	(0.053)
	고졸	0.490***	(0.076)
	대졸 이상	0.565***	(0.060)
	성별	-0.498***	(0.046)
	상수	-10.182***	(0.270)
지역디미 포함 여부		○	
관측치		4,548	
결정계수(R ²)		0.720	
조정결정계수(A ^d , R ²)		0.718	
잔차의 표준오차		1.102 (df = 4523)	
F 통계량		484.282***(df = 24; 4523)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제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라. 직접세 납부액의 추정

이하 분석에서 사용할 세금 납부 관련 변수는 ‘직접세 총납부액’이다. 이를 위해 기초자료의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이자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을 종속변수로 두고 해당 변수와 가구주 특성 변수, 소득, 가구원 수 정보와의 관계를 추정하여 가상패널용 변수를 생성하였다.

하지만, 분석에 사용하는 기초자료의 직접세 납부액 정보는 면세점 이하

의 가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장소득과 직접세 납부액 간의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직접세 납부액의 크기가 소득 이외의 여러 변수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령, 가구의 구성, 지출 유형 및 유형별 지출액, 시장소득의 구성 등의 변화로 인해 동일한 시장소득을 수령하는 가구의 직접세 납부액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직접세 납부액의 이러한 특성은 기초자료에서 잘 드러난다. 기초자료에 존재하는 총 4,548개 가구들 중 직접세 납부액이 0원이 아닌 가구의 수는 3,259개 가구로 약 62%의 가구에서 직접세 납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추정에 사용될 종속 변수의 분포가 0에 크게 치우친 형태를 지니고 있어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 III-3>과 같이 포아송 회귀분석법(Poisson Regression without a count)을 적용하여 가상패널의 직접세 납부액 정보를 추정하였다. 추정에 사용한 변수는 가구주 특성 변수들과 소득 및 가구원 수 정보를 사용하였다.

〈표 III-3〉 직접세 납부액의 추정

종속변수		직접세 납부액	
		상관계수	(표준오차)
독립변수	연령	0.078***	(0.002)
	연령의 제곱	-0.001***	(0.00002)
	ln(시장소득)	2.073***	(0.003)
	가구원 수	-0.109***	(0.002)
	중졸	0.454***	(0.013)
	고졸	0.635***	(0.014)
	대졸 이상	0.971***	(0.013)
	성별	-0.273***	(0.008)
	15세 미만 부양가족 수	0.059***	(0.002)
	상수	-16.063***	(0.042)
지역더미 포함 여부		○	
관측치		4,548	
로그 우도		-lnl	
아카이케(Akaike) 정보 기준		lnl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제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마. 부가가치세 관련 소비액 추정

부가가치세 관련 소비지출액 정보들 중 이하 분석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자동차 및 오토바이 관련 지출(구매액, 유류비 지출액 등), 주거 관련 지출(전기료, 수도료, 주택수리비, 난방비, 기타 주거비 등), 식료품 구입비와 외식비, 주류 및 담배 구입비, 교통 및 통신비, 문화활동비, 가전제품 구입비, 통신장비 구입비, 가구, 악기 및 레저장비 구입비, 의류 잡화 및 장신구 구입비, 화장품 및 이미용 비용, 교육비 지출액, 의료비 지출액 등이 포함된다.

소비지출액 항목들 중 차량 구입비용, 가전제품 구입비용, 악기 구입비용 등과 같이 내구재를 구입하기 위한 지출들의 경우 단년도 정보만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평균적인 지출액 값을 이용하여 가상패널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는 내구재에 대한 지출을 평균적 수준에서 맞추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결과 전체 가상패널에서의 평균적 내구재 지출액은 기초자료의 평균적 내구재 지출액과 같아지게 된다.

기타 소비액들의 경우 앞선 추정식들과 유사하게 가구주 특성 변수들, 소득, 가구원 수 등으로 추정하여 변수를 생성하였다. 교육비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 가구원 수의 변수를 통제하였고, 보건의료비의 경우 이와 더불어 65세 이상 가구원의 수를 함께 통제하였다.

바. 현물급여 관련 변수

현물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들의 경우 크게 의료비 수혜, 교육비 수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별 급여 등이 존재한다. 이 중 의료비 수혜와 관련된 변수들은 앞선 의료비 지출액 추정치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교육비 수혜 관련 변수들은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에 있는 가구원 수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앞서 가구원 수 추계 방식과 동일한 기법을 적용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변수들의 경우 전체 기초자료 가구 수 중 수혜대상이 되는 관측치 수가 많지 않고 기초자료 및 가상패널에 존재하는 변수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지 않은 상황

이기에 추정을 통한 변수 생성은 적절한 접근이 아닐 수 있다.

이에 기초자료로부터 주어진 관련 분포를 주어진 것으로 두고 이를 추정 방법과 결합하여 기초자료와 가상패널의 전체적인 분포를 유사하게 맞추는 방식으로 가상패널을 생성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초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이항변수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진행한다. 가령, 기초자료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최대 대상자 수가 N 명인 경우 N 명인 가구를 1로, 그보다 작은 가구에 0을 부여하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이 변수와 가구주의 연령, 소득, 성별, 학력, 거주지역 간의 상관관계를 로짓 모형으로 추정한 뒤 가상자료에 해당 추정치를 반영하여 가상패널의 특정 가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가 N 명일 확률을 추정한다.

세 번째로, 이 확률이 실제 기초자료의 분포와 같아지는 수준을 찾고 그 이상인 가구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를 N 명을 부과한다. 기초자료의 4,548가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가 N 인 가구의 비중이 p 인 경우 가상패널 277,428가구 중 $277,428 \times p$ 개의 가구에 대상자 수 N 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설명한 방법을 대상자 수 N 명에서 1명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가상패널의 가구원 수 정보를 생성하였다. 이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활용가능한 변수들과 특정 가구원 수의 상관관계를 추정한 값을 활용하면서도 기초자료의 분포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변수 생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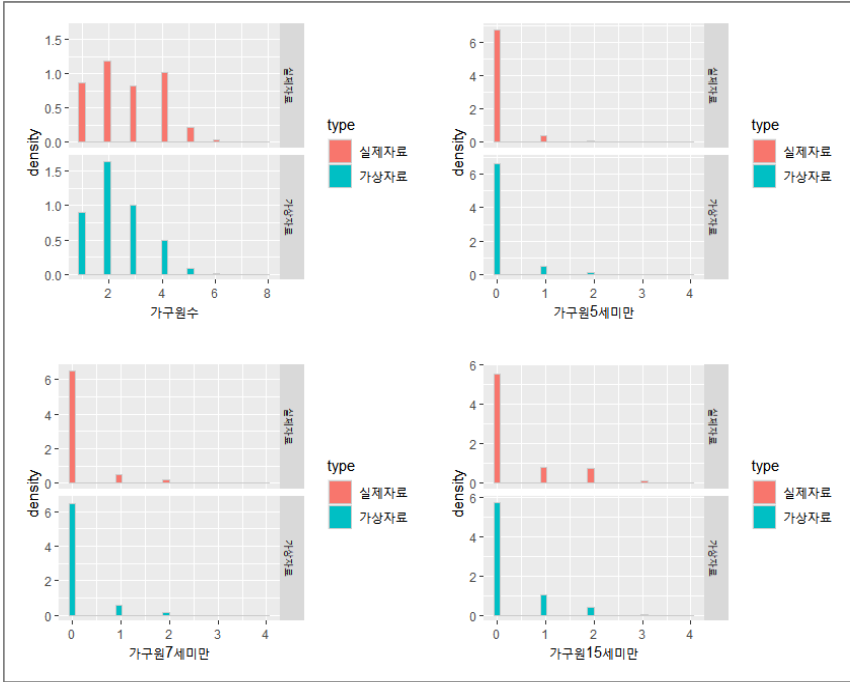
4. 가상패널자료 생성 결과

이 절에서는 생성된 가상패널을 실제자료와 비교하여 보고한다. 여러 통계치를 검증하였으나 지면의 한계로 전체 분포를 실제 기초자료 분포와의 격차를 통해 보고하고 있다.

우선, 가구원 수와 관련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실제자료의 분

포와 상당히 유사하나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실제자료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구원의 독립을 평균 초혼 연령으로 설정하고 있는 현재 자료 생성법의 가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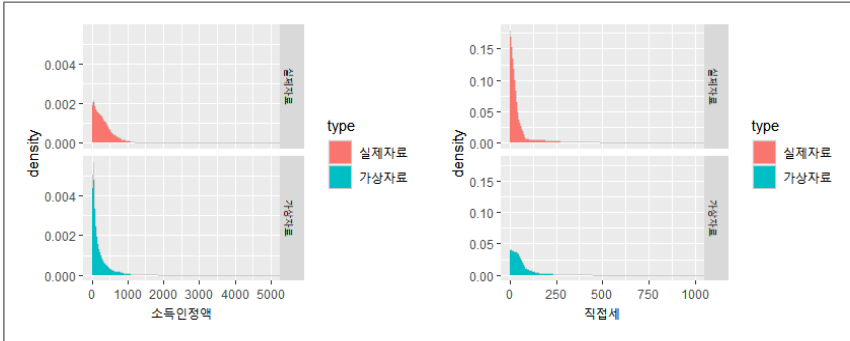
[그림 III-1] 가구원 수 분포 비교



자료: 제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다음으로, 가구재산의 대리변수인 소득인정액과 직접세 납부세액 추정결과를 살펴보자. 가상자료의 분포는 실제자료와 유사한 편이다. 하지만 재산의 대리변수인 소득인정액 값은 가상패널 자료가 더욱 0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세 납부액 자료는 실제와 가상자료 모두에서 0에 매우 치우친 분포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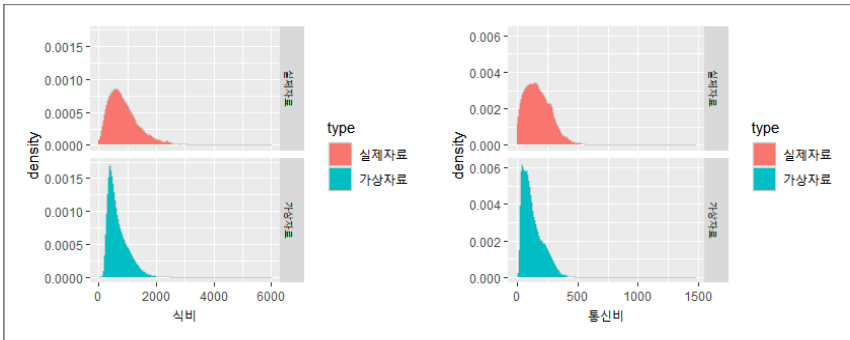
[그림 III-2] 소득인정액과 직접세 납부액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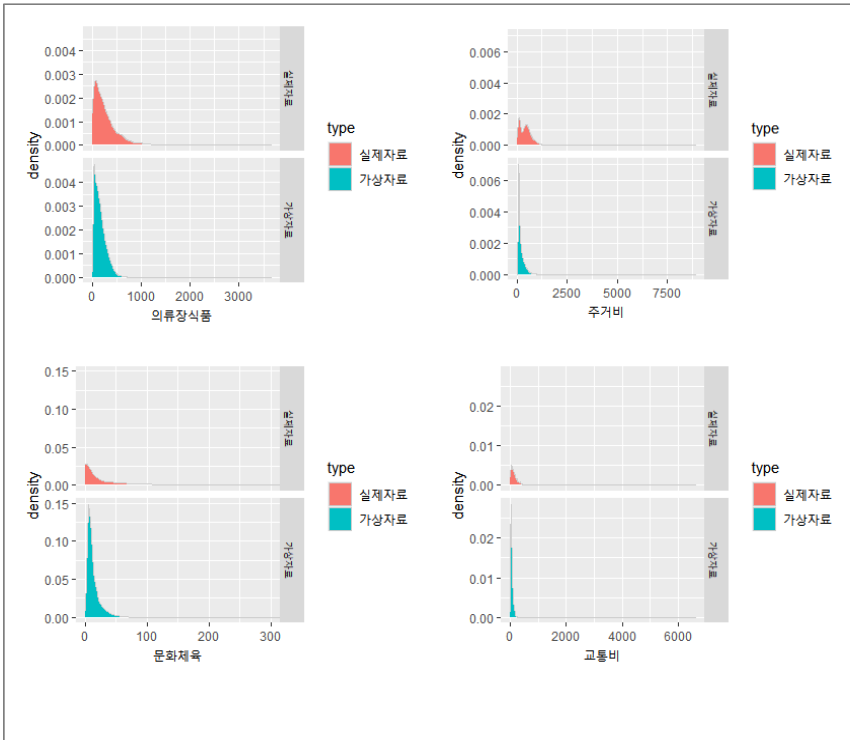
자료: 제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차 추정

부가가치세 납부액 계산에 필요한 소비지출 항목들은 그 수가 많아 이하에서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포를 비교한다. 크게 식비, 통신비, 의류 및 장식품, 주거비, 문화체육 그리고 교통비로 분류하였다. 거의 모든 분류에서 기초자료와 생성자료의 분포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가상패널의 분포가 조금 더 0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초자료의 분포가 0에 치우친 분포라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I-3] 소비지출액 분포 비교



[그림 III-3]의 계속



자료: 제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이상에서 2018년 재정패널자료와 연령-소득 자료를 연계하여 가상패널을 생성하는 절차를 소개하였다. 생성된 가상패널 자료의 경우 연령-소득 결합 분포에서 생성을 시작하기에 가상의 연령과 소득 정보는 기초자료에 부합하게 생성된다. 그 이후의 작업을 통해 추정된 여타의 변수들의 경우 연령, 소득,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가구 및 가구주 특성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기초자료와 유사한 분포로 추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상패널 자료의 생성은 일부 가구 특성 변수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 기초자료의 통계적 분포를 최대한 따르는 추정방법을 적용하고 다양한 추정방법을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자료 생성 과정은 기초자료

의 부족한 정보로 인해 여러 가정들에 의존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가상패널 자료의 구축 과정에서의 이러한 한계는 장단기 수혜와 부담을 분석한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완화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가상패널 자료를 개별 가구 단위의 분석이 아닌 연령별 혹은 소득분위별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개별 가구 단위에서 생성된 변수값이 일부 부정확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득과 연령을 연계하여 설정한 뒤 여타 변수들을 소득 및 연령에 기초한 평균에서의 이탈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가구의 장단기 수혜·부담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의 집계변수를 통해 분석하는 데에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IV. 장단기 수혜 · 부담 분포

1. 분석 개요

본장은 제Ⅲ장을 통해 구축된 가상패널자료에 기반하여 조세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비교한다. 장기와 단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한다. 첫 번째는, 단년도 소득과 생애소득 관점에서 조세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비교한다. 두 번째는 장래가구추계를 이용하여 현재의 조세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가계의 수혜와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재정정책으로 다음의 6가지 제도, 즉 기초연금, 아동수당, 교육수혜, 의료수혜,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고려한다. 정부가 가계에 이전하는 사회복지정책은 현금이전과 현물이전이 존재한다. 공적현금이전 중에서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제도 효과를 분석한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모두 정책 대상 선정에서 연령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단년도 소득에 대한 분석과 생애소득을 이용한 분석에서 재분배 효과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공적현물이전 중에서는 교육수혜와 의료수혜를 분석한다. 두 현물이전 정책은 현물이전 중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교육서비스는 학령기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의료서비스는 이용 빈도가 높은 고령층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즉, 연령대별로 그 이용 행태에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과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가계가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결정하는 조세정책 중에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두 제도 모두 가계가 부담한 국세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소득세는 소득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과세하는 세목인데, 소득과 소비의 생애주기적 특성이 다르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소득은 경제활동이 왕성한 중장년 시기에 높고 사회진입 초기인 청년 시기와 은퇴 이후 기간인 노년 시기에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에 기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는 연령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반면 소비는 저축이나 차입 등을 통해 소득을 다른 기간으로 이전하여 소비 수준을 평탄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소득과 소비의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단년도 소득과 생애소득 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2. 분석방법

분석 대상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제Ⅲ장에서 구축된 가상패널자료를 기반으로 미시모의실험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미시모의실험은 기본적으로 개별 가구에 대해 관측 가능한 정보로부터 분석 대상 제도를 적용하여 수혜 및 부담 규모를 추정된 뒤 관련 기초통계를 정리 및 비교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미시모의실험 모형은 선행연구에서 재정패널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모형을 확장하여 활용한다. 오종현 외(2017)와 오종현·김우현(2018)은 재정패널조사를 기반으로 한 수혜-부담 분석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모형은 횡단면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단기 수혜 및 부담 분포에 대한 분석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오종현 외(2017)와 오종현·김우현(2018)의 모형을 생애소득을 분석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단기와 장기의 수혜-부담 분포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공적현물이전에 대한 추정 중 교육수혜는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의 방법론을 활용하고, 의료수혜는 오종현 외(2017)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는 교육부와 각 지방 교육청의 교육통계연감 등 교육재정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하였다. 한편, 오종현 외(2017)는 의료수혜 추정 시 재정패널자료의 의료비 지출 정보를 활용하여 의료수혜 규모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 또한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오종현 외(2017)의 방법론을 활용한다. 오종현·

김우현·권성오(2019) 또한 의료수혜를 추정하였으나, 의료비 지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와 방법론을 달리한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이다. 생애주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연령-소득계적은 개인단위에서 분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소비, 자산, 부채에 대한 자료는 가구단위로 존재하여 개인단위의 분석이 어렵다. 다만,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가구원 수 등 연령의 변화에 따라 가구의 특성이 변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가구주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가구의 구성은 제Ⅲ장에서 정형적인 가정하에 구축된 가상패널자료를 활용한다.

오종현 외(2017) 등의 선행연구는 조세재정정책 전반에 걸친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생애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단년도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비교해 자료의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제도의 규모가 크지 않거나 모의실험분석을 위해 필요한 변수의 관측치가 많지 않은 경우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조세재정정책 전반에 걸친 분석을 수행하기보다는 생애주기에 따른 변동성이 유의미하면서 제도의 규모가 큰 6가지의 제도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분석한다.

3. 분석제도와 미시모의실험 개요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조세재정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특히, 미시모의실험 분석에 고려되는 제도적 특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하에서 표를 통해 제시되는 수치들은 미시모의실험 모형 분석에 활용되는 수치들이다.

분석을 위한 제도의 기준 시점은 분석 대상 자료와 동일한 2017년이다. 다만, 공적연금이전에 해당되는 아동수당의 경우 2017년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였고, 기초연금의 경우 2017년 이후 확대되고 있다. 이에 공적연금이전에 대해서는 2020년 제도를 기준으로 모의실험분석을 실시한다.

가. 공적연금이전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기초연금은 소득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대상이다. 소득요건은 만 65세 이상의 사람 중 그 대상자가 약 70%가 되는 수준으로 결정된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야 한다. 이 소득인정액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수준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반영된다. 소득인정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이 생애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한다. 다만 가상패널자료 구축 시 재산수준을 직접적으로 패널자료로 생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2017년 단년도 자료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한 뒤 이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분석한다.

〈표 IV-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소득평가액 = $0.7 \times (\text{근로소득} - 96\text{만원}) + \text{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9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 49

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28&lsiSeq=210305>, 검색일자: 2020. 9. 24.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2020년 제도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2020년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148만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월 236만 8천원이다.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들에게 일반적으로 25만 4,760원씩 지급되며, 부부의 경우 2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한편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일반수급자보다 더 높은 3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받으며, 부부의 경우 역시 20%가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저소득 수급자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38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60만 8천원이다. 다만, <표 IV-4>와 같이 일반 선정기준액과 저소득 선정기준액 주변에서의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액과도 연동되는데, 본 연구는 국민연금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가구가 국민연금 미수급자인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연금 수혜 규모가 과대추정될 수 있다.

<표 IV-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요건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380,000원	608,000원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 49

<표 IV-3>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구분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가구	부부 2인 가구
기준연금액	254,760원	407,600원
저소득자 기준연금액	300,000원	480,000원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 기초연금 사업안내』, p. 128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4> 가구유형별 및 소득인정액별 기초연금액(국민연금 미수급자 가정)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단독가구	
0원 이상 ~ 334,760원 이하	저소득자 기준연금액(300,000원)
334,760원 초과 ~ 380,000원 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기준연금액) - 소득인정액

〈표 IV-4〉의 계속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단독가구	
380,000원 초과 ~ 1,225,240원 이하	기준연금액(254,760원)
1,225,240원 초과 ~ 1,454,530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454,530원 이상 ~ 1,480,000원 이하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1인 가구	
0원 이상 ~ 562,760원 이하	저소득자 기준연금액(300,000원)
562,760원 초과 ~ 608,000원 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기준연금액) - 소득인정액
608,000원 초과 ~ 2,113,240원 이하	기준연금액(254,760원)
2,113,240원 초과 ~ 2,342,530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342,530원 이상 ~ 2,368,000원 이하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가구	
0원 이상 ~ 535,600원 이하	부부감액을 적용한 저소득자 기준연금액 부부합산액(480,000원)
535,600원 초과 ~ 608,000원 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준연금액 부부합산액) - 소득인정액
608,000원 초과 ~ 1,960,400원 이하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준연금액 부부합산액(407,600원)
1,960,400원 초과 ~ 2,317,050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317,050원 이상 ~ 2,368,000원 이하	기준연금액의 20%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 128

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들에게만 지급하였다. 이후 2019년 1월부터는 연령요건을 충족시킨 모든 아동에게 보편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 9월부터는 연령기준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다시 확대되었다. 한편 아동수당 지급액은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월 10만원으로 일정하다. 본 연구는 2020년 현재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표 IV-5〉 아동수당 제도 연혁

구분	일자	아동수당 대상
도입	2018년 9월 1일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보편지급	2019년 1월 1일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 (2019년 4월 시행, 1월부터 소득 적용)
연령 확대	2019년 9월 1일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http://ihappy.or.kr/info/intro.php>, 검색일자: 2020. 8. 21.

〈표 IV-6〉 아동수당 선정기준액(2018년)

구분	금액(원/월)
3인 가구	11,700,000
4인 가구	14,360,000
5인 가구	17,020,000
6인 가구	19,680,000

주: 7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액: 1인 증가시마다 266만원씩 증가
 자료: 오종현·김우현(2018), 〈표 IV-21〉, p. 92

나. 조세제도

1) 소득세

소득세는 가계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며, 분리과세되는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재정패널조사상 관측치가 많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는 개인에게 과세되는 세목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이기 때문에 미시모의실험을 시행하기 위한 분석단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에서 가구의 시장소득이 주어지더라도 가구원 중 소득자가 2인 이상이거나, 가구원별 소득 수준에 대한 자료를 생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소득세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모의실험분석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자료의 생성이 필수적이다. 가령,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장소득이 아닌 더 세부적인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또한 교육비, 의료비의 경우 어느 가구원이 지출하였는지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의 지출 자료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보를 가장패널자료로 생성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세의 경우 다른 제도와 달리 제도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모의실험 대신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를 생성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과 가구원 수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재정패널 자료에 관측된 가구의 소득세 납부액을 설명하는 추정식을 통해 분석한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정패널조사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되는 항목은 아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0%로 단일세율이다. 하지만 면세품목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품목별 유효세율은 표준세율과 상이하다. 면세품의 경우 유효세율이 표준세율보다 낮다. 하지만 면세품이라도 해당 소비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면제되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 과세품의 경우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중간재 중에 면세품이 존재하면 이 제품의 유효세율은 표준세율인 10%보다 높아진다. 이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중간재로 사용된 면세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이중과세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박명호·정재호(2014), 오종현 외(2017)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 가계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추정한다. 이 선행연구들은 가계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추정하기 위하여 먼저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표에 포함된 품목들을 과세품과 면세품으로 구분한 뒤 이를 바탕으로 품목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산업연관표의 품목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미시자료의 지출항목에 연계하여 가계의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부

가가치세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의 실측표인 2015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산업연관표는 5년마다 실측표가 작성되고 실측표가 작성되지 않는 연도에는 실측표를 기준으로 연장표가 작성된다. 다만 연장표에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생산물세가 제외된 기초가격 기준의 투입계수표가 제시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다소 과거 자료이지만 2015년 실측표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산업연관표 중 품목분류가 가장 세부적인 기본부문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생애기간의 각 소비품목별 소비액 추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추정을 위해 기본부문으로 구분된 산업연관표를 적용하기에는 다수의 소비품목에 대한 관측치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이에 기본부문이 아닌 165개 품목으로 구분된 소분류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다. 공적현물이전

1) 교육수혜

교육수혜는 국가가 가계에 제공한 공교육 서비스를 의미하며,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보육 및 누리과정도 포함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교육수혜의 규모는 오중현·김우현·권성오(2019)와 마찬가지로 생산원가접근법을 통해 추정한다. 이는 교육과 보육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교육에 대한 현물이전 혜택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다만, 교육청 운영 등을 위한 정상비용은 생산원가에서 제외되고 수업료 등 가계가 직접 부담한 비용 또한 교육수혜에서 차감된다. 국가가 교육 및 보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구분되어 조사되며, 이 비용은 각 광역자치단체별 해당 교육과정의 학생 수로 나누어 1인당 교육수혜 금액을 산출한다. 다만, 0~2세를 대상으로 한 영아보육과 대학교육 이상을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역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전국 단위로 추정된 자료를 활용한다. 이렇게 추정된 1인당 교육수혜 규모는 재정패널자료에서 해당 교육과정에 속한 가구원에게 할당하는 방법으로 각 가계의 교육수혜 금액을 추정한다.

〈표 IV-7〉 교육단계별 1인당 교육수혜 금액

(단위: 만원)

구분	영아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서울	449.2	370.3	830.1	762.2	347.1	177.5
부산		358.8	889.7	840.3	519.9	
대구		366.8	847.4	708.2	441.8	
인천		370.0	812.9	833.1	740.5	
광주		399.2	761.2	694.5	369.7	
대전		374.7	862.4	808.5	509.9	
울산		371.4	844.5	906.5	758.7	
세종		466.5	867.5	1,085.2	1,157.2	
경기		353.9	752.8	723.3	579.0	
강원		424.1	1,186.7	1,199.0	1,048.1	
충북		424.1	1,053.5	1,077.7	770.2	
충남		413.2	944.7	893.9	745.3	
전북		441.4	1,124.4	928.2	591.6	
전남		446.8	1,209.5	1,306.5	970.3	
경북		425.9	1,086.1	949.7	647.6	
경남		402.0	925.3	809.6	620.9	
제주		432.3	1,007.8	955.0	661.2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및 17개 시도 교육청(2017)의 『교육통계연보』 등을 이용하여 저자 추정

2) 의료수혜

의료수혜는 개인이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할 때 국가가 부담한 부분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의료수혜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한다. 오종현 외(2017)는 재정패널자료의 의료비 지출 정보를 활용하여 의료수혜 규모를 추정하였다.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는 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의료수혜 규모를 가구 특성에 따른 함수로 추정한 뒤 이를 이용하여 다른 미시자료상의 의료수혜 규모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의료수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상패널자료상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높은 정확도로 추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제약된 정보에 기초하여 의료수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의료비 지출이나 다른 추가적으로 생성된 변수의 정확도를 담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반면, 유경준·김서영·홍

경희(2018)는 성별·연령대별 의료수혜 규모를 가구원에게 할당하는 방법으로 의료수혜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인 가구원의 연령과 성별정보만을 이용하여 의료수혜를 추정하면서도 생애주기에 따라 의료수혜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경준·김서영·홍경희(2018)의 방법을 이용하여 의료수혜 규모를 추정한다.

〈표 IV-8〉 성별·연령대별 1인당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부담금(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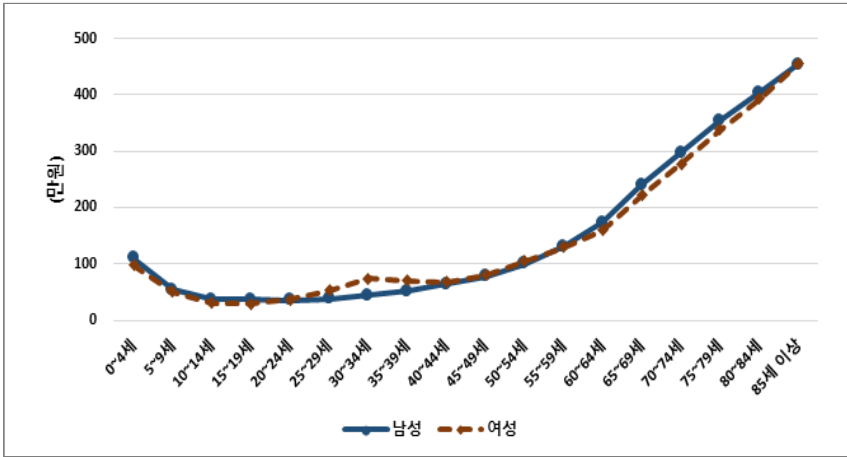
(단위: 만원)

연령대	남성	여성
0~4세	109.7	97.6
5~9세	54.0	49.9
10~14세	37.1	30.9
15~19세	36.4	29.4
20~24세	35.7	36.2
25~29세	38.1	52.6
30~34세	44.0	74.1
35~39세	51.9	69.7
40~44세	63.7	67.4
45~49세	77.4	80.1
50~54세	99.9	104.7
55~59세	130.5	129.5
60~64세	172.7	159.8
65~69세	240.6	221.6
70~74세	297.7	276.9
75~79세	354.3	338.3
80~84세	404.4	393.0
85세 이상	453.7	454.8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2018),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제Ⅲ-6표, 연령별 성별 급여실적(총계), pp. 160~161

[그림 IV-1] 성별·연령대별 1인당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부담금(2017년)

(단위: 만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2018),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제 III-6표, 연령별 성별 급여 실적(총계), pp. 160~161

한편,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도 포함하여 분석한다. 재정패널조사는 각 가구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수혜 여부, 수혜 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여부, 수혜자의 연령 및 성별, 가구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 여부 등이 조사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 특성에 따른 평균적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단부담금을 해당 가구에 할당하는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의료수혜 금액을 추정한다.

〈표 IV-9〉 2017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1인당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단위: 만원)

연령대	성별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 급여자	
		재가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65세 미만	남자	287.6	935.7	338.3	1,005.8	410.7	1,519.0
	여자	371.1	1,066.0	453.0	1,327.6	435.2	1,601.8
65~69세	남자	298.9	950.9	339.3	1,117.6	400.7	1,496.2
	여자	341.3	1,061.5	425.2	1,394.6	424.6	1,546.7
70~74세	남자	309.9	930.8	327.2	1,126.1	409.2	1,431.6
	여자	346.8	1,050.2	380.2	1,304.6	421.1	1,548.1

〈표 IV-9〉의 계속

(단위: 만원)

연령대	성별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 급여자	
		재가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75~79세	남자	296.6	878.9	311.5	1,156.6	388.1	1,388.5
	여자	337.3	1,050.3	374.0	1,265.9	415.5	1,479.2
80~84세	남자	290.6	864.8	331.7	1,034.7	375.9	1,329.3
	여자	337.5	1,032.8	373.0	1,326.8	403.6	1,489.2
85세 이상	남자	297.0	845.4	341.5	1,058.9	362.0	1,217.0
	여자	331.1	1,021.8	359.4	1,290.1	400.7	1,478.6

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는 재가급여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로 간주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2017 노인장기 요양보험 통계 연보』, 제Ⅲ-3표, 연령별 자격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급여실적(pp. 526~555)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조세재정정책의 장단기 효과 비교

가. 장단기소득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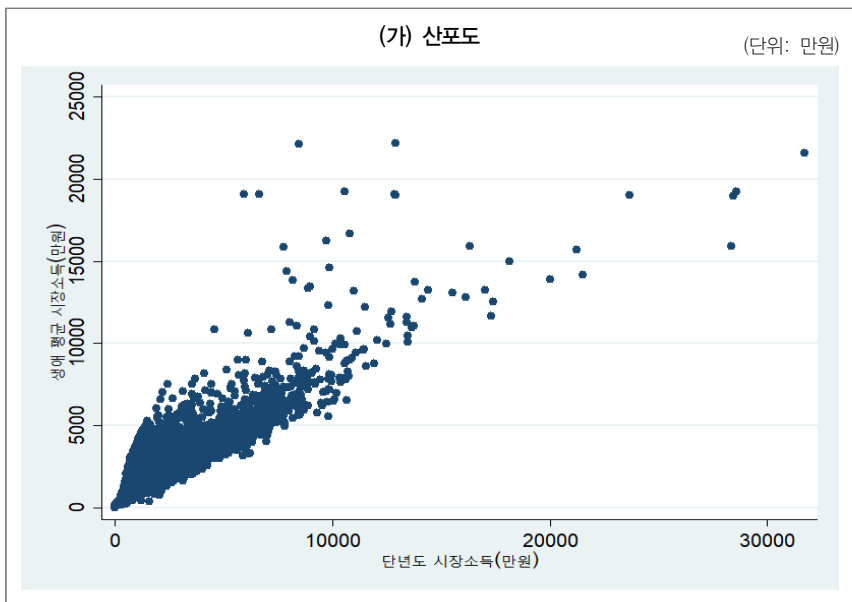
조세재정정책의 장단기 재분배 효과를 비교하기에 앞서 제Ⅲ장을 통해 구축된 가상패널자료상의 장기소득과 단기소득 분포를 비교한다.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는 모든 가구에 대해 가구주 연령 기준 25~85세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단기소득은 각 가구별로 2017년에 실제 관측된 가구주 연령의 시장소득을 의미하고, 장기소득은 생애소득으로 전체 생애의 평균 시장소득을 의미한다. 한편, 이하에서 소득, 수혜, 부담 등에 대한 자료는 가구원 수의 제공근을 이용하여 균등화한 수치이다. 생애소득의 경우 각 시점별 가구원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균등화한 뒤 생애 전체 기간에 대한 평균치를 구하였다.

소득은 생애주기별로 다르다는 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체 표본에 대한 단년도 시장소득의 소득 분포는 연령에 따른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반면 생애소득은 연령의 효과를 제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7년에 관측된 각 연령별 소득분위가 생애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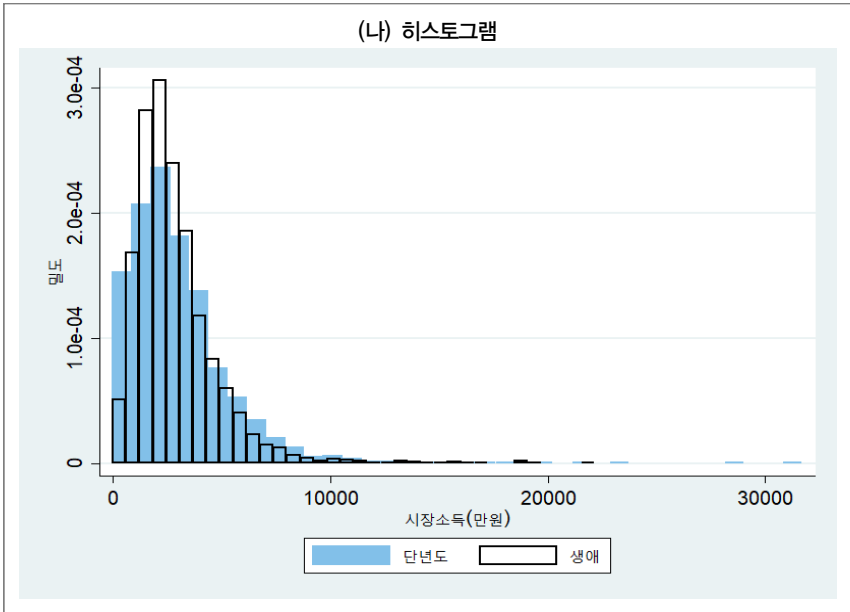
하에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생애소득은 연령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의 이질성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득 충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이러한 가정하에 도출된 생애소득은 최소한 단년도 자료에 나타난 연령에 따른 소득의 차이를 제거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림 IV-2의 산포도에서 나타나듯이 장단기 시장소득은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을 나타낸다. 두 소득의 상관계수는 0.865로 높다. 이는 특정 연도에 소득이 높았던 사람들은 생애소득도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단년도 소득과 비교해 생애소득의 표준편차가 더 작아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소득불평등도는 더 낮아진다. [그림 IV-2의 히스토그램에서 생애소득의 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은 시각적으로도 확인된다. 또한 두 소득의 기초통계량을 비교해 보면 생애소득의 표준편차는 평균의 70.5%로 단년도 소득의 표준편차가 평균의 77.9%인 것과 비교해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한편, 균등화된 단년도 소득과 생애소득의 평균은 각각 3,023만원과 2,925만원이다.

[그림 IV-2] 장단기소득 분포 비교



[그림 IV-2]의 계속



자료: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도출

〈표 IV-10〉 장단기 시장소득의 기초통계량

(단위: 가구, 만원, %)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대비	최댓값			
단년도 소득	4,548	3,022.6	2,354.1	0.779	1	31,700.0	10,488
생애소득	4,548	2,924.5	2,060.6	0.705	1	22,186.2	7,586

자료: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단년도 소득과 생애소득을 통해 장단기소득분위를 비교하면, 약 30.7%의 가구는 단년도 소득과 생애소득의 소득분위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표 IV-11〉의 교차표에서 소득분위가 동일한 대각선상의 수치를 모두 합한 수치이다. 특히, 전체 표본의 약 8.27%의 가구가 2017년 시장소득이 최고소득층인 10분위에 속하면서 생애소득도 10분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전체 표본의 약 5.94%의 가구는 단년도 소득과 생애소득 모두 최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체 가구의 약 25.42%는 2017년 현재를 의미하는 단년도의 소득 분위보다 생애소득분위가 높아지는 반면, 약 43.87%의 가구는 생애소득 기준의 소득분위가 현재보다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의 소득분위를 조건부로 생애 각 소득분위에 속할 확률을 살펴보면, 현재(단년도) 소득 기준 2~9분위에 속한 가구의 경우 생애소득이 현재의 소득분위에 머물 확률보다 현재보다 낮은 소득분위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소득 2~9분위 계층의 경우 생애소득분위가 1단계 낮아질 확률이 약 27.53~44.91%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소득 1분위와 10분위 계층은 모두 생애소득분위가 현재의 소득분위에 머무를 확률이 가장 높다. 현재소득 기준 소득 1분위 가구 중 약 59.21%의 가구가 생애소득 또한 1분위에 머무르며, 10분위 가구 중에서는 75.96%의 가구가 현재와 생애소득 모두 10분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11〉 시장소득의 장단기소득분위 비교

(단위: %)

구분	생애소득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분위	5.9367	2.0229	1.0114	0.5277	0.3078	0.1539	0.0660				10.0264
2분위	2.8144	1.7810	1.3193	1.2973	1.1434	0.7916	0.7256	0.2419	0.1099		10.2243
3분위	0.6157	3.5620	1.0114	0.7036	0.7916	0.9675	0.7256	0.5937	0.3518	0.0440	9.3668
4분위	0.1099	1.5831	4.1557	0.9455	0.4837	0.5277	0.7036	0.5057	0.4617	0.1099	9.5866
5분위		0.1759	2.1108	3.7379	1.6051	0.5497	0.4398	0.4837	0.5057	0.1319	9.7405
6분위			0.2199	1.8470	3.8478	1.4952	0.9015	0.5497	0.5497	0.3738	9.7845
7분위			0.0220	0.3078	1.7810	4.2876	2.1328	0.7036	0.5497	0.3958	10.1803
8분위					0.2858	1.0994	4.4635	2.6605	0.9675	0.4617	9.9384
9분위							0.5497	3.6719	4.8813	1.1653	10.2682
10분위							0.0440	0.1759	2.3967	8.2674	10.8839
전체	9.4767	9.1249	9.8505	9.3668	10.2463	9.8725	10.7520	9.5866	10.7740	10.9499	100

단년도
소득

- 주: 1. 전체 관측치는 4,548개
 2. 단년도 소득과 생애소득이 같은 분위에 있는 가구의 비중을 의미하는 대각선의 합은 30.7168%
 3. 단년도 소득보다 생애소득의 분위가 높은 가구의 비중을 의미하는 대각선 우상방 행렬의 합은 25.4178%
 4. 단년도 소득보다 생애소득의 분위가 낮은 가구의 비중을 의미하는 대각선 좌하방 행렬의 합은 43.8654%

자료: 제3장의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12〉 단년도 소득분위 조건의 생애소득이 각 분위에 속할 확률

(단위: %)

구분	생애소득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단년도 소득	1분위	59,2105	20,1754	10,0877	5,2632	3,0702	1,5351	0,6579				100
	2분위	27,5269	17,4194	12,9032	12,6882	11,1828	7,7419	7,0968	2,3656	1,0753		100
	3분위	6,5728	38,0282	10,7981	7,5117	8,4507	10,3286	7,7465	6,3380	3,7559	0,4695	100
	4분위	1,1468	16,5138	43,3486	9,8624	5,0459	5,5046	7,3394	5,2752	4,8165	1,1468	100
	5분위		1,8059	21,6704	38,3747	16,4786	5,6433	4,5147	4,9661	5,1919	1,3544	100
	6분위			2,2472	18,8764	39,3258	15,2809	9,2135	5,6180	5,6180	3,8202	100
	7분위			0,2160	3,0238	17,4946	42,1166	20,9503	6,9114	5,3996	3,8877	100
	8분위					2,8761	11,0619	44,9115	26,7699	9,7345	4,6460	100
	9분위							5,3533	35,7602	47,5375	11,3490	100
	10분위							0,4040	1,6162	22,0202	75,9596	100

자료: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나. 수혜 및 부담

본 연구는 조세재정정책 중 생애주기와 관련성이 높은 6가지의 제도를 중심으로 수혜-부담 분석을 실시한다.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6가지 제도로 공적연금이전 중에서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공적현물이전 중에서는 교육수혜와 의료수혜, 조세제도 중에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살펴본다. 수혜-부담 분석에서 수혜는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정부로부터 가계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부담은 조세와 같이 가계가 정부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수혜는 전체 수혜에서 부담을 차감한 값이다. 따라서 순수혜가 양(+)의 값을 갖는다면 가계는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금액이 정부에 납부한 금액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의 값을 갖는다면 이와 반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순수혜는 조세재정정책의 전체적인 순수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아닌 분석 대상에 포함된 6가지 제도를 통한 순수혜를 측정한다. 한편,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순수혜가 커진다면, 분석이 포괄하는 조세재정정책의 전반적인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10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의 평균적인 수혜 및 부담을 비교한다. 이때 세 가지 자료, 즉 ① 2017년 실제 단년도 자료 ② 2017년 가상 단년도 자료 ③ 가상 생애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장단기 수혜와 부담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는 ②번과 ③번 자료를 통한 결과의 비교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비교의 정당성은 제Ⅲ장에서 구축한 가상의 자료가 실제자료를 잘 설명해야만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①번과 ②번 자료에 의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가상패널자료를 통한 분석의 특성이나 해석상의 유의점 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단년도 자료 비교 시 실제자료와 가상자료의 소득분위별 순수혜 규모에 유사한 양상이 관찰된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순수혜가 크고, 고소득층의 순수혜가 작으며, 소득 10분위는 순부담 계층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실제자료와 가상자료 모두 소득 5분위보다 6분위의 순수혜 규모가 더 큰 모습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소득 6분위에서 순수혜 규모가 역전되는 이유는

두 자료 모두 교육수혜 때문이다.

하지만 단년도 자료 비교 시 가상자료가 실제자료보다 순수혜를 더 크게 측정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의 상당 부분은 실제자료와 비교해 가상자료에서 기초연금이 과대추정되고 부가가치세가 과소추정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연금 추정을 위해서는 재산수준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추정되어야만 하고, 부가가치세 추정을 위해서는 각 품목별 소비지출액이 추정되어야만 한다. 다만, 제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인정액과 소비지출액 모두 실제자료보다 가상자료에서 더 0으로 치우친 분포로 추정되었다. 실제자료보다 가상자료에서 소득인정액이 평균적으로 감소하면 기초연금 수급액과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가상자료에서 기초연금 수혜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소비지출액 또한 실제자료보다 가상자료에서 더 낮게 추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가상자료에서 더 낮게 추정된다. 실제로 <표 IV-13>과 <표 IV-14>를 비교하면 모든 분위에서 실제자료보다 가상자료의 소비지출이 낮게 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연금은 과대추정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소추정되어 전체적으로 순수혜가 과대추정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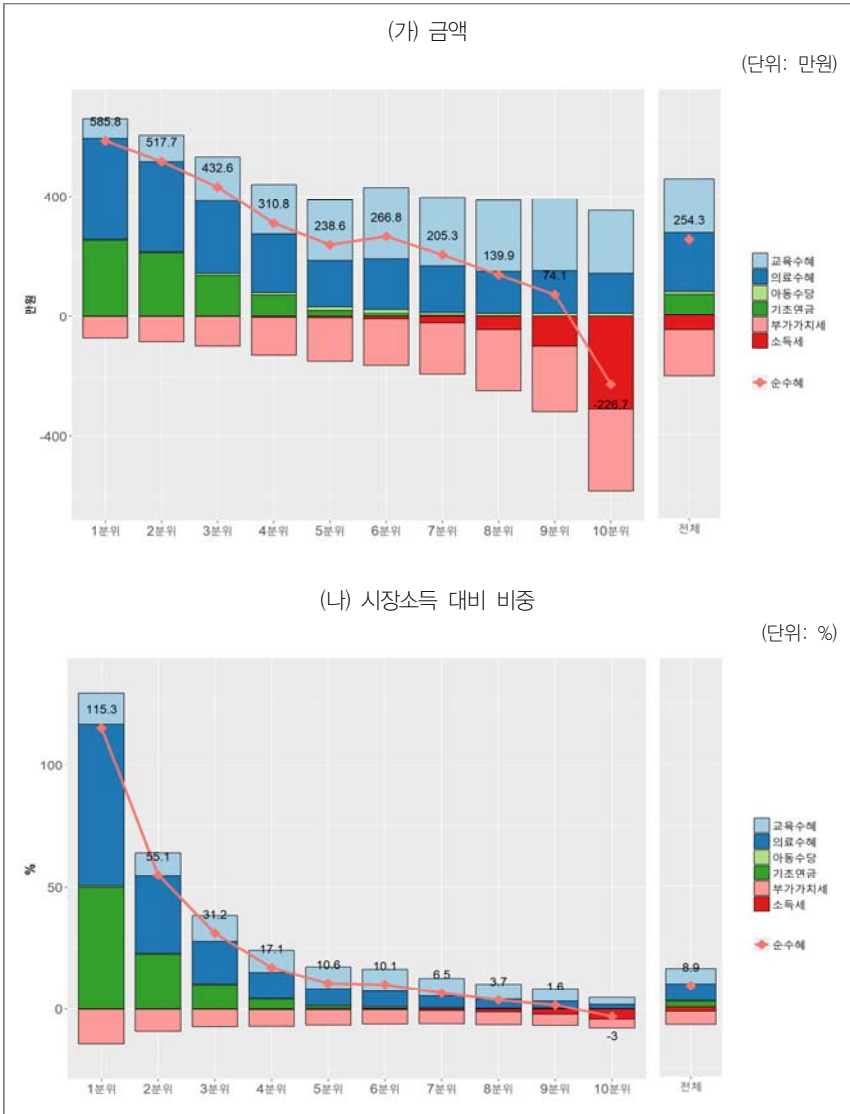
소득세의 경우 전체적인 순수혜는 실제자료와 가상자료가 유사하다. 다만 대체로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은 과대추정되고,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은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제Ⅲ장의 직접세 납부액 분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자료와 비교해 가상자료의 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더 집중된 분포로 추정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실제자료와 비교해 가상자료에서 저소득 계층의 세부담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고소득 계층의 세부담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으로 추정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아동수당, 교육수혜, 의료수혜는 상대적으로 실제자료와 가상자료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기초연금과 부가가치세와 달리 아동수당, 교육수혜, 의료수혜의 추정은 가구 내 가구원 수와 연령에만 의존한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소비지출액, 소비세 납부액 등 금액을 추정해야 하는 다른 제도보다는 높은 정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에는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과정

에서 금액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를 더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시장소득의 경우 실제자료보다 가상자료에서 과대추정되었는데, 이는 소득을 균등화하는 과정에서 실제자료와 가상자료의 가구원 수 차이에 기인한다. 가구원 수는 대체로 실제자료와 가상자료가 유사하게 추정되지만, 동일하게 추정된 것은 아니다. 제Ⅲ장에서 가구의 구성에 대한 정형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가구원 수를 추정하였다. 하지만 실제자료에서는 이러한 정형적인 가구에서 벗어나는 가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 또한 실제자료보다 가상자료에서 일부 과소추정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로 인하여 가상자료에서 균등화 시장소득이 과대추정되었다. 하지만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수혜와 부담 또한 가구원 수의 추정에 영향을 받는데, 그 규모를 균등화하여 가구원 수 추정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그림 IV-3] 소득분위별 수혜 및 부담(실제 단년도 자료)



자료: 제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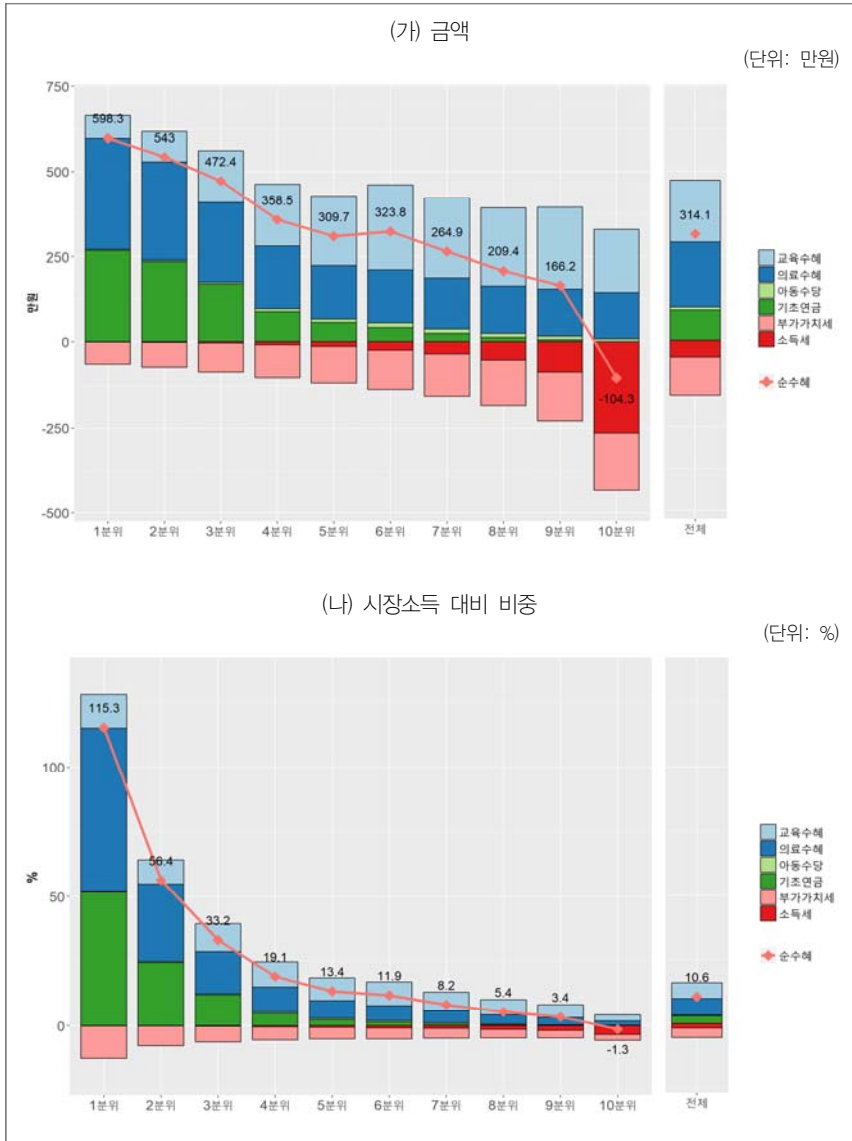
〈표 IV-13〉 소득분위별 수혜 및 부담(실제 단년도 자료)

(단위: 만원, %)

소득 분위	시장 소득	소비 지출	순수혜	수혜				부담	
				기초 연금	아동 수당	의료 수혜	교육 수혜	소득세	부가 가치세
〈금액〉									
전체	2,863.8	1,988.8	254.3	71.0	8.9	196.5	181.9	49.8	154.1
1분위	508.2	936.2	585.8	254.1	2.8	336.6	64.6	0.9	71.6
2분위	939.8	1,100.1	517.7	212.2	4.0	300.4	86.8	0.9	84.8
3분위	1,386.0	1,279.9	432.6	137.1	6.4	241.4	147.8	1.6	98.5
4분위	1,822.2	1,623.5	310.8	72.4	7.4	195.1	165.9	4.2	125.7
5분위	2,244.9	1,840.4	238.6	21.4	11.9	153.7	201.5	6.1	143.7
6분위	2,640.7	2,025.3	266.8	10.5	13.6	168.1	238.5	8.8	155.2
7분위	3,142.4	2,187.0	205.3	2.4	12.5	153.3	229.5	22.4	170.0
8분위	3,790.5	2,578.6	139.9	0.4	10.6	139.7	236.3	44.7	202.4
9분위	4,689.3	2,795.4	74.1	0.0	10.0	142.6	237.8	99.6	216.7
10분위	7,461.0	3,516.8	-226.7	0.0	9.5	134.0	210.3	308.0	272.5
〈시장소득 대비 비중〉									
전체	100	69.4	8.9	2.5	0.3	6.9	6.4	1.7	5.4
1분위	100	184.2	115.3	50.0	0.6	66.2	12.7	0.2	14.1
2분위	100	117.1	55.1	22.6	0.4	32.0	9.2	0.1	9.0
3분위	100	92.4	31.2	9.9	0.5	17.4	10.7	0.1	7.1
4분위	100	89.1	17.1	4.0	0.4	10.7	9.1	0.2	6.9
5분위	100	82.0	10.6	1.0	0.5	6.8	9.0	0.3	6.4
6분위	100	76.7	10.1	0.4	0.5	6.4	9.0	0.3	5.9
7분위	100	69.6	6.5	0.1	0.4	4.9	7.3	0.7	5.4
8분위	100	68.0	3.7	0.0	0.3	3.7	6.2	1.2	5.3
9분위	100	59.6	1.6	0.0	0.2	3.0	5.1	2.1	4.6
10분위	100	47.1	-3.0	0.0	0.1	1.8	2.8	4.1	3.7

자료: 제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V-4] 소득분위별 수혜 및 부담(가상 단년도 자료)



자료: 제 III 장의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14〉 소득분위별 수혜 및 부담(가상 단년도 자료)

(단위: 만원, %)

소득 분위	시장 소득	소비 지출	순수혜	수혜				부담	
				기초 연금	아동 수당	의료 수혜	교육 수혜	소득세	부가 가치세
〈금액〉									
전체	2,954.1	1,380.3	314.1	90.2	9.1	191.2	183.1	49.3	110.1
1분위	519.1	789.0	598.3	268.4	3.0	325.4	67.2	0.3	65.5
2분위	963.0	891.2	543.0	235.6	4.5	288.3	89.4	1.3	73.4
3분위	1,423.2	1,063.5	472.4	170.6	4.9	233.9	151.7	4.0	84.8
4분위	1,872.7	1,189.2	358.5	89.0	9.6	182.0	182.1	8.3	95.8
5분위	2,306.9	1,309.0	309.7	55.9	10.6	158.8	202.8	14.0	104.5
6분위	2,714.8	1,435.0	323.8	41.2	13.9	156.8	248.9	24.1	112.9
7분위	3,229.7	1,559.4	264.9	24.1	13.3	151.1	233.5	35.2	121.9
8분위	3,884.9	1,649.9	209.4	12.0	12.2	139.7	229.8	53.5	130.9
9분위	4,844.4	1,788.2	166.2	5.3	10.6	139.8	240.3	88.5	141.2
10분위	7,771.3	2,126.9	-104.3	0.3	8.2	136.3	184.7	264.0	169.7
〈시장소득 대비 비중〉									
전체	100	46.7	10.6	3.1	0.3	6.5	6.2	1.7	3.7
1분위	100	152.0	115.3	51.7	0.6	62.7	13.0	0.0	12.6
2분위	100	92.5	56.4	24.5	0.5	29.9	9.3	0.1	7.6
3분위	100	74.7	33.2	12.0	0.3	16.4	10.7	0.3	6.0
4분위	100	63.5	19.1	4.8	0.5	9.7	9.7	0.4	5.1
5분위	100	56.7	13.4	2.4	0.5	6.9	8.8	0.6	4.5
6분위	100	52.9	11.9	1.5	0.5	5.8	9.2	0.9	4.2
7분위	100	48.3	8.2	0.7	0.4	4.7	7.2	1.1	3.8
8분위	100	42.5	5.4	0.3	0.3	3.6	5.9	1.4	3.4
9분위	100	36.9	3.4	0.1	0.2	2.9	5.0	1.8	2.9
10분위	100	27.4	-1.3	0.0	0.1	1.8	2.4	3.4	2.2

자료: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단년도 자료와 비교해 생애 자료의 시장소득과 소비지출액은 평균을 중심으로 더 집중된 분포를 나타낸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은 생애 시장소득과 소비지출액이 단년도 시장소득과 소비지출액보다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소득 1~4분위의 시

장소득은 생애 자료에서 더 높고, 소득 5~10분위의 시장소득은 단년도 자료에서 더 높다. 소비지출액 또한 소득 1~3분위에서는 생애 자료에서 더 높고, 소득 5~10분위에서는 단년도 자료에서 더 높다.

소비지출액이 시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는 평균소비성향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단년도 자료보다 생애 자료에서 더 낮게 나타난다. 다만, 단년도 자료 대비 생애 자료의 평균소비성향 감소폭은 대체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큰 것으로 관찰된다. 소득 1분위의 경우 단년도 평균소비성향은 152.0%에서 생애 평균소비성향은 123.7%로 약 28.3%p 감소한다. 소득 10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단년도 자료와 생애 자료에서 각각 27.4%와 24.7%로 생애 자료에서 약 2.7%p 낮다. 한편, 전체적인 평균소비성향은 단년도 자료와 생애 자료에서 각각 46.7%와 43.5%로 나타나 생애 자료에서 3.2%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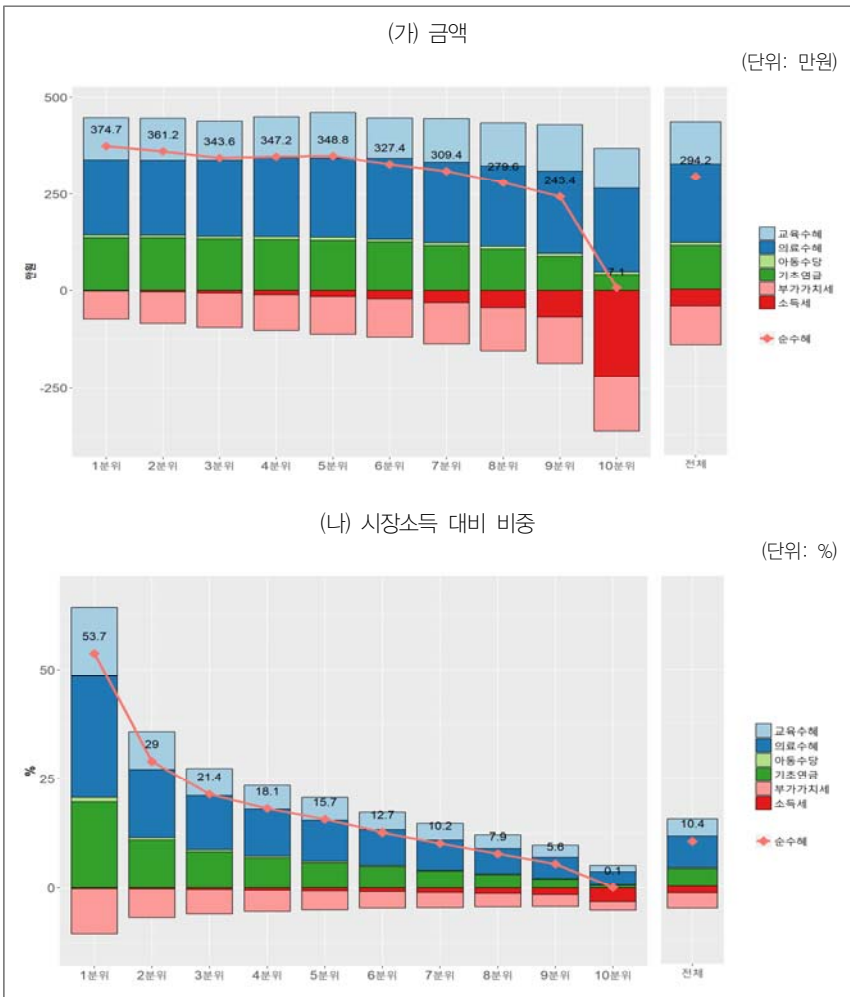
가상 자료를 통한 분석에서 생애 자료는 단년도 자료와 소득분위별 순수혜에 상당한 차이가 관찰된다. 생애 자료에서는 모든 소득분위가 순수혜 계층으로 나타나며,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른 순수혜 감소폭도 단년도 자료와 비교해 상당히 완만한 모습이다. 다만, 소득 1~5분위의 감소폭보다 소득 6분위 이상 계층의 감소폭이 더 증가하며, 특히 소득 10분위에서 9분위와 비교해 순수혜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기초연금 수혜 규모의 경우 저소득층에서는 소득분위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다가 고소득층에서 급격히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노인계층 중 하위 70%가 정책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반면, 아동수당, 의료수혜, 교육수혜의 경우 소득분위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구원 수 및 가구의 구성이 생애소득 간 편차가 크지 않다면 제도상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된다는 위 제도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소득분위별 절대적인 수혜 규모가 유사하더라도 이 제도들이 소득재분배에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조세 및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이를 측정하는 지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소득 대비 수혜 또는 부담의 비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동수당,

의료수혜, 교육수혜가 소득분위별로 유사한 규모의 혜택이 돌아가더라도 이러한 혜택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크기 때문에 생애소득 기준에서도 이 제도들이 소득재분배에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실은 뒤의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본 각 제도의 분배지표 개선 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5] 소득분위별 수혜 및 부담(가상 생애 자료)



자료: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15〉 소득분위별 수혜 및 부담(가상 생애 자료)

(단위: 만원, %)

소득 분위	시장 소득	소비 지출	순수혜	수혜				부담	
				기초 연금	아동 수당	의료 수혜	교육 수혜	소득세	부가 가치세
〈금액〉									
전체	2,827.8	1,230.3	294.2	115.0	7.5	205.0	109.0	42.4	99.9
1분위	697.5	863.1	374.7	136.8	7.3	194.4	108.9	1.3	71.4
2분위	1,244.2	984.2	361.2	136.8	7.1	194.1	107.4	4.0	80.3
3분위	1,602.4	1,073.3	343.6	133.8	6.9	197.1	100.6	7.0	87.8
4분위	1,915.0	1,121.6	347.2	132.8	7.3	204.7	104.7	10.9	91.4
5분위	2,227.5	1,188.6	348.8	130.0	8.0	205.3	117.4	15.8	96.1
6분위	2,581.4	1,205.1	327.4	126.3	7.1	209.0	104.0	21.3	97.7
7분위	3,022.0	1,294.3	309.4	116.6	7.7	208.6	112.3	31.2	104.7
8분위	3,549.0	1,361.8	279.6	107.6	7.5	207.5	111.0	44.0	110.1
9분위	4,375.4	1,467.3	243.4	88.3	8.4	212.8	120.1	67.9	118.3
10분위	7,058.0	1,743.3	7.1	41.5	7.3	216.0	103.5	220.2	140.9
〈시장소득 대비 비중〉									
전체	100	43.5	10.4	4.1	0.3	7.2	3.9	1.5	3.5
1분위	100	123.7	53.7	19.6	1.0	27.9	15.6	0.2	10.2
2분위	100	79.1	29.0	11.0	0.6	15.6	8.6	0.3	6.5
3분위	100	67.0	21.4	8.4	0.4	12.3	6.3	0.4	5.5
4분위	100	58.6	18.1	6.9	0.4	10.7	5.5	0.6	4.8
5분위	100	53.4	15.7	5.8	0.4	9.2	5.3	0.7	4.3
6분위	100	46.7	12.7	4.9	0.3	8.1	4.0	0.8	3.8
7분위	100	42.8	10.2	3.9	0.3	6.9	3.7	1.0	3.5
8분위	100	38.4	7.9	3.0	0.2	5.8	3.1	1.2	3.1
9분위	100	33.5	5.6	2.0	0.2	4.9	2.7	1.6	2.7
10분위	100	24.7	0.1	0.6	0.1	3.1	1.5	3.1	2.0

자료: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생애 자료에서 부담에 해당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수혜와 비교해 소득분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 1분위는 연평균 약 1만 원을 부담한 것과 비교해 소득 10분위는 연평균 22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비교해 소득분위별 부담의 편차는 감소하지만 절대금액 측면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가계가 부담하는 연평균 부가가치세는 소득 1분위 계층에서 약 71만원, 소득 10분위 계층에서 약 141만원이다. 시장소득과 소비지출액이 생애 전체에서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분배지표: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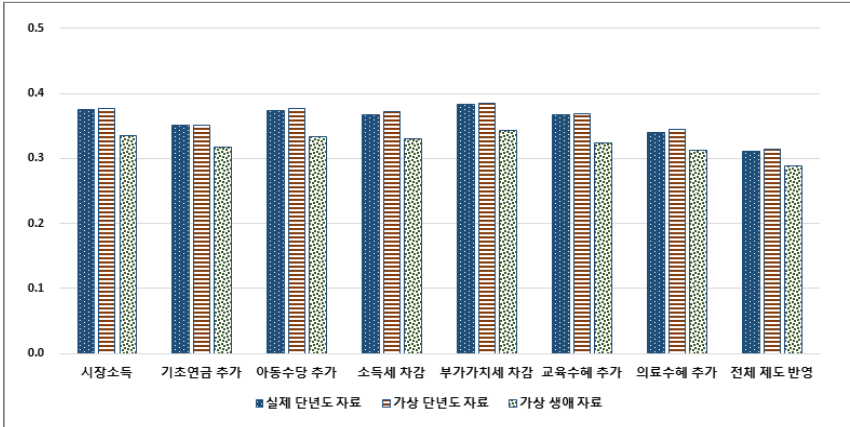
시장소득과 각 제도를 반영한 조정소득에 대한 장단기 분배지표를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여기에서 조정소득은 시장소득에 각 제도로 인한 수혜를 가산하거나 부담을 차감한 소득을 의미한다. 시장소득과 조정소득의 지니계수를 비교함으로써 각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보다 시장소득에 기초연금을 가산한 조정소득의 지니계수가 더 낮다면 기초연금이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보다 시장소득에서 소득세 부담을 차감한 조정소득의 지니계수가 더 낮다면 소득세 또한 소득재분배에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단년도 자료에 대한 실제자료와 가상자료의 지니계수를 비교한다. 앞의 주요 제도로 인한 수혜와 부담에서 살펴보았듯이 단년도 자료의 경우 소득분위별 순수혜의 변화 양상은 비슷하였지만 실제자료보다 가상자료의 순수혜가 전체적으로 과대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니계수의 경우 실제자료와 가상자료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실제자료와 가상자료에서 각각 0.3748과 0.3771로 추정돼 그 차이가 0.63%로 크지 않다. 조정소득의 경우에도 실제자료와 가상자료의 지니계수 격차는 최대 1.28%로 가상자료의 분배지표가 실제자료의 분배지표를 대체로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년도 소득과 비교해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추정된 분배지표는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이다. 가상자료를 기준으로 생애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0.3345로 단년도 시장소득의 지니계수인 0.3771보다 11.31% 낮게 추정되었다. 조정소득의 경우에도 단년도 소득보다 생애소득의 지니계수가 9.05~12.28% 낮아

진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단년도 소득 분포에는 연령에 따른 소득 차이가 반영되어 있는데, 생애소득을 통해 연령에 따른 효과를 제거할 경우 소득이 평균을 중심으로 더 집중되어 분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IV-6] 시장소득과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주: 1. 제도별 조정소득은 시장소득에 해당 제도로 인한 수혜 또는 부담을 반영한 소득
 2. 전체 제도를 반영한 조정소득은 시장소득에 6개의 제도로 인한 수혜와 부담을 모두 반영한 소득
 자료: 제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와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16> 시장소득과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구분	시장 소득	조정소득						
		기초 연금 추가	아동 수당 추가	소득세 차감	부가 가치세 차감	교육 수혜 추가	의료 수혜 추가	전체 제도 반영
실제 단년도 자료(A)	0.3748	0.3505	0.3742	0.3679	0.3839	0.3671	0.3401	0.3113
가상 단년도 자료(B)	0.3771	0.3504	0.3765	0.3717	0.3856	0.3683	0.3445	0.3136
격차(C=B-A)	0.0023	-0.0001	0.0023	0.0038	0.0017	0.0012	0.0044	0.0023
격차율(C/A, %)	0.63	-0.02	0.63	1.04	0.45	0.34	1.28	0.75
가상 생애 자료(D)	0.3345	0.3167	0.3337	0.3296	0.3428	0.3231	0.3133	0.2887
격차(E=D-B)	-0.0426	-0.0338	-0.0428	-0.0421	-0.0427	-0.0452	-0.0312	-0.0249
격차율(E/B, %)	-11.31	-9.64	-11.38	-11.32	-11.09	-12.28	-9.05	-7.93

주: 1. 제도별 조정소득은 시장소득에 해당 제도로 인한 수혜 또는 부담을 반영한 소득
 2. 전체 제도를 반영한 조정소득은 시장소득에 6개의 제도로 인한 수혜와 부담을 모두 반영한 소득
 자료: 제11차 재정패널조사 원시자료와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제도 중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소득세, 교육수혜와 의료수혜는 지니계수를 개선시켜 소득재분배에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득재분배에 역기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특징은 단년도 소득과 생애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림 IV-6]과 <표 IV-17>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제도는 장단기 모두 지니계수를 개선시키지만, 부가가치세는 장단기에 모두 지니계수를 악화시킨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6가지 제도 중 5가지가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제도를 반영한 조정소득 또한 시장소득 대비 지니계수를 단년도 자료에서는 약 16.8%, 생애 자료에서는 약 13.7%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17> 시장소득 대비 조정소득 지니계수 변화의 장단기 비교

구분		기초 연금 추가	아동 수당 추가	소득세 차감	부가 가치세 차감	교육 수혜 추가	의료 수혜 추가	전체 제도 반영
개선폭	단년도	0.0267	0.0006	0.0054	-0.0085	0.0088	0.0326	0.0635
	생애	0.0178	0.0008	0.0049	-0.0084	0.0114	0.0212	0.0458
개선율(%)	단년도	7.0766	0.1672	1.4409	-2.2444	2.3346	8.6550	16.8410
	생애	5.3317	0.2481	1.4562	-2.4986	3.4067	6.3347	13.6791

- 주: 1. 제도별 조정소득은 시장소득에 해당 제도로 인한 수혜 또는 부담을 반영한 소득
 2. 전체 제도를 반영한 조정소득은 시장소득에 6개의 제도로 인한 수혜와 부담을 모두 반영한 소득
 3. 단년도 자료는 가상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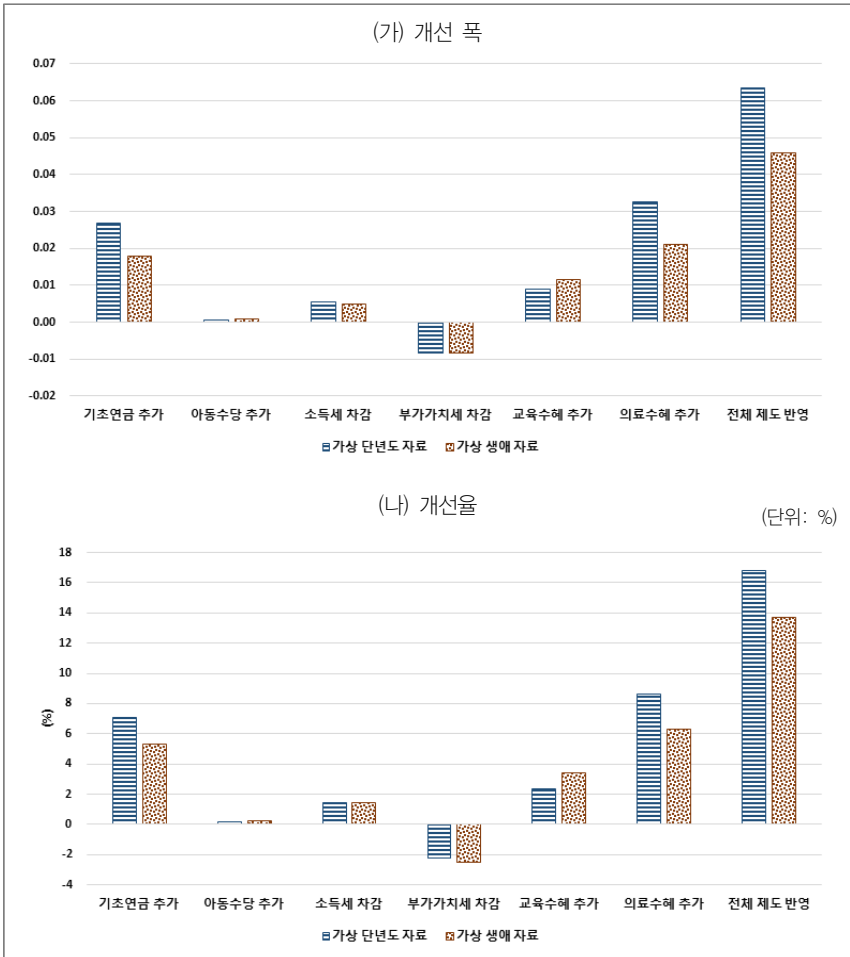
자료: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개의 제도가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각 제도별 지니계수의 개선율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장단기 모두 의료수혜, 기초연금, 교육수혜, 소득세, 아동수당 순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지니계수의 개선율은 수혜 또는 부담이 소득계층별로 얼마나 차등적인지와 함께 평균적인 수혜 또는 부담의 규모로 측정된 제도의 크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의료수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6가지 제도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제도의 특성상 다른 계층보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계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두 번째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기초연금 역시 정책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계층이며, 제도적으로도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교육수혜의 경우 제도의 규모 자체는 기초연금보다 크고 의료수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이 학령기의 자녀가 포함된 가계이고 이러한 가계의 경우 주로 생애주기상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은 의료수혜나 기초연금과 비교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적인 과세로 인하여 지니계수를 개선시키지만 제도의 규모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개의 제도보다는 작아 지니계수 개선을 또한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수당의 경우 정책 대상이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 가계로 교육수혜와 유사하게 생애주기상 중고소득 계층이며, 제도의 규모도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6개의 제도 중 가장 작아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가치세는 지니계수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이 아닌 소비에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은 저소득층일수록 높는데, 이는 절대적인 소비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필수재 등 일부 품목을 면세품으로 분류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일세율로 과세하며,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로 인한 세부담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소득에 역진적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특징이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지니계수가 악화되는 모습에서 확인된다.

[그림 IV-7] 시장소득 대비 조정소득 지니계수 변화의 장단기 비교



주: 1. 제도별 조정소득은 시장소득에 해당 제도로 인한 수혜 또는 부담을 반영한 소득
 2. 전체 제도를 반영한 조정소득은 시장소득에 6개의 제도로 인한 수혜와 부담을 모두 반영한 소득
 3. 단년도 자료는 가상자료 기준

자료: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장기와 단기의 상대적인 지니계수 개선 정도 또한 제도별로 차이가 있다. 노인계층에 주로 그 혜택이 귀착되는 의료수혜와 기초연금은 단년도 자료와 비교해 생애 자료에서 분배지표 개선율이 낮아지는 반면, 학령기 자녀 또는 아동이 대상인 교육수혜와 아동수당은 단년도 자료보다 생애 자료에서 분배

지표 개선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원인은 단년도 자료에서 노인계층은 주로 저소득층에 분포되어 있고 아동이나 학령기 자녀를 둔 가계는 중고소득층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단년도 자료에서는 연령과 소득 분포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연령층을 정책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지니계수 개선율의 차이가 클 수 있지만, 생애 자료에서는 이러한 연령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소득세는 단년도 자료와 생애 자료의 지니계수 변화폭과 변화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니계수 변화폭은 생애 자료에서 소폭 작지만, 지니계수 변화율은 생애 자료에서 소폭 높다. 지니계수의 변화율이 소폭 증가하는 것은 소득세의 누진도가 단년도 자료와 생애 자료에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누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그 누진도는 크게 감소한다. 단년도 자료에서 소득 10분위 계층의 평균 시장소득은 소득 1분위 계층보다 15.0배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시장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의 경우 이러한 10분위 배수가 1,024.1배로 크게 증가한다. 즉, 단년도 자료에서 소득세의 10분위 배수가 시장소득의 10분위 배수보다 68.4배로 소득세가 상당히 누진적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소득세의 누진도는 생애 자료에서 감소한다. 생애 자료에서 소득세의 10분위 배수는 시장소득의 10분위 배수보다 약 16.2배 높은 수준으로, 이는 단년도 자료의 68.4배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이다. 이러한 특징은 5분위 배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다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생애소득에서 소득세의 누진도가 약화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소득의 차이가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표 IV-18〉 소득 및 소비 관련 항목의 10분위와 5분위 배수 비교

(단위: 배)

구분		소득			소비		
		시장소득 (A)	소득세 (B)	누진도 (B/A)	소비지출 (C)	부가가치세 (D)	누진도 (D/C)
10분위 배수	단년도	15.0	1,024.1	68.4	2.7	2.6	1.0
	생애	10.1	164.1	16.2	2.0	2.0	1.0

〈표 IV-18〉의 계속

(단위: 배)

구분		소득			소비		
		시장소득 (A)	소득세 (B)	누진도 (B/A)	소비지출 (C)	부가가치세 (D)	누진도 (D/C)
5분위 배수	단년도	8.5	225.8	26.5	2.3	2.2	1.0
	생애	5.9	53.7	9.1	1.7	1.7	1.0

주: 1. 10분위 배수 = (상위 10% 평균 금액)/(하위 10% 평균 금액)

2. 5분위 배수 = (상위 20% 평균 금액)/(하위 20% 평균 금액)

자료: 〈표 IV-14〉와 〈표 IV-1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가가치세 또한 지니계수의 변화폭은 생애 자료에서 소폭 작지만, 지니계수 변화율은 생애 자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가치세로 인한 지니계수 증가율이 단년도 자료보다 생애 자료에서 더 큰 이유는 단년도 자료와 생애 자료 간 소비 분포의 차이보다 소득 분포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 분포와 소비 분포 모두 단년도 자료보다 생애 자료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더 집중된 분포를 보인다. 다만 소비의 경우 항상소득을 근거로 저축 및 차입을 통해 단년도에도 평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보다 그 분포의 변화가 크지 않다. 따라서 단년도 자료 대비 생애 자료에서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감소율보다 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변화로 인한 지니계수의 감소율이 더 작다면 생애 자료에서 부가가치세로 인한 지니계수의 증가율은 더 커진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제도적 요인 자체는 단년도 자료와 생애 자료의 소득 재분배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는 일부 면세품목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1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재분배 기능이 약하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은 단년도 자료와 생애 자료에서 부가가치세의 누진도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년도 자료에서 소득 10분위 계층의 소비지출액은 소득 1분위 계층의 약 2.7배이다. 생애 소득 자료에서는 이러한 소비지출액의 10분위 배수가 2.0배로 감소한다. 다만, 소비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10분위 배수 또한 단년도 자료의 2.6배에서 생애 자료의 2.0배로 감소해 소비지출액의 감소폭과 유사하다.

이로 인해 소비지출액 대비 부가가치세의 10분위 배수로 측정된 누진도의 경우 단년도 자료와 생애 자료에서 모두 1.0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5분위 배수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년도 자료와 생애 자료 간 각 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차이는 각 제도를 모두 확대한 모의실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IV-19>는 앞에서 분석한 기준제도 대비 각 제도를 10% 확대하였을 경우의 지니계수와 시장소득 대비 각 조정소득 지니계수의 개선율이 기준제도 대비 제도 확대 시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를 보고한다. 제도의 확대란, 각 제도의 정책 대상자는 그대로 둔 채 제도를 통한 수혜 또는 부담 규모를 2배로 확대한 것을 의미한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소득세, 교육수혜, 의료수혜는 제도를 확대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도 개선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제도를 확대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악화된다. 이러한 결과는 단년도 자료와 생애 자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과 의료수혜는 단년도 자료보다는 생애 자료에서 지니계수의 개선율 변화폭이 감소하지만, 아동수당과 교육수혜는 단년도 자료보다 생애 자료에서 지니계수의 개선율 변화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소득세의 경우 단년도 자료보다 생애 자료에서 지니계수 개선폭은 감소하지만, 개선율 변화폭은 증가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단년도 자료보다 생애 자료에서 지니계수를 더 큰 비율로 악화시킨다. 이러한 특성은 앞에서 시장소득 대비 각 제도를 반영한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개선율을 비교한 것과 동일하다.

<표 IV-19> 제도 확대에 의한 지니계수 변화의 장단기 비교

구분	시장소득 (a)	조정소득							
		기초연금 추가	아동수당 추가	소득세 차감	부가가치세 차감	교육수혜 추가	의료수혜 추가	전체제도 반영	
기준제도 (A)	단년도	0.3771	0.3504	0.3765	0.3717	0.3856	0.3683	0.3445	0.3136
	생애	0.3345	0.3167	0.3337	0.3296	0.3428	0.3231	0.3133	0.2887
제도확대 (B)	단년도	0.3771	0.3480	0.3764	0.3711	0.3864	0.3680	0.3415	0.3085
	생애	0.3345	0.3149	0.3336	0.3291	0.3436	0.3221	0.3114	0.2847

〈표 IV-19〉의 계속

구분		시장 소득 (a)	조정소득						
			기초 연금 추가	아동 수당 추가	소득세 차감	부가 가치세 차감	교육 수혜 추가	의료 수혜 추가	전체 제도 반영
개선 폭 (C-A-B)	단년도	-	0.0024	0.0001	0.0006	-0.0008	0.0004	0.0030	0.0051
	생애	-	0.0017	0.0001	0.0005	-0.0008	0.0010	0.0020	0.0041
개선을 변화폭 (C/a, %p)	단년도	-	0.6491	0.0155	0.1461	-0.2146	0.0991	0.7824	1.3498
	생애	-	0.5141	0.0246	0.1476	-0.2375	0.3066	0.5832	1.2176

주: 1. 제도별 조정소득은 시장소득에 해당 제도로 인한 수혜 또는 부담을 반영한 소득
 2. 전체 제도를 반영한 조정소득은 시장소득에 6개의 제도로 인한 수혜와 부담을 모두 반영한 소득
 3. 단년도 자료는 가상자료 기준
 4. 제도 확대는 각 제도의 정책 대상은 유지된 상태에서 수혜 또는 부담 규모를 기준제도보다 10% 확대한 상황 가정
 5. 개선을 변화폭은 기준제도 대비 제도확대 시 시장소득 대비 조정소득의 지니계수의 개선을 격차
 자료: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도출

5. 가구구조 변화와 조세재정정책

가. 분석 개요

제4절의 분석은 2018년 재정패널자료(2017년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에 관찰된 가구구조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평균적인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장래에는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가 급격히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래가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소득 분배지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조세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재정정책에는 특정 연령을 정책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계층이 대상이고,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정책 대상이다. 교육수혜의 경우 대학교육은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대체로 학령기의 자녀가 정책 대상이며, 의료수혜 또한 특정 연령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노인계층에 그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간다.

이러한 정책 특성상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각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달라진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만약 인구 중에 7세 미만의 아동이 없다면 아동수당을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이는 소득재분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이는 소득재분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각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각 제도의 설계 자체에도 영향을 받지만 인구 및 가구구조 또한 그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장래의 가구구조가 변함에 따라 각 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에 나타난 미래의 가구구조 변화를 현재 재정패널자료에 적용하는 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개별 가구의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경우 미래의 소득, 소비, 자산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가구구조의 변화는 각 가구의 비중(가중치)이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개별 가구의 경우 가구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득 등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앞의 제4절에서 분석한 6가지의 제도를 통한 수혜와 부담 또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이하 『장래인구추계』)와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이하 『장래가구추계』)의 결과를 살펴본다. 그다음 앞에서 분석한 6가지 제도로 인한 가계의 수혜·부담 총량의 추세와 이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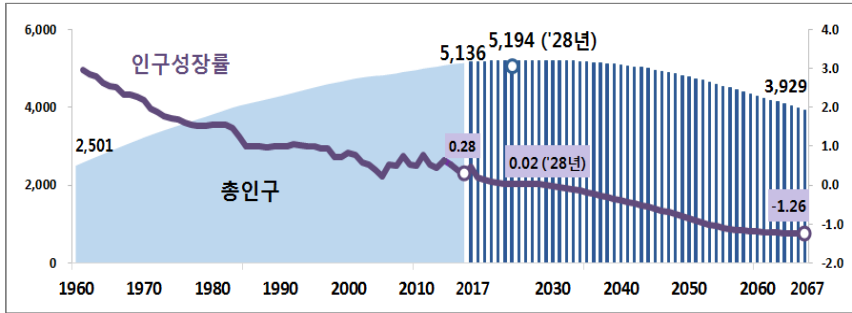
나. 장래 인구 및 가구 추계

저출산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는 심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에는 3,929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15~64세로 정의되는 생산가능

인구는 2017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8%에서 2067년 46.5%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IV-8]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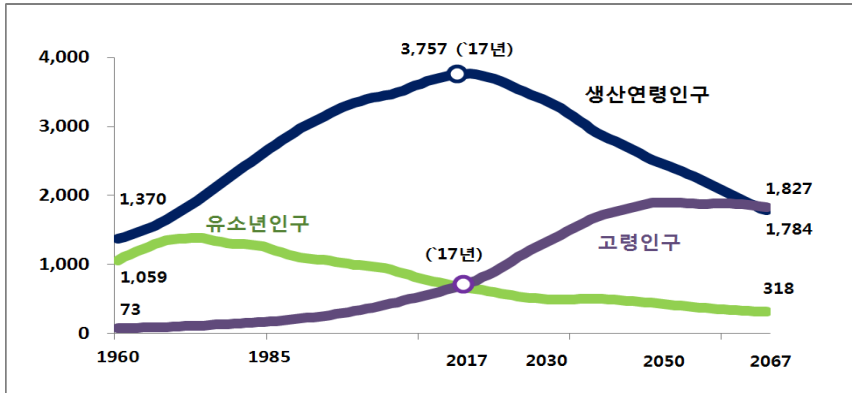
(단위: 만명, %)



자료: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p. 1

[그림 IV-9] 연령별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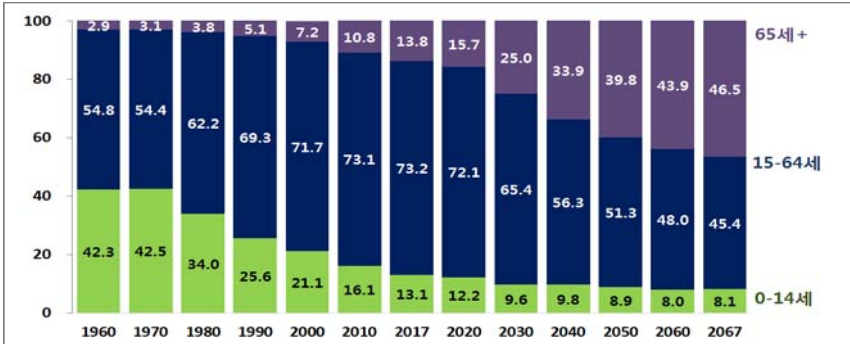
(단위: 만명)



자료: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p. 2

[그림 IV-10] 연령별 인구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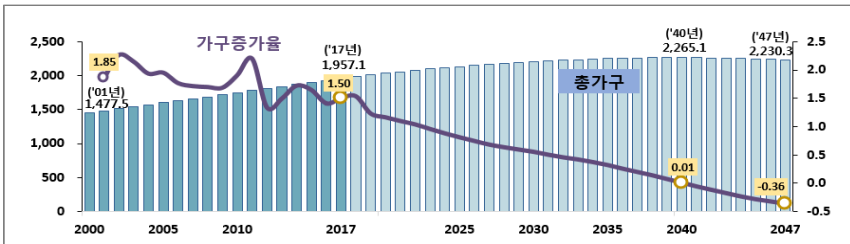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p. 2

이러한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장래가구를 전망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는 총인구가 2028년부터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총가구는 2040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르면 총가구는 2017년 1,957만가구에서 2040년 2,265만가구로 정점에 이른 후 2047년 2,230만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평균 가구원 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장래가구추계』는 평균 가구원 수가 2017년 2.48명에서 2047년 2.03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부적으로 1~2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1인 가구의 비중은 2017년 28.5%에서 2047년 37.3%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2047년 전체 가구 중 72.3%가 2인 이하의 가구로 구성될 전망이다.

[그림 IV-11] 총가구 및 가구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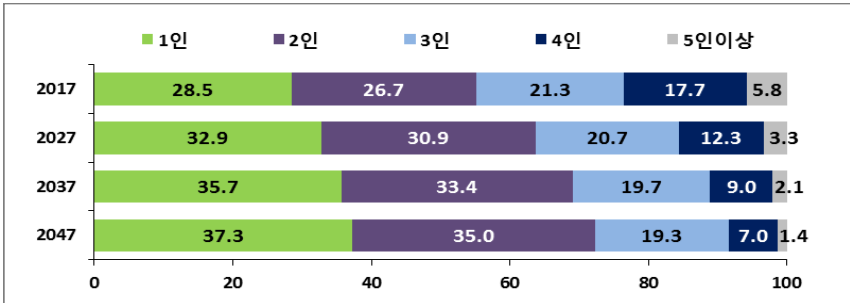
(단위: 만가구, %)



자료: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p. 1

[그림 IV-12] 가구원 수별 가구 구성비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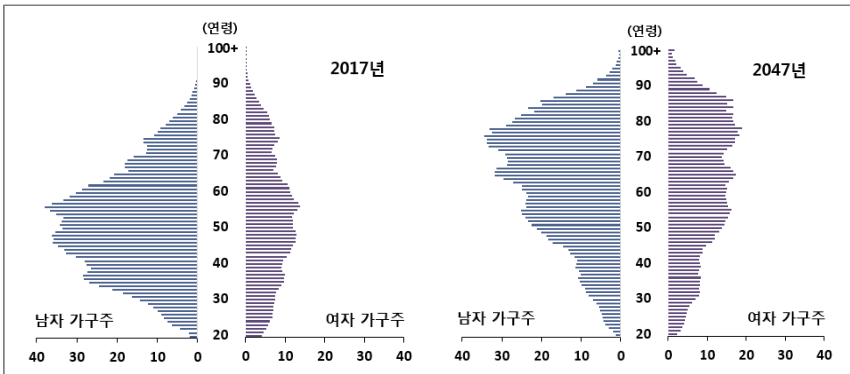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p. 1

인구의 고령화는 가구주 연령의 고령화로 이어진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가구주의 중위 연령은 2017년 51.6세에서 2047년 64.8세로 높아지며, 전체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주 연령대 또한 2017년 40~50대에서 2047년 60~70대로 이동할 전망이다. 한편, 가구주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으나, 2047년까지 여성의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는 2017년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약 30.4%이며, 2047년에는 이 비중이 39.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IV-13] 성·연령별 가구주 변화

(단위: 만가구, 세)



자료: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p. 2

다. 수혜-부담 총량 변화

본 소절에서는 제4절에서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개별 가구의 수혜 및 부담에 대해 『장래가구추계』를 통해 조정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 및 부담의 총량을 전망한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는 2047년까지 가구주 연령대별 그리고 가구원 수별 추계가구 수에 대한 교차표를 제공한다. 가구주 연령대는 19세 이하부터 90세 이상까지 5세 단위로 제공되며, 가구원 수는 1인부터 6인 이상 가구로 구분된다. 다만, 재정패널자료에 낮은 연령과 높은 연령의 가구주 표본이 크지 않아 본 연구는 가구주 연령대를 29세 이하부터 80세 이상을 5세씩 12단계로 구분한다. 따라서 가구주 연령이 12가지로 구분되고, 가구원 수가 6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체 가구는 72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연도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재정패널조사에서 제공되는 가구의 횡단면 가중치의 합이 『장래가구추계』의 연도별 추계인구 수와 동일하도록 일정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때 조정 비율은 앞에서 설명한 72개의 가구 유형별로 달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장래가구추계』에서 2047년 가구주 연령이 40~44세이면서 가구원 수가 4인인 가구는 총 148,495가구로 전망된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재정패널조사의 동일한 유형의 가구의 가중치의 합은 798,653.39로 나타난다. 이에 해당 유형의 가중치의 합이 『장래가구추계』의 추계가구 수와 동일해지도록 약 0.1859를 개별 가구의 가중치에 곱하여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 가구 유형별 가중치를 연도별로 조정하면, 가중치의 조정에 따른 총량 및 분배지표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방법을 통해 추정된 수혜-부담 총량의 추세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이하에서 추정되는 수혜-부담의 총량은 실제로 해당 연도의 재정지출 및 수입에 대한 전망과 상당히 다르다. 본 연구의 추정방법은 물가 등 2017년의 경제환경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각 가구의 소득, 소비 등의 경제활동 또한 불변인 상황에서 가구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가계

의 수혜 및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각 제도의 총량 변화는 뒤에서 분석할 분배지표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제도별 총량의 상대적인 비중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하지만 미래의 경제환경은 2017년과 다르며, 특히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거시경제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재정전망이라 할 수 없다.

재정패널조사 대상 가구에 대한 6가지 수혜 및 부담 규모를 추정한 것이 <표 IV-20>과 [그림 IV-14]~[그림 IV-16]이다. 그 결과 가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기초연금 수급액과 의료수혜 규모는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아동수당과 교육수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고령층에 그 혜택이 돌아가는 기초연금과 의료혜택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반면 아동 및 청년층에 그 혜택이 돌아가는 아동수당과 교육혜택의 규모는 감소시킨다. 또한 전체적인 인구 감소는 소득과 소비에 대한 과세기반의 약화로 인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감소시킨다.

공적현물이전 중 2017년 교육수혜의 규모가 의료수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의 수혜-부담 분석결과와 다르다. <표 IV-13>에서 가구의 평균 의료수혜 규모는 196.5만원으로 교육수혜의 규모인 181.9만원보다 컸다. 하지만 <표 IV-20>에서 의료수혜 총량은 52.37조원으로 교육수혜 총량인 61.60조원보다 작다. 이는 수혜와 부담의 균등화 여부에 따른 결과이다. 앞의 가구단위 분석에서는 수혜와 부담액 비교 시 가구원 수를 통제하기 위해 균등화하였지만, 각 제도로 인한 재정지출 및 수입의 총량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균등화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⁹⁾

9) 만약 균등화한 자료를 이용하여 총량을 추정할 경우에는 <표 IV-20>과 같이 의료수혜의 규모가 교육수혜보다 더 크게 추정된다.

〈표 IV-20〉 장래가구추계를 적용한 수혜-부담 총량 전망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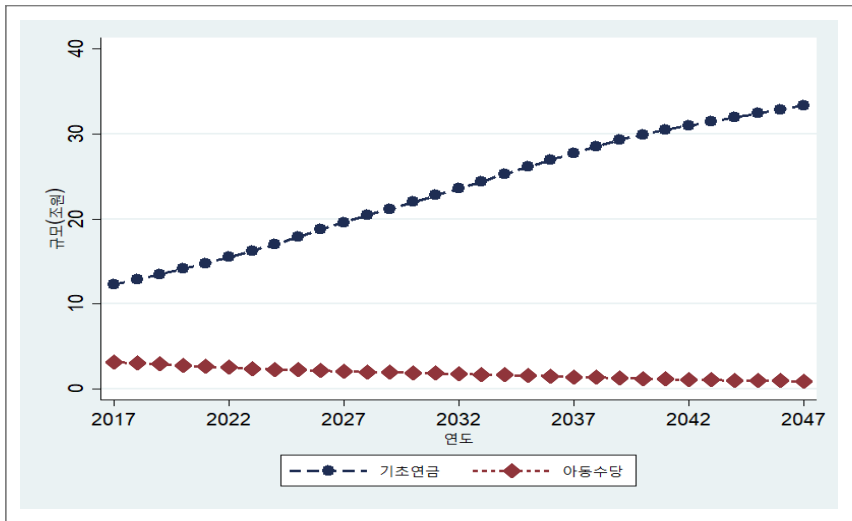
연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소득세	부가가치세	교육수혜	의료수혜
2017	12.29	3.18	16.50	49.01	61.60	52.37
2018	12.93	3.05	16.36	49.15	59.49	53.53
2019	13.47	2.92	16.22	49.23	57.30	54.48
2020	14.17	2.78	16.04	49.21	55.24	55.51
2021	14.80	2.64	15.87	49.21	53.25	56.49
2022	15.50	2.52	15.74	49.18	51.44	57.53
2023	16.25	2.41	15.55	49.10	49.58	58.60
2024	17.01	2.32	15.36	49.02	47.69	59.62
2025	17.88	2.24	15.10	48.87	45.87	60.72
2026	18.78	2.15	14.83	48.71	44.14	61.79
2027	19.57	2.08	14.59	48.55	42.58	62.86
2028	20.43	2.02	14.34	48.33	41.14	63.94
2029	21.16	1.97	14.12	48.13	39.78	64.97
2030	21.99	1.91	13.95	47.86	38.48	66.08
2031	22.82	1.85	13.78	47.58	37.22	67.16
2032	23.60	1.78	13.63	47.29	36.05	68.17
2033	24.41	1.71	13.46	46.96	34.99	69.19
2034	25.27	1.64	13.26	46.59	33.99	70.18
2035	26.12	1.57	13.04	46.19	33.02	71.23
2036	26.98	1.51	12.82	45.76	32.04	72.25
2037	27.77	1.43	12.55	45.34	30.97	73.16
2038	28.54	1.36	12.28	44.89	29.93	74.06
2039	29.28	1.29	12.02	44.45	28.92	74.90
2040	29.92	1.22	11.76	43.97	27.92	75.70
2041	30.49	1.16	11.49	43.50	26.92	76.49
2042	31.00	1.11	11.24	43.05	25.85	77.14
2043	31.48	1.06	11.01	42.59	24.83	77.76
2044	31.94	1.02	10.80	42.12	23.82	78.25
2045	32.43	0.98	10.58	41.65	22.81	78.71
2046	32.90	0.95	10.37	41.18	21.86	79.11
2047	33.31	0.92	10.17	40.71	20.99	79.45
연평균 증가율	3.38	-4.05	-1.60	-0.62	-3.53	1.40

자료: 재정패널조사 제11차년도 원시자료와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공적연금이전소득인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추세를 먼저 살펴보자. 기초 연금을 통한 가계의 총수혜 규모는 2017년 12.29조원에서 2047년 33.31조원으로 30년간 연평균 3.38%의 속도로 증가한다. 기초연금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가구의 기초연금 수혜 규모가 증가한다. 반면 아동수당을 통한 가계의 총수혜 규모는 2017년 3.18조원에서 2047년 0.92조원으로 30년간 연평균 4.05%의 속도로 감소한다. 『장래가계추계』에서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아동 가구의 비중이 감소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가계의 아동수당 수급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림 IV-14] 공적연금이전 총량 전망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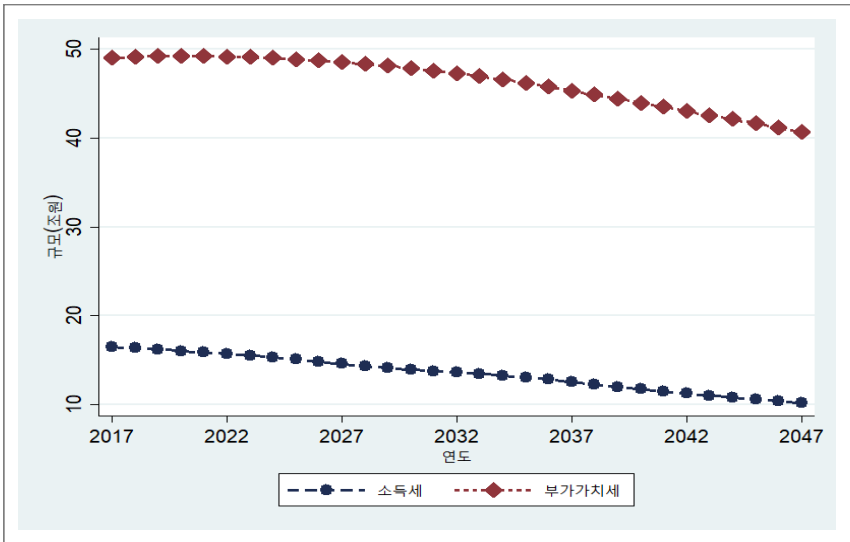
자료: 재정패널조사 제11차년도 원시자료와 통계청(2019), 『장래가계특별추계: 2017~204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다음으로는 가계가 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추세를 살펴보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모두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는 2017년 16.50조원에서 2047년 10.17조원으로,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2017년 49.01조원에서 2047년 40.71조원으로 각각 30년간 연평균 1.60%와

0.62%의 속도로 감소한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소득과 소비 수준이 높은 생산가능계층의 납부 비중이 크다. 하지만 앞의 『장래가구추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47년으로 갈수록 경제활동이 왕성한 40~50대의 비중이 점차 감소되고 소득활동과 소비활동에 제약이 있는 60~70대의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가구 전망은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가정하지 않고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경제활동을 영위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인 소득 수준과 소비 수준의 감소가 필연적이다. 이로 인해 가계가 납부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총량은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생산가능연령과 비교해 은퇴연령계층의 경우 소득활동은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소비활동은 소득활동만큼 급격히 줄지 않아 소득세의 감소 속도가 부가가치세의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IV-15] 조세수입 총량 전망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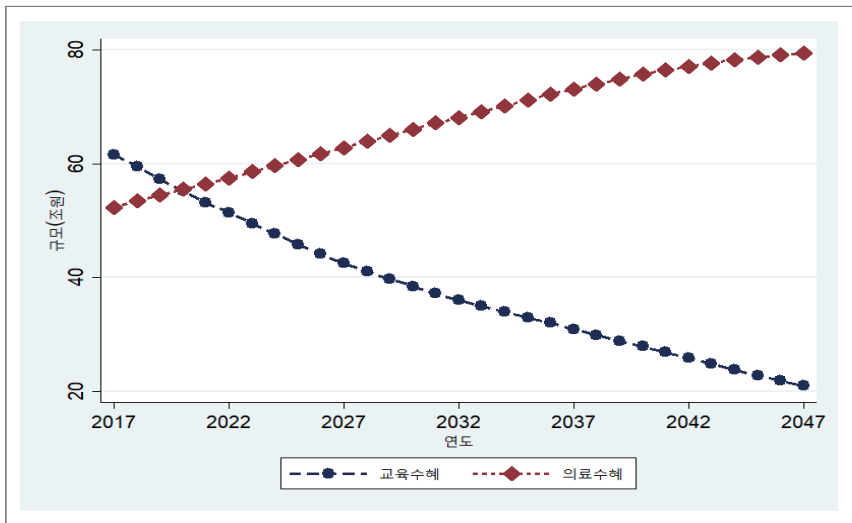


자료: 재정패널조사 제11차년도 원시자료와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마지막으로 공적현물이전에 대해 살펴보자.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교육수혜는 2017년 61.60조원에서 2047년 20.99조원으로 연평균 3.53%의 속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학령기의 가구원이 속한 가구 수의 감소가 미래 교육수혜의 감소추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의료수혜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서비스의 이용 계층 또한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그 관계가 선형이 아닌 비선형이다. 영유아기의 아동과 고령층에서의 의료서비스 이용 실적이 높은 반면 청장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저출산은 가계의 의료수혜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고령화는 가계의 의료수혜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만, 의료서비스 이용 기간과 수가를 고려할 때 가계의 의료수혜는 고령층의 비중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하여 의료수혜 총량은 2017년 52.37조원에서 2047년 79.45조원으로 연평균 1.40%의 속도로 증가한다.

[그림 IV-16] 공적현물이전 총량 전망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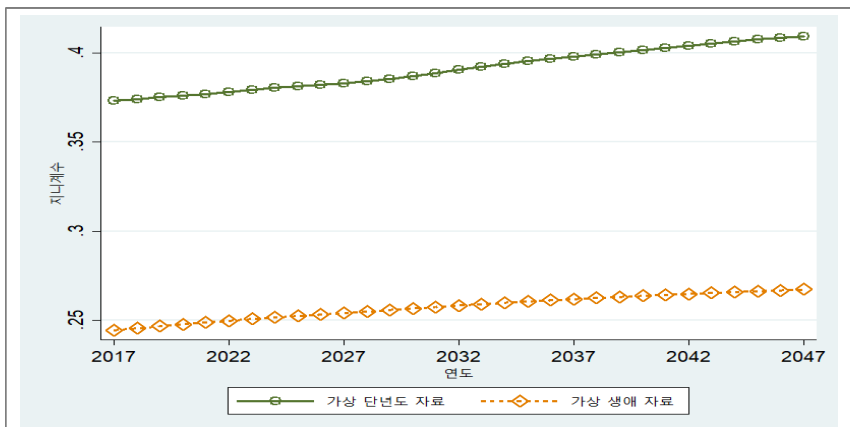
자료: 재정패널조사 제11차년도 원시자료와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라. 분배지표 변화

본 소절에서는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를 전망하고, 미래 시점별로 앞에서 살펴본 6가지의 제도로 인한 지니계수의 개선 정도를 추정한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포에 의해 결정되고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 분포의 변화는 앞의 수혜·부담의 총량 추정방법과 마찬가지로 가구 가중치의 변화로 추정될 수 있다. 한편 이하에서의 지니계수는 소득, 수혜, 부담을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균등화하여 측정한다. 또한 앞의 수혜 및 부담 분석에서 측정된 단년도 기준과 생애 기준의 시장소득 및 조정소득을 이용하여 미래의 각 시점별로 장단기 소득의 지니계수와 각 제도로 인한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개선율을 비교한다.

장단기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년도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2017년 0.3734에서 2047년 0.4092로 30년간 연평균 0.31%의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생산가능계층의 가구가 감소하고 은퇴연령계층의 가구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고령화로 인한 가구구조의 변화는 정년연장이나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단년도 시장소득이 낮은 가구의 비중을 증가시켜 단년도 시장소득의 불평등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림 IV-17] 시장소득의 지니계수 전망



자료: 재정패널조사 제11차년도 원시자료와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21〉 시장소득과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가상 단년도 자료)

연도	시장 소득	조정소득						
		기초 연금 추가	아동 수당 추가	소득세 차감	부가 가치세 차감	교육 수혜 추가	의료 수혜 추가	전체 제도 반영
2017	0,3734	0,3559	0,3721	0,3692	0,3814	0,3544	0,3474	0,3143
2018	0,3743	0,3560	0,3731	0,3701	0,3824	0,3562	0,3476	0,3148
2019	0,3751	0,3563	0,3740	0,3710	0,3832	0,3579	0,3478	0,3155
2020	0,3762	0,3566	0,3751	0,3720	0,3843	0,3597	0,3482	0,3161
2021	0,3770	0,3569	0,3761	0,3729	0,3852	0,3613	0,3486	0,3168
2022	0,3784	0,3574	0,3774	0,3742	0,3866	0,3633	0,3492	0,3174
2023	0,3796	0,3579	0,3787	0,3755	0,3878	0,3652	0,3497	0,3180
2024	0,3805	0,3580	0,3797	0,3764	0,3888	0,3667	0,3500	0,3183
2025	0,3815	0,3580	0,3807	0,3775	0,3898	0,3684	0,3502	0,3183
2026	0,3823	0,3578	0,3815	0,3782	0,3906	0,3697	0,3502	0,3182
2027	0,3831	0,3577	0,3824	0,3791	0,3915	0,3710	0,3502	0,3181
2028	0,3841	0,3576	0,3834	0,3801	0,3925	0,3725	0,3504	0,3179
2029	0,3853	0,3579	0,3846	0,3813	0,3937	0,3742	0,3507	0,3181
2030	0,3870	0,3586	0,3864	0,3831	0,3956	0,3764	0,3514	0,3184
2031	0,3888	0,3593	0,3882	0,3848	0,3974	0,3787	0,3522	0,3189
2032	0,3906	0,3600	0,3900	0,3866	0,3993	0,3808	0,3530	0,3194
2033	0,3924	0,3608	0,3919	0,3884	0,4012	0,3831	0,3538	0,3198
2034	0,3939	0,3612	0,3934	0,3899	0,4028	0,3850	0,3544	0,3199
2035	0,3954	0,3616	0,3950	0,3914	0,4044	0,3868	0,3547	0,3198
2036	0,3969	0,3619	0,3965	0,3929	0,4059	0,3886	0,3551	0,3196
2037	0,3980	0,3619	0,3976	0,3941	0,4071	0,3901	0,3552	0,3193
2038	0,3993	0,3621	0,3988	0,3953	0,4084	0,3916	0,3553	0,3190
2039	0,4004	0,3622	0,4000	0,3965	0,4096	0,3930	0,3555	0,3187
2040	0,4017	0,3625	0,4013	0,3978	0,4109	0,3946	0,3558	0,3186
2041	0,4030	0,3629	0,4027	0,3991	0,4123	0,3961	0,3560	0,3185
2042	0,4042	0,3632	0,4039	0,4003	0,4136	0,3976	0,3563	0,3185
2043	0,4054	0,3636	0,4050	0,4015	0,4148	0,3990	0,3565	0,3184
2044	0,4066	0,3639	0,4063	0,4027	0,4161	0,4005	0,3568	0,3184
2045	0,4075	0,3640	0,4072	0,4037	0,4171	0,4017	0,3569	0,3182
2046	0,4084	0,3641	0,4081	0,4046	0,4180	0,4028	0,3570	0,3179
2047	0,4092	0,3641	0,4090	0,4054	0,4189	0,4039	0,3571	0,3177
연평균 증가율(%)	0,3065	0,0765	0,3153	0,3123	0,3130	0,4364	0,0917	0,0354

자료: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와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22〉 시장소득 대비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개선율 전망(가상 단년도 자료)

(단위: %)

연도	기초연금 추가	아동수당 추가	소득세 차감	부가가치세 차감	교육수혜 추가	의료수혜 추가	전체제도 반영
2017	4.6834	0.3306	1.1092	-2.1611	5.0755	6.9468	15.8083
2018	4.8738	0.3114	1.1006	-2.1639	4.8257	7.1374	15.8795
2019	5.0165	0.2943	1.0971	-2.1652	4.5974	7.2756	15.8886
2020	5.1973	0.2777	1.0929	-2.1666	4.3787	7.4279	15.9574
2021	5.3418	0.2625	1.0910	-2.1682	4.1766	7.5495	15.9846
2022	5.5282	0.2481	1.0881	-2.1695	3.9853	7.7147	16.0999
2023	5.7219	0.2350	1.0838	-2.1710	3.8008	7.8806	16.2291
2024	5.9220	0.2233	1.0767	-2.1722	3.6243	8.0343	16.3595
2025	6.1681	0.2121	1.0671	-2.1752	3.4544	8.2215	16.5653
2026	6.4126	0.2014	1.0564	-2.1784	3.2972	8.3877	16.7628
2027	6.6403	0.1912	1.0463	-2.1836	3.1532	8.5804	16.9782
2028	6.8925	0.1816	1.0368	-2.1906	3.0138	8.7855	17.2313
2029	7.1046	0.1726	1.0296	-2.1985	2.8819	8.9770	17.4441
2030	7.3563	0.1633	1.0264	-2.2070	2.7449	9.2009	17.7196
2031	7.6024	0.1542	1.0246	-2.2163	2.6124	9.4133	17.9845
2032	7.8254	0.1454	1.0248	-2.2258	2.4920	9.6185	18.2344
2033	8.0640	0.1371	1.0240	-2.2359	2.3791	9.8359	18.5149
2034	8.3087	0.1295	1.0207	-2.2447	2.2775	10.0467	18.8054
2035	8.5669	0.1223	1.0139	-2.2547	2.1827	10.2939	19.1408
2036	8.8326	0.1156	1.0065	-2.2644	2.0906	10.5411	19.4850
2037	9.0718	0.1094	0.9961	-2.2730	2.0056	10.7634	19.7877
2038	9.3142	0.1036	0.9856	-2.2813	1.9245	10.9966	20.1064
2039	9.5455	0.0981	0.9773	-2.2904	1.8473	11.2172	20.4081
2040	9.7543	0.0928	0.9706	-2.2997	1.7737	11.4411	20.6966
2041	9.9525	0.0879	0.9637	-2.3090	1.7026	11.6649	20.9771
2042	10.1313	0.0834	0.9586	-2.3185	1.6298	11.8567	21.2118
2043	10.3115	0.0792	0.9545	-2.3281	1.5607	12.0529	21.4553
2044	10.4936	0.0753	0.9502	-2.3373	1.4926	12.2361	21.6906
2045	10.6797	0.0717	0.9446	-2.3454	1.4292	12.4151	21.9308
2046	10.8618	0.0683	0.9398	-2.3539	1.3695	12.5889	22.1665
2047	11.0249	0.0654	0.9353	-2.3614	1.3151	12.7412	22.3737
평균	7.8452	0.1627	1.0223	-2.2391	2.7450	9.7369	18.5767

자료: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와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23〉 시장소득과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가상 생애 자료)

연도	시장 소득	조정소득						
		기초 연금 추가	아동 수당 추가	소득세 차감	부가 가치세 차감	교육 수혜 추가	의료 수혜 추가	전체 제도 반영
2017	0.2444	0.2325	0.2426	0.2423	0.2512	0.2214	0.2278	0.1983
2018	0.2456	0.2336	0.2438	0.2435	0.2524	0.2226	0.2289	0.1994
2019	0.2467	0.2347	0.2450	0.2447	0.2536	0.2238	0.2300	0.2005
2020	0.2478	0.2357	0.2460	0.2457	0.2547	0.2249	0.2310	0.2015
2021	0.2488	0.2367	0.2471	0.2468	0.2558	0.2260	0.2319	0.2024
2022	0.2498	0.2376	0.2481	0.2477	0.2568	0.2270	0.2328	0.2033
2023	0.2507	0.2385	0.2490	0.2486	0.2578	0.2280	0.2337	0.2042
2024	0.2516	0.2393	0.2499	0.2495	0.2587	0.2289	0.2345	0.2050
2025	0.2524	0.2401	0.2507	0.2503	0.2595	0.2298	0.2353	0.2058
2026	0.2532	0.2409	0.2515	0.2511	0.2604	0.2306	0.2360	0.2066
2027	0.2540	0.2416	0.2523	0.2519	0.2611	0.2314	0.2367	0.2073
2028	0.2549	0.2425	0.2532	0.2528	0.2621	0.2324	0.2376	0.2082
2029	0.2558	0.2434	0.2541	0.2537	0.2631	0.2333	0.2385	0.2090
2030	0.2567	0.2442	0.2550	0.2546	0.2640	0.2342	0.2393	0.2099
2031	0.2576	0.2450	0.2559	0.2555	0.2648	0.2351	0.2401	0.2106
2032	0.2584	0.2457	0.2567	0.2562	0.2657	0.2360	0.2408	0.2114
2033	0.2591	0.2465	0.2574	0.2570	0.2665	0.2368	0.2415	0.2121
2034	0.2599	0.2472	0.2582	0.2578	0.2672	0.2376	0.2422	0.2128
2035	0.2606	0.2478	0.2589	0.2585	0.2680	0.2383	0.2429	0.2135
2036	0.2613	0.2485	0.2596	0.2591	0.2687	0.2391	0.2435	0.2142
2037	0.2619	0.2491	0.2602	0.2598	0.2693	0.2397	0.2441	0.2148
2038	0.2626	0.2497	0.2609	0.2604	0.2700	0.2404	0.2447	0.2154
2039	0.2632	0.2503	0.2615	0.2610	0.2706	0.2411	0.2453	0.2160
2040	0.2638	0.2508	0.2621	0.2616	0.2712	0.2417	0.2458	0.2166
2041	0.2643	0.2514	0.2626	0.2622	0.2718	0.2423	0.2463	0.2171
2042	0.2649	0.2519	0.2632	0.2627	0.2724	0.2429	0.2469	0.2176
2043	0.2654	0.2524	0.2637	0.2632	0.2729	0.2434	0.2473	0.2181
2044	0.2659	0.2529	0.2642	0.2637	0.2734	0.2440	0.2478	0.2186
2045	0.2664	0.2533	0.2647	0.2642	0.2740	0.2445	0.2483	0.2191
2046	0.2668	0.2538	0.2652	0.2647	0.2744	0.2450	0.2487	0.2195
2047	0.2673	0.2542	0.2656	0.2651	0.2749	0.2455	0.2491	0.2200
연평균 증가율(%)	0.2996	0.2983	0.3029	0.3004	0.3011	0.3450	0.2987	0.3463

자료: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와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24〉 시장소득 대비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개선을 전망(가상 생애 자료)

(단위: %)

연도	기초연금 추가	아동수당 추가	소득세 차감	부가가치세 차감	교육수혜 추가	의료수혜 추가	전체제도 반영
2017	4.8663	0.7160	0.8314	-2.7994	9.3909	6.7783	18.8441
2018	4.8677	0.7113	0.8302	-2.8014	9.3315	6.7789	18.7889
2019	4.8691	0.7068	0.8291	-2.8033	9.2749	6.7796	18.7363
2020	4.8704	0.7025	0.8280	-2.8051	9.2208	6.7803	18.6860
2021	4.8717	0.6984	0.8270	-2.8069	9.1691	6.7811	18.6380
2022	4.8730	0.6944	0.8260	-2.8086	9.1196	6.7818	18.5921
2023	4.8743	0.6907	0.8251	-2.8103	9.0722	6.7825	18.5483
2024	4.8755	0.6871	0.8242	-2.8119	9.0269	6.7832	18.5063
2025	4.8767	0.6836	0.8234	-2.8134	8.9835	6.7840	18.4661
2026	4.8779	0.6803	0.8226	-2.8149	8.9419	6.7847	18.4276
2027	4.8791	0.6772	0.8218	-2.8163	8.9021	6.7854	18.3908
2028	4.8806	0.6732	0.8209	-2.8182	8.8515	6.7864	18.3441
2029	4.8820	0.6693	0.8200	-2.8200	8.8028	6.7873	18.2991
2030	4.8835	0.6656	0.8191	-2.8217	8.7556	6.7883	18.2556
2031	4.8849	0.6620	0.8183	-2.8234	8.7101	6.7892	18.2136
2032	4.8863	0.6585	0.8175	-2.8251	8.6661	6.7902	18.1731
2033	4.8876	0.6552	0.8167	-2.8267	8.6236	6.7911	18.1339
2034	4.8890	0.6519	0.8160	-2.8283	8.5825	6.7921	18.0961
2035	4.8903	0.6488	0.8153	-2.8298	8.5428	6.7930	18.0595
2036	4.8916	0.6458	0.8146	-2.8313	8.5043	6.7939	18.0241
2037	4.8929	0.6428	0.8139	-2.8327	8.4671	6.7948	17.9899
2038	4.8941	0.6400	0.8133	-2.8342	8.4310	6.7958	17.9568
2039	4.8953	0.6372	0.8127	-2.8355	8.3962	6.7967	17.9248
2040	4.8965	0.6346	0.8121	-2.8369	8.3624	6.7976	17.8938
2041	4.8977	0.6320	0.8115	-2.8382	8.3297	6.7984	17.8638
2042	4.8988	0.6295	0.8110	-2.8395	8.2980	6.7993	17.8348
2043	4.9000	0.6271	0.8104	-2.8407	8.2673	6.8002	17.8066
2044	4.9011	0.6248	0.8099	-2.8419	8.2375	6.8010	17.7794
2045	4.9021	0.6225	0.8094	-2.8431	8.2088	6.8018	17.7530
2046	4.9032	0.6203	0.8090	-2.8443	8.1808	6.8026	17.7274
2047	4.9042	0.6182	0.8085	-2.8454	8.1536	6.8034	17.7026
평균	4.8859	0.6615	0.8183	-2.8241	8.7034	6.7904	18.2083

자료: 제3장의 가상패널자료와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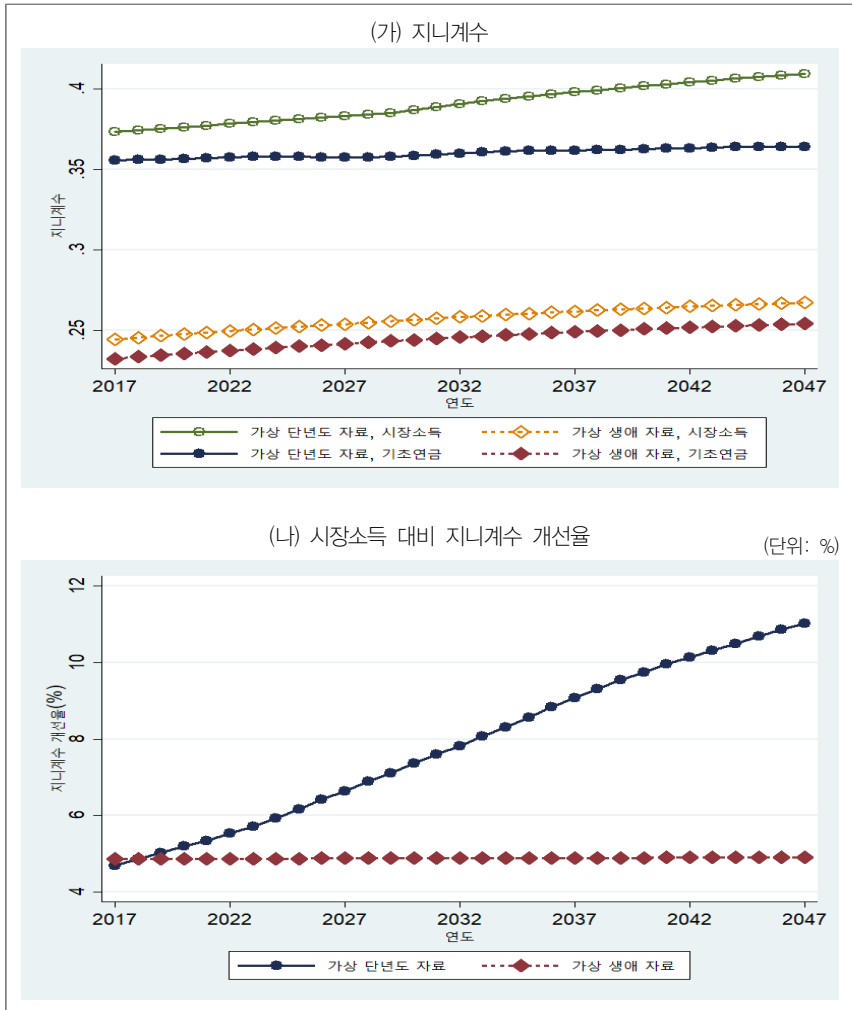
생애 시장소득의 지니계수 또한 2017년 0.2444에서 2047년 0.2673으로 연평균 0.31%의 속도로 증가하여 모든 기간에 대해 단년도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보다 낮지만 그 증가 추세는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년도 시장소득의 분포와 달리 생애 시장소득의 분포는 연령에 대한 효과가 제거된다. 따라서 단순히 고령화만 발생한다면 생애 시장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망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생애 시장소득의 지니계수 또한 단년도 시장소득의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미래에 1~2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2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3인 이상 가구보다 시장소득이 낮다. 이로 인해 1~2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도도 높아지게 된다.

단년도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을 살펴보면 향후 고령화로 인하여 기초연금과 의료수혜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으로 인한 지니계수의 개선율은 2017년 4.68%에서 2047년 11.02%로 증가한다. 의료수혜로 인한 지니계수의 개선율 또한 2017년 6.95%에서 2047년 12.74%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고령자를 대상으로한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의료수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 두 가지 제도를 반영한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증가율은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증가율을 큰 폭으로 낮춘다. 향후 30년간 시장소득의 지니계수 증가율이 연평균 0.31%로 전망되지만, 같은 기간 기초연금을 반영한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증가율은 0.08%에 그치고, 의료수혜를 반영한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증가율은 0.09%로 낮게 전망된다.

하지만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측정된 지니계수의 개선율을 살펴보면 기초연금과 의료수혜의 개선율이 향후에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애소득 기준 기초연금으로 인한 지니계수의 개선율은 2017년 4.87%에서 2047년 4.90%로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의료수혜로 인한 지니계수의 개선율 또한 2017년 6.78%에서 2047년 6.80%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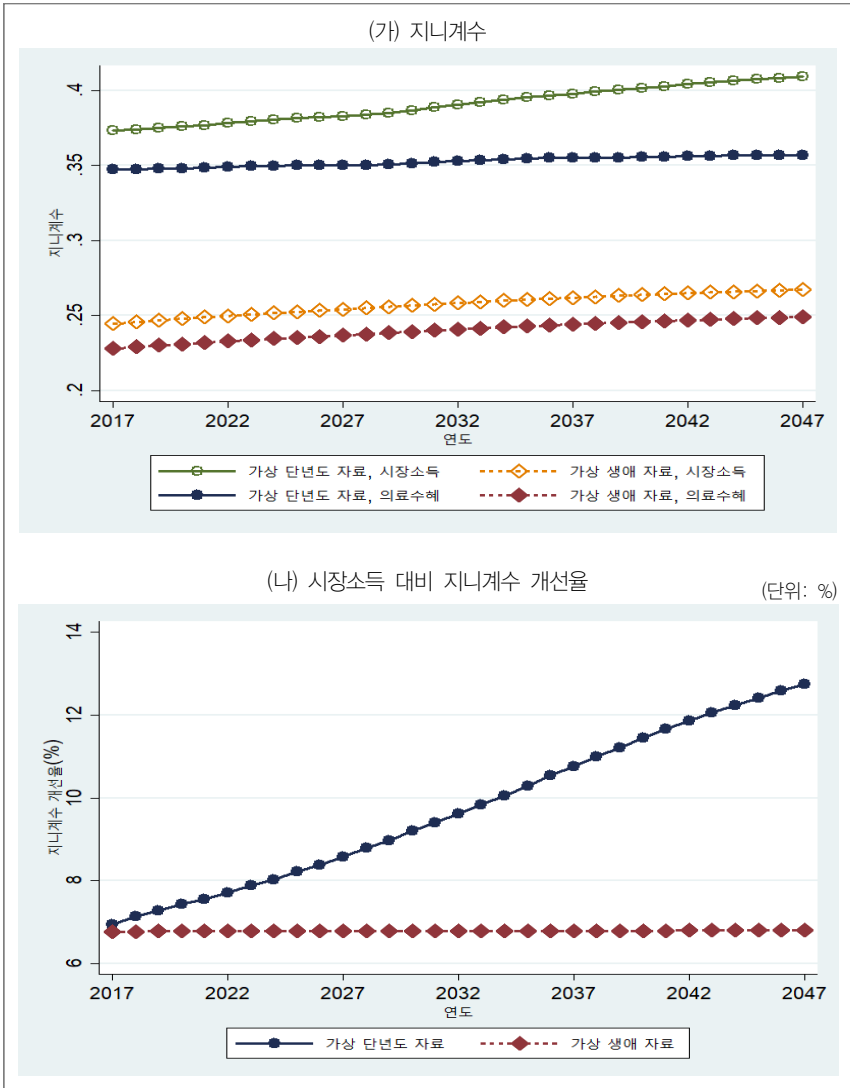
연령에 대한 효과보다는 1~2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핵가족화로 인한 영향이 주로 지니계수의 변화에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과 의료수혜를 반영한 조정소득의 지니계수는 향후 30년간 모두 연평균 0.30% 증가하여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연평균 증가율과 거의 유사하다.

[그림 IV-18] 기초연금 반영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



자료: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와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V-19] 의료수혜 반영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



자료: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와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이동수당과 교육수혜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이 점차 축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특징은 단년도 소득과 생애소득 기준의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다만 단년도 소득 기준 분석에서 두 제도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축소되는 추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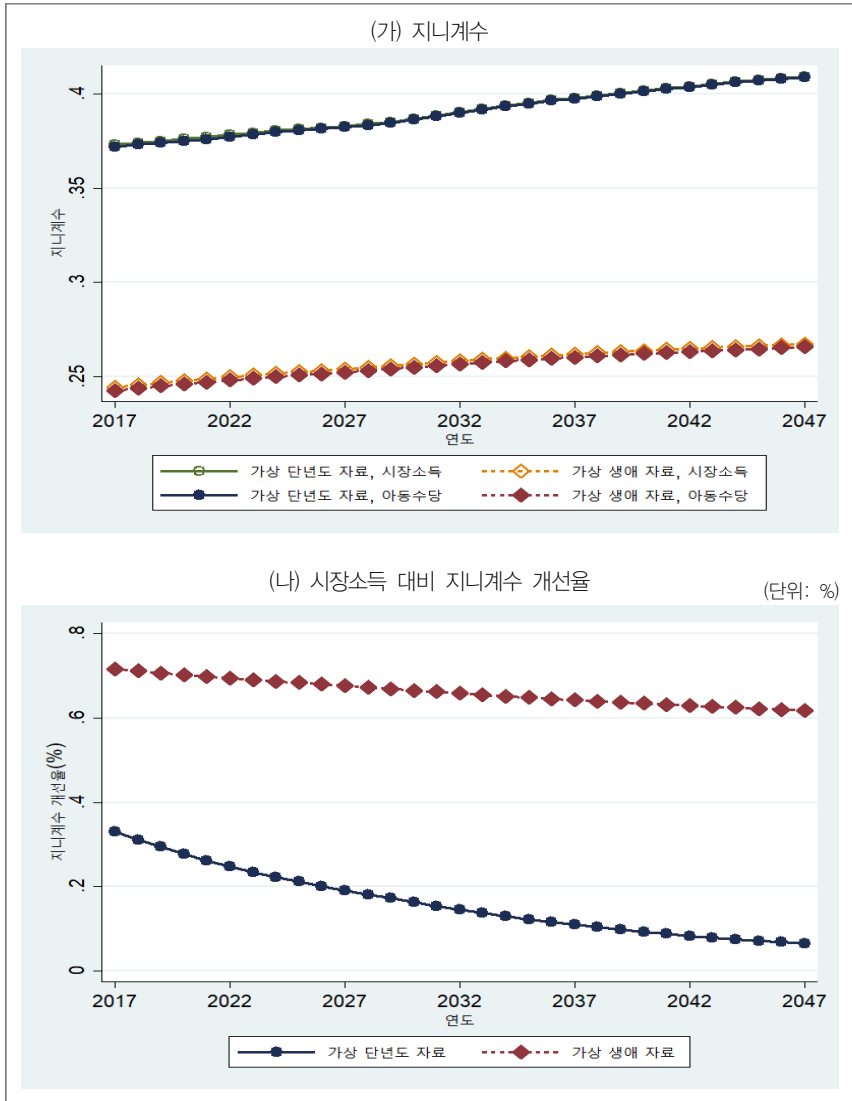
단년도 기준 분석에서 아동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니계수의 개선율은 2017년 0.33%에서 2047년 0.07%로 축소된다. 다만 다른 제도와 비교해 아동수당의 제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향후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다. 아동수당을 반영한 조정소득의 지니계수가 향후 30년간 연평균 0.32% 증가해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연평균 증가율인 0.23%보다 소폭 확대된 수준이다.

반면 동일한 단년도 기준 분석에서 교육수혜로 인한 지니계수의 개선율은 2017년 5.08%에서 2047년 1.32%로 큰 폭으로 감소한다. 교육수혜는 아동수당과 같이 저출산에 영향을 받지만 정책 대상이 아동수당보다 더 포괄적이며 1인당 수혜 규모 또한 크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수당보다 더 크다. 이로 인해 교육수혜를 반영한 조정소득의 지니계수는 향후 30년간 연평균 0.4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시장소득의 지니계수 연평균 증가율인 0.31%보다 약 0.13%p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교육수혜를 반영한 조정소득 지니계수의 증가율은 다른 제도를 반영한 조정소득 지니계수의 증가율보다 더 높다.

한편 생애 기준 분석에서도 아동수당을 반영할 경우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2017년 0.72%에서 2047년 0.62%로 감소한다. 마찬가지로 교육수혜를 반영할 경우의 지니계수 개선율 또한 2017년 9.39%에서 2047년 8.15%로 감소한다. 단년도 기준 분석과 비교해 지니계수 개선율 감소폭이 작아졌지만 다른 제도들과 비교할 경우에는 그 개선율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로 인해 아동수당과 교육수혜를 반영한 조정소득의 지니계수는 향후 30년간 각각 연평균 0.30%와 0.35%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러한 증가율은 다른 제도들을 반영한 조정소득의 지니계수보다 큰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단년도 기준 분석과 마찬가지로 생애소득 기준 분석에서도 아동수당과 교육수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축소되는데, 이는 핵가족화와 저출산에 기인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현재 아동수당과 교육수혜가 소득재분배에 순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향후 저출산으로 인하여 정책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두 제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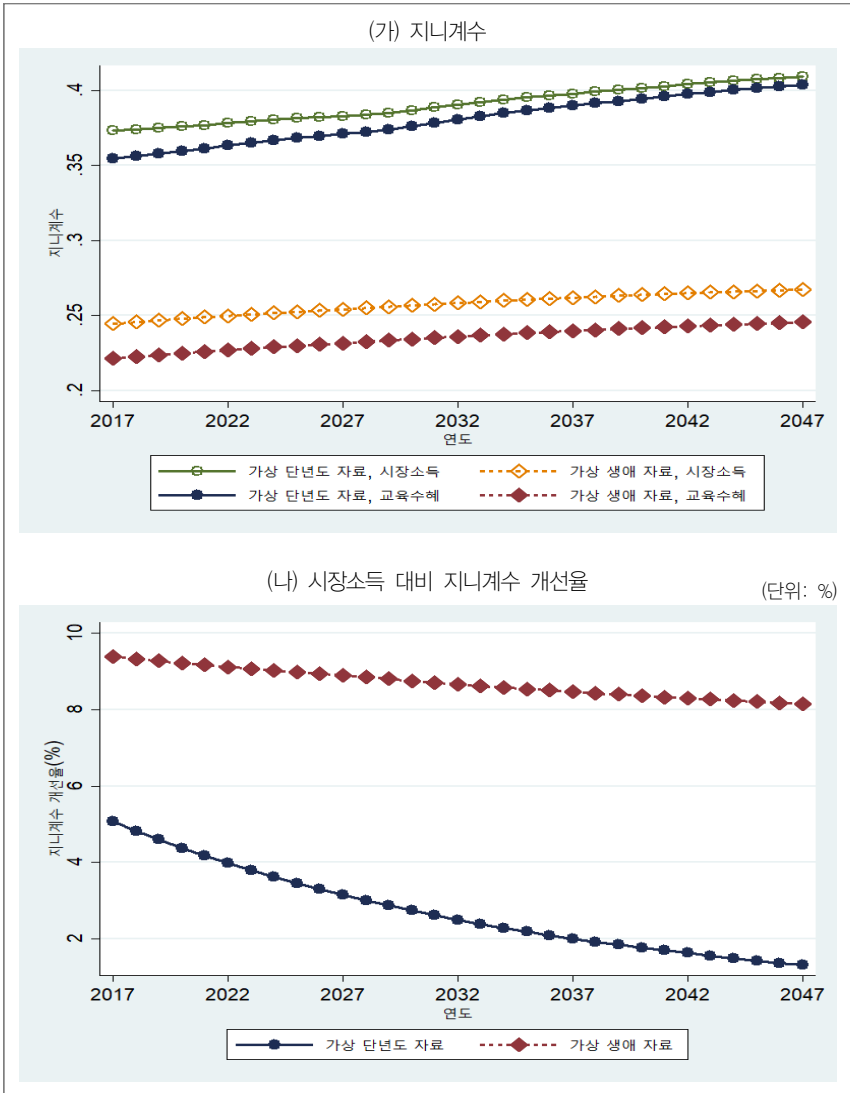
소득재분배 기능이 단년도 소득 기준 분석과 생애 기준 분석에서 모두 축소될 전망이다.

[그림 IV-20] 아동수당 반영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



자료: 제Ⅲ 장의 가상패널자료와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V-21] 교육수혜 반영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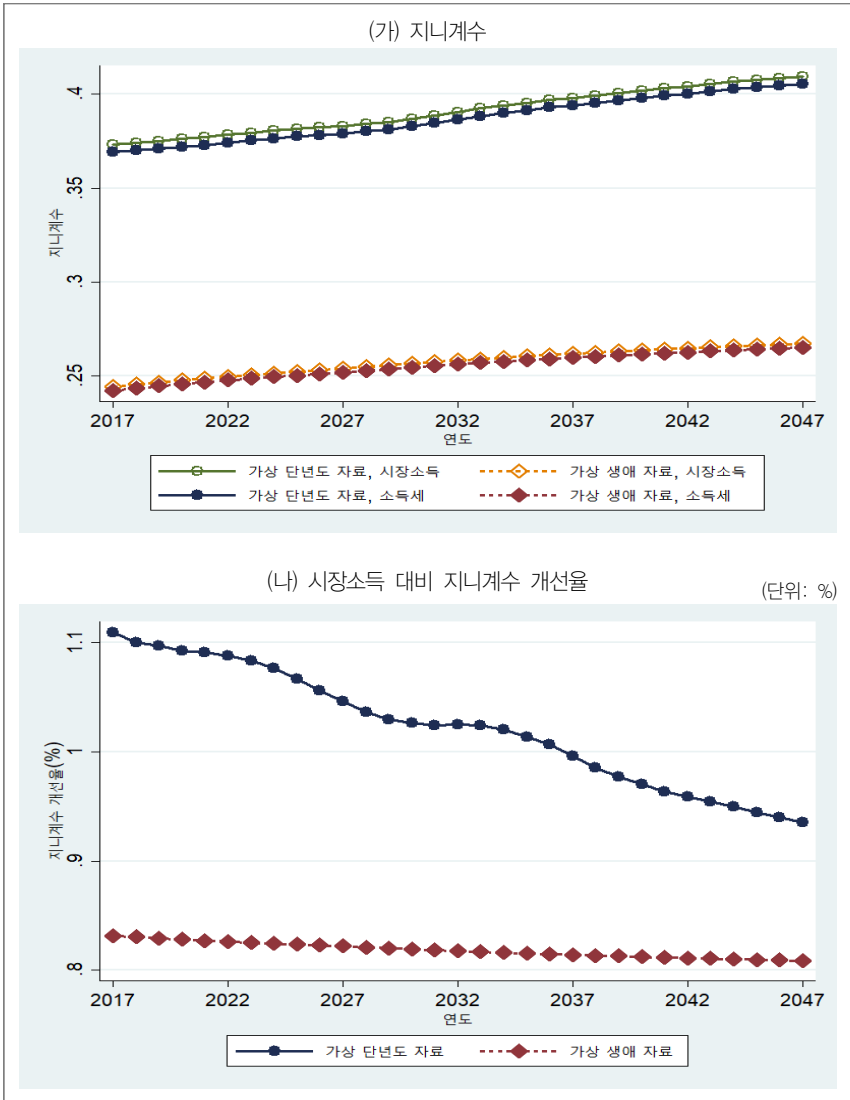
자료: 제 III 장의 가상패널자료와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가계가 부담하는 소득세의 경우 향후 소득재분배 기능이 축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는 단년도 소득 기준 분석과 생애소득 기준 분석에서 동일

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생애소득 기준의 분석에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축소폭은 단년도 소득 기준 분석보다 작을 전망이다. 단년도 소득 기준 분석에서 소득세로 인한 지니계수의 개선율은 2017년 1.11%에서 2047년 0.94%로 감소한다. 생애소득 기준의 분석 또한 소득세로 인한 지니계수의 개선율이 2017년 0.83%에서 0.81%로 감소한다. 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모두 소득세로 인한 지니계수의 개선율은 감소하지만 그 축소 폭이 단년도 소득 기준 분석에서 더 크다. 한편, 소득세를 반영한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치를 살펴보면, 단년도 기준 분석과 생애소득 기준 분석 각각 향후 30년간 연평균 0.31%, 0.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모두 시장소득의 지니계수 증가율보다 소폭 높은 증가율이다. 즉, 향후 은퇴연령계층 가구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기반이 약해져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점차 축소됨을 의미한다. 핵가족화 또한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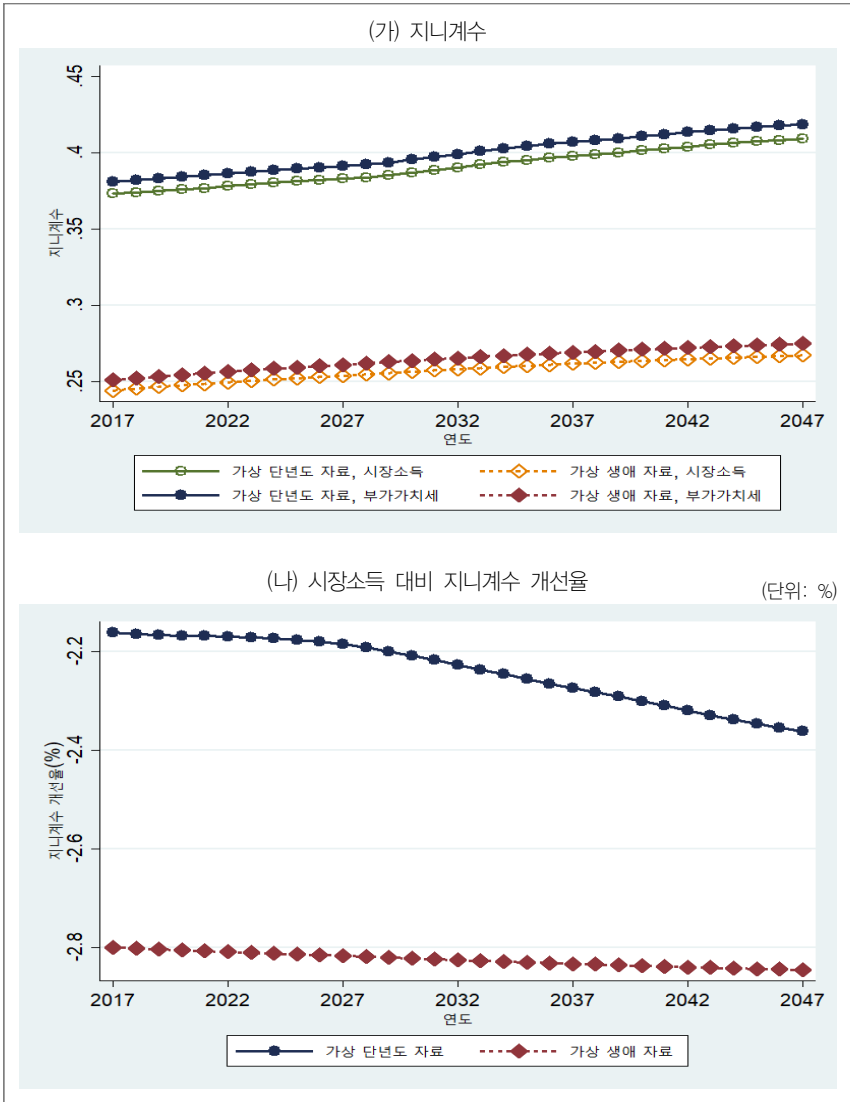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역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향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단년도 소득 기준 분석에서 부가가치세로 인한 지니계수 증가율은 2017년 2.16%에서 2047년 2.36%로 증가한다. 생애소득 기준 분석에서도 부가가치세로 인한 지니계수 증가율이 2017년 2.80%에서 2047년 2.85%로 증가한다.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반영한 조정소득의 지니계수는 향후 30년간 단년도 소득 기준 분석과 생애소득 기준 분석에서 모두 시장소득의 지니계수 증가율보다 높게 전망된다. 소득재분배의 역할에서 부가가치세의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소비의 감소 속도보다 소득의 감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소비지출의 규모를 축소시켜 부가가치세의 소득재분배 역할 또한 축소시키는 방향을 작용할 수 있지만, 장단기에 모두 저소득층의 소득이 소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면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역진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

[그림 IV-22] 소득세 반영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



자료: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와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V-23] 부가가치세 반영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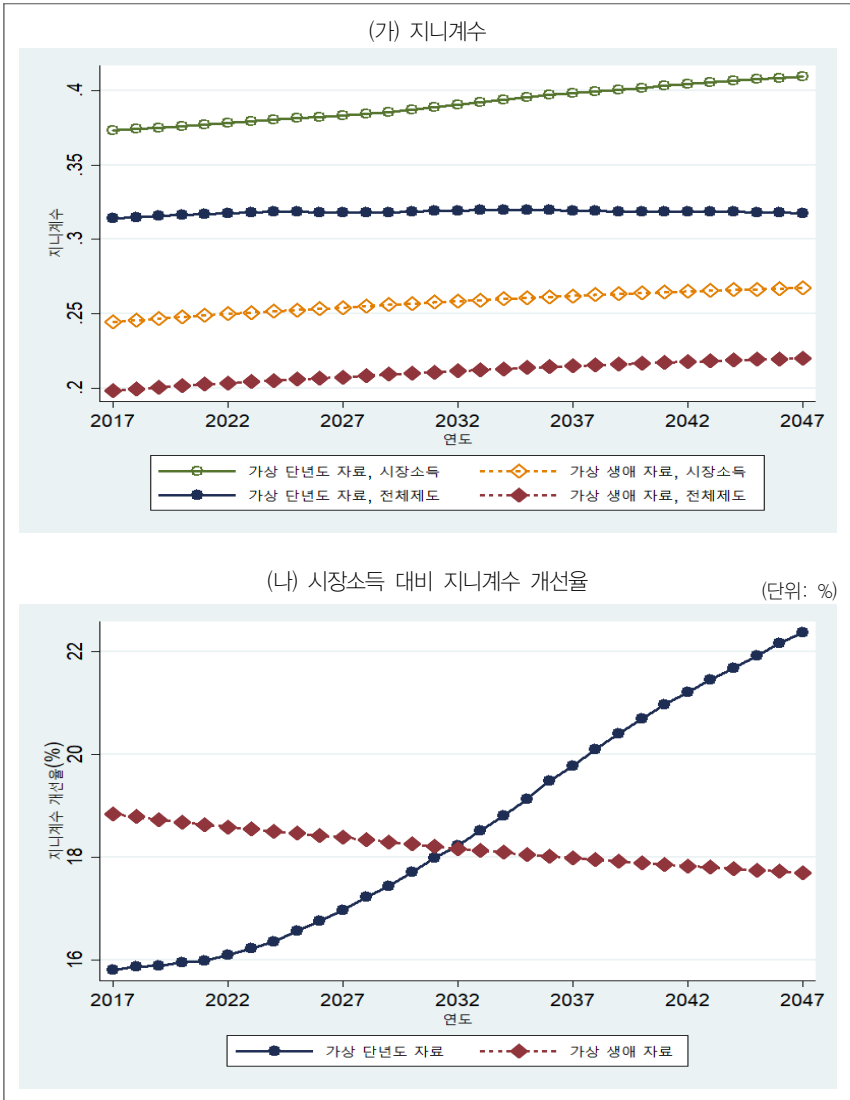


자료: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와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본 연구에서 고려한 6개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단년도 소득 기준 분석과 생애기준 분석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의 축소 또는 확대 여부가 반대로 나타난다. 단년도 기준 분석에서는 전체 제도를 통합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되지만, 생애 기준 분석에서는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제도를 반영할 경우 단년도 기준 지니계수의 개선율은 2017년 15.81%에서 2047년 22.37%로 증가한다. 반면 동일한 제도를 반영하더라도 생애 기준 지니계수의 개선율은 2017년 18.84%에서 2047년 17.70%로 감소한다. 이로 인하여 단년도 기준 전체 제도를 반영한 조정소득의 지니계수의 증가율이 향후 30년간 연평균 0.04% 증가하는 데 그치는 반면, 생애 기준 분석에서는 같은 기간 연평균 0.3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를 나타낸 가장 큰 이유는 기초연금과 의료수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단년도 기준 분석과 생애 기준 분석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과 의료수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제도는 모두 향후 소득재분배 기능이 축소되거나 역진적인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만 단년도 기준 분석보다 생애 기준 분석에서 그 영향이 축소되기 때문에, 단년도 소득 기준 분석에서 전체 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생애 소득 기준에서 나머지 4개 제도가 역전시킬 수준은 아니다. 반면 기초연금과 의료수혜는 단년도 기준 분석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큰 폭으로 강화되지만 생애 기준 분석에서는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단년도 기준 분석과 생애 기준 분석에서 두 제도의 이러한 차이가 전체 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향후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24] 전체 제도를 반영한 조정소득의 지니계수 전망



자료: 제Ⅲ장의 가상패널자료와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V. 결론 및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를 기반으로 수혜-부담 분석 모형을 구축한 뒤 주요 조세재정정책의 장단기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였다. 단기소득재분배 효과는 단기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의미하고, 장기소득재분배 효과는 생애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의미한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에 대한 생애 자료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의 가계의 생애기간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분석에 포함된 재정정책은 정책 대상이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교육수혜, 의료수혜이며, 조세정책으로는 과세기반이 연령에 따라 변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연금과 의료수혜와 같이 고령층이 주요 정책 대상인 제도는 생애 자료 기준 분석과 비교해 단기 횡단면 분석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과대추정되고, 아동수당과 교육수혜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층이 주요 정책 대상인 제도는 단기 횡단면 분석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및 가구구조가 변함에 따라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조세제도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역진적인 기능이 생애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소득과 소비지출 모두 단년도 자료보다 생애 자료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더 집중된 분포를 보이는데, 그 변화의 정도가 시장소득의 분포보다 소비지출의 분포가 더 작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의 경우 평탄화로 인하여 생애주기상의 변화가 소득보다 작다는 점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생애 자료에서 시장소득의 분배지표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지만 소비지출의 분배지표는 상대적으로 개선폭이 작아 소비지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세후소득

의 분배지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조세재정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때 소득재분배 효과는 단기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와 함께 생애 자료를 고려한 분석결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와 같이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을 단기 횡단면 자료만 의존한다면 생애주기상 고령층이 대상인 제도들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소득재분배 효과를 생애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단년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특정 시점마다 인구구조와 가구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 시점마다 소득재분배에 적합한 제도가 다를 수 있다.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고려한 6가지의 제도를 모두 반영하더라도 향후 고령화와 함께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가구구조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가구원 수가 1~2명인 핵가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고려한 6가지의 제도는 노인가구가 아닌 핵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망은 향후 1~2인 가구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장래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소득 취약계층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면 이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제도만으로는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생계급여 등의 제도들이 핵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사회보장정책들이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정들이 도입되었다. 향후에는 가상패널자료

구축 시 이러한 가정들을 보다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가상패널자료 구축의 한계상 6가지의 제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조세재정정책에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연령에 따라 수혜와 부담이 다르고 이에 따른 재분배 효과가 인구구조에 따라 변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향후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제도들을 반영한 연구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8. 9.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및 17개 시도 교육청(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교육통계연보』, 2017.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노인장기 요양보험 통계연보』, 2018. 8.
- 박기백, 「“재정패널”을 이용한 가계 부담 및 혜택 분석: 분위별, 지역별 분포를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3권 제2호, 한국재정학회, 2010, pp. 1~28.
- 박명호·성명재,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소득이동성」,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2』(정해식 총괄, 제2부, 협동연구총서 18-34-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3, pp. 9~92.
- 박명호·정재호,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분석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14-0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보건복지부, 『2020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2020.
- _____,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 보도자료, 2019. 7. 19.
- 성명재, 「소득계층별·연령별 소득 분포분석을 통해 살펴본 소득분배 구조의 현황」, 『재정포럼』, 제82호, 한국조세연구원, 2003, pp. 34~47.
- _____,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소득 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연구보고서 05-01, 한국조세연구원, 2005.
- _____, 『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연구』, 연구보고서 11-03, 한국조세연구원, 2011a. 12.
- _____, 「우리나라 소득이동성 변화추이 분석」, 『재정포럼』, 제177호, 한국조세연구원, 2011b, pp.47~63.

- _____, 「소득이동성의 추이변화와 인구고령화의 영향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4권, 제3호, 한국금융연구원, 2018, pp. 1~58.
- _____, 「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탄성치 퍼즐: 원인분석과 전망」, 『재정학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재정학회, 2020, pp. 63~111.
- 성명재·강신욱·이철인, 『저소득층 소득보전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08-01,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성명재·김현숙,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소득·부동산자산 결합분포 및 관련 세부담 분포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6-02,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성명재·박기백, 「조세,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2008, pp. 63~94.
- 성명재·송헌재·전병목, 『조세·재정모의실험모형: KIPFSIM10 모형의 구축』, 한국조세연구원, 2010. 12.
- 성명재·전병목·전병hil, 『조세·재정모의실험모형: KIPFSIM08 모형의 구축』,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오종현·김우현,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부담 분석 모형 개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2.
- 오종현·김우현·권성오,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 추정』, 연구보고서 19-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12.
- 오종현·윤성주·한종석·신상화·김문정,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모형 개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11.
- 유경준·김서영·홍경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사회적 현물이전의 추정」, 『통계연구』, 제23권 제1호, 2018, pp. 1~22.
- 전영준, 「한국의 세대간 회계 2013~2018」, 『한국경제의 분석』, 제26권 제2호, 2020, pp. 167~234.
-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2019.
- _____,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 _____, 「2017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2018. 3. 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9. 12.

〈통계자료 및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28&lsiSeq=210305>, 검색일자: 2020. 9. 24.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http://ihappy.or.kr/info/intro.php>, 검색일자: 2020. 8. 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차~제11차년도 원시자료, 공표시점: 2009. 12. ~ 2019. 1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1982, 1992, 2002, 2006, 2010,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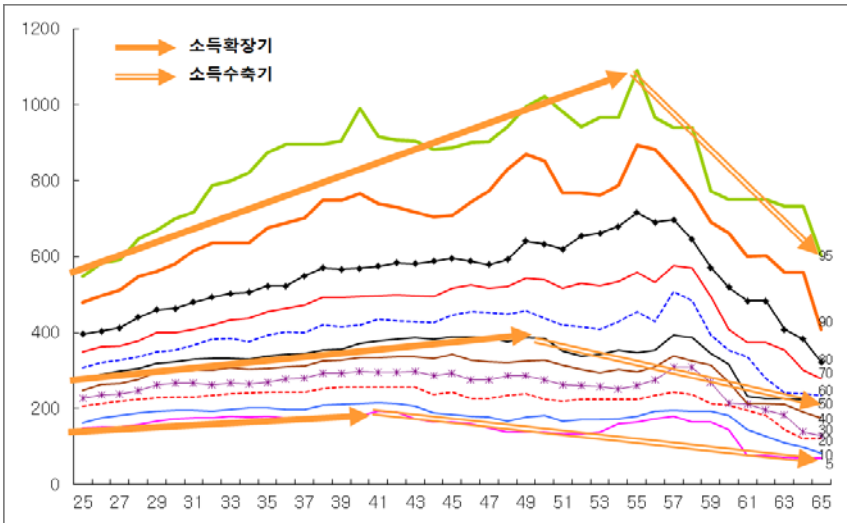
부 록

1.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한 소득·연령 소득계적

성명재(2003; 2005), 박명호·성명재(2019)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별 총소득 경로에 대한 횡단면 분포구조를 추정하였다. 총소득 경로는 연령별 가구총소득의 백분위수(household gross income percentiles by age group)를 연결하여 도출하였다.

[부록 그림 1] 가구주 연령별 가구총소득 백분위수 궤적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19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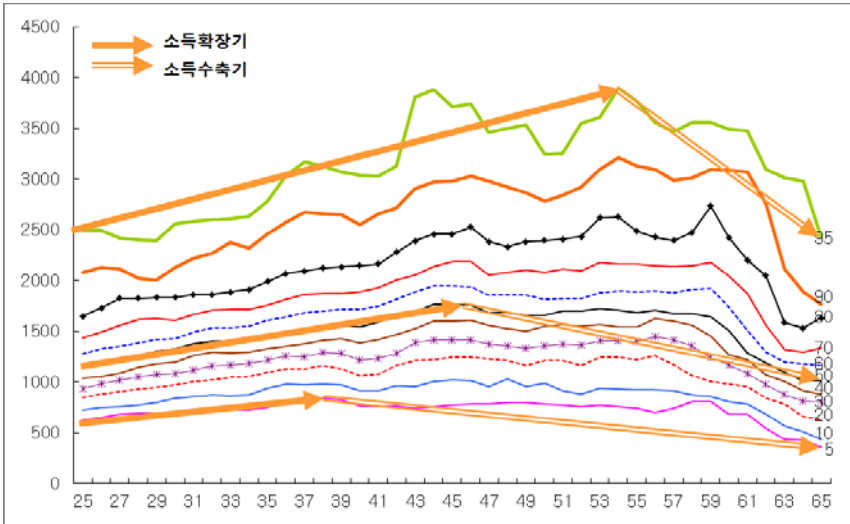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박명호·성명재(2019)의 [그림 2-2-10]을 수정·보완하여 작성

[부록 그림 2] 가구주 연령별 가구총소득 백분위수 궤적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19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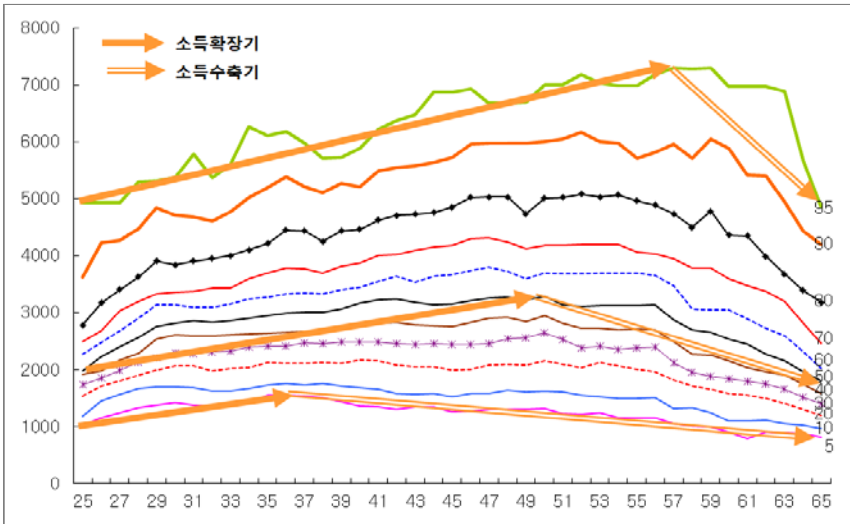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박명호 · 성명재(2019)의 [그림 2-2-11]을 수정 · 보완하여 작성

[부록 그림 3] 가구주 연령별 가구총소득 백분위수 궤적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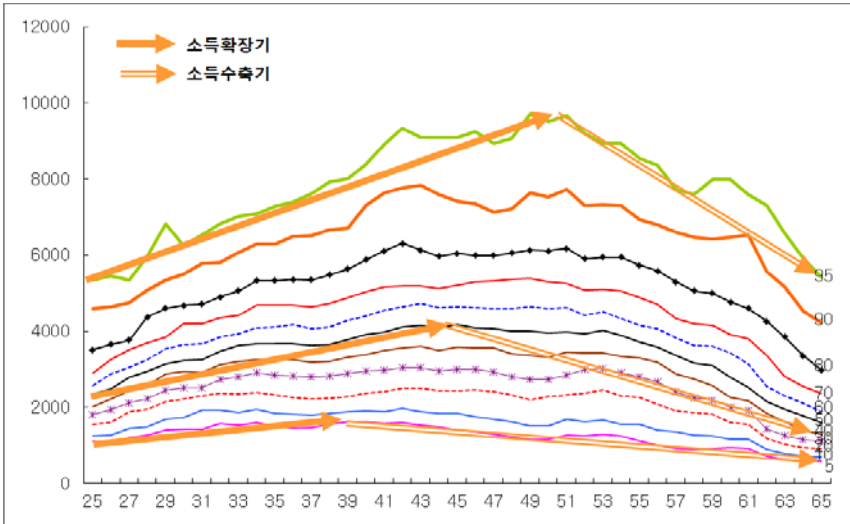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박명호 · 성명재(2019)의 [그림 2-2-12]를 수정 · 보완하여 작성

[부록 그림 4] 가구주 연령별 가구총소득 백분위수 궤적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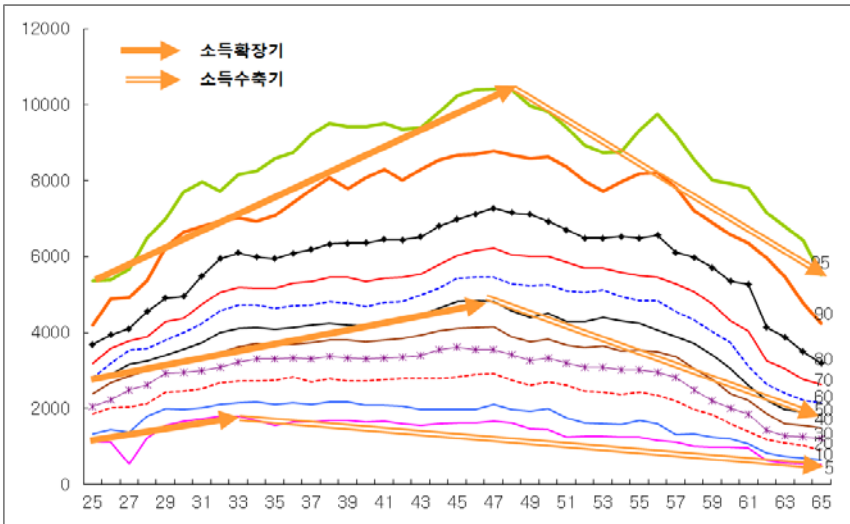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박명호 · 성명재(2019)의 [그림 2-2-13]을 수정 · 보완하여 작성

[부록 그림 5] 가구주 연령별 가구총소득 백분위수 궤적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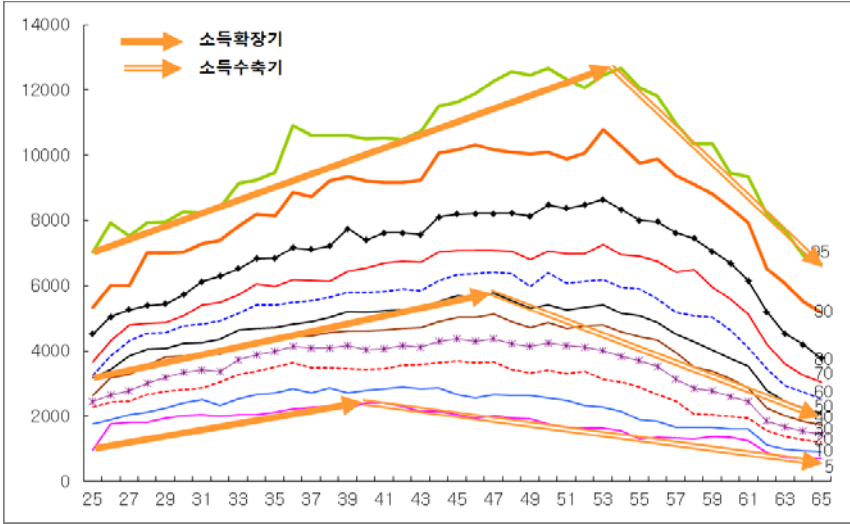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통계청, 「2010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부록 그림 6] 가구주 연령별 가구총소득 백분위수 궤적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2014년)

(단위: 만원)



자료: 박명호 · 성명재(2019)의 [그림 2-2-16]을 수정 · 보완하여 작성

생애소득에 기초한 조세재정정책의 수혜와 부담 추정 연구

오종현 · 신상화 · 성명재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를 기반으로 수혜-부담 분석 모형을 구축한 뒤 주요 조세재정정책의 장단기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였다. 단기소득재분배 효과는 단기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의미하고, 장기소득재분배 효과는 생애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의미한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에 대한 생애 자료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적인 가계의 생애기간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연금과 의료수혜와 같이 고령층이 주요 정책 대상인 제도는 생애 자료 기준 분석과 비교해 단기 횡단면 분석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과대추정되고, 아동수당과 교육수혜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층이 주요 정책 대상인 제도는 단기 횡단면 분석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세제도의 경우 단년도 소득과 비교해 생애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은 약화되는 반면, 부가가치세의 역진적 기능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및 가구구조가 변함에 따라 더 강화될 전망이다.

Tax-Benefit Analysis Based on Lifetime Income

Jonghyeon Oh, Sangwha Shin, Myung Jae Sung

We evaluate the effects of tax and public policies on redistribution of lifetime income compared to that of short term income. In this study, the short term distribution implies one year cross-sectional distribution. When it comes to the lifetime income, there is no real panel data to analyse; therefore, we construct pseudo-panel data.

As a result, the redistribution effects of public transfer mainly targeted to the elderly such as basic pension and healthcare services tend to be overestimated in the short term; on the other hand, those of public transfers mainly targeted to the young such as child allowance and education services tend to be underestimated. As for tax policies, the redistribution effects of a personal income tax would be weakened on the lifetime income compared to those on the short term income, and a value added tax would become more reverse-progressive in the long term. This implies that aging in Korea would strengthen this tendency as time goes on.

■ 저자약력

오종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졸업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신상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미국 The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성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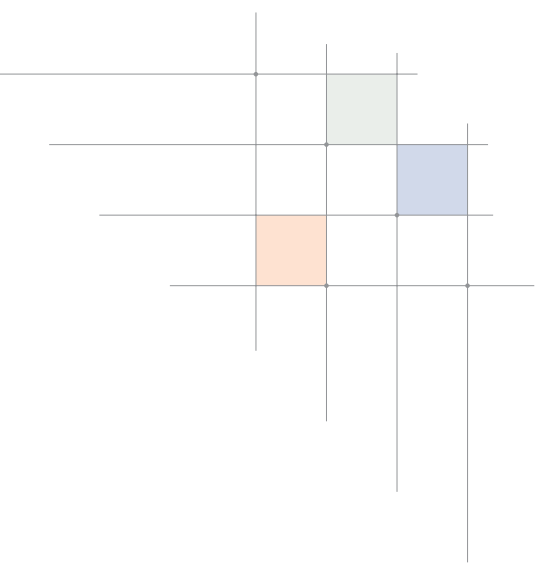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현,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자료 수집 및 정리

김평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
**생애소득에 기초한 조세재정정책의
수혜와 부담 추정 연구**

발행	2020년 12월 31일
저자	오종현 · 신상화 · 성명재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11,000원
조판 및 인쇄	일지사
I S B N	979-11-6655-016-4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代) www.kipf.re.kr



9 791166 550164
ISBN 979-11-6655-016-4